

여름  
3월 충남  
THE CHUNGNAM REVIEW

통권 43호 2008. 7

# Contents



## 권두언

- 00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바라보는 충청인의 마음 김학민

## 특집 I /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미래 비전

- 008 새정부 국정과제로 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의미와 역할 정삼철  
017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의 타당성 강병주



## 특집 II /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구축의 과제와 발전 방안

- 026 국방과학클러스터의 구축 방안 :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이관률  
041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방위산업분야 최상욱  
050 국방과학클러스터의 사례분석 : 미국을 중심으로 이인희

## 충남논단

- 070 충남 관광의 과제와 발전전략 이인배  
098 비도시지역의 개별공장 입지수단에 관한 전문가 의식 분석 오용준



## 해외탐방

- 122 대만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와 사례 고승희



137

## 충남의 도시

- 134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 조영재

## 충남축제탐방

- 142 태안 6쪽마늘 요리축제 이용원



142

## 오피니언

- 150 지역축제의 내실화방안 마련돼야 김용웅

수도권 규제 완화와 사회비용

광역 분권형 국가의 건설

지역균형정책 혼선 방지하지 말아야

- 158 늪에서 대접 받는 7가지 방법 권오덕

- 161 日本에서 느끼는 百濟人의 恨과 금지 변평섭



173

## 충남소식

- 164 도정소식

- 187 연구원소식

- 206 RHRD소식

- 208 RIS소식

- 210 도시재생센터



194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바라보는 충청인의 마음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 김학민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충청권에 던진 가장 큰 공약 중 하나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이었다. 세종시가 행정 기능만으로는 자족 도시가 될 수 없다는 취지를 피력하면서 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천명하였다. 그러한 시기에 후보자가 대덕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하여 포스트-나노 시대, 펠토과학시대에 맞추어 과학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 과학도시는 인구 40만 내지 50만 명 규모로 최첨단 연구를 수행할 기초 및 미래과학 연구 중심의 도시로서 세계적 과학자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학교와 병원 등을 선진 시설로 갖추는 신 개념의 도시 공간이라는 구상을 내 놓았다.

충청권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세종시를 과학과 비즈니스 기능이 융합된 국제규모의 도시로 건설하여 기존의 행정중심도시에서 진화된 개념으로 제시한 자족 도시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충청권 유권자들은 이에 부응하여 이명박 후보자를 지지하였고 이러한 결과와 함께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념으로 확대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기점으로 충북의 오송-오창 지역과 대전시의 대덕연구단지가 상호 연계된 형태로 발전시킨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입지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한발 물어진 입장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결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충청권 국민들은 심각한 우려에 빠져들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한반도대운하 사업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성장 정책이다. 한반도대운하 사업은 일단 중단된 상태이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그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경북과 전북지역까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뛰어드는 양상이고 충청권은 광역지자체 별로 경쟁관계에 있는 모양새다.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충청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판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축소에 앞장선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자가 준 상처가 덧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선거에서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았지만, 이명박 후보자의 충청권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때문에 커다란 지지를 보내 주었는데, 충청



권 최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이렇게 한없이 표류한다면 충청권은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손실된 자존심은 상당 기간 치유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하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정책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기초과학·문화예술·비즈니스를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합한 곳은 어디인가? 대덕연구개발특구보다 과학 인프라가 풍부한 곳이 어디이며, 생명산업분야 집적으로 오송보다 많은 투자를 예상하는 곳은 어디이며, 또 새로운 차원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계획된 곳은 어디인가? 이들 세 곳을 연계한 지역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더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곳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은 이미 자명하게 나와 있는 상태이다.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세계적인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족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국제 수준의 첨단 과학 산업과 비즈니스가 어우러져야 한다는 답을 내놓은 지가 이미 오래 되었다. 이러한 검증된 정책이 뚜렷한 이유 없이 표류하고 있는 동안 지역간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고, 국가의 경쟁력은 모멘텀을 잃어 가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가 충청권이라는 정부의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 만약 실기를 한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만 커 갈 것이다.

충청권 국민들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충청권 국민들을 위한 선거용이거나 민심수습용으로 보지 않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책사업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때문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클러스터 사업 등에서 많은 것을 양보했던 충남 도민들은 세종시가 혁신도시와 산업 클러스터를 융합해 내는 모습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바로 이러한 것을 구현해 내는 것이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이다. 이처럼 명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를 아직까지 정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 충청권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든 상태까지 와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과학과 산업이 융합되는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다. 충청권에는 대전의 과학 기술 및 연구개발 기능과 충남의 천안·아산지역에 분포한 IT산업, 그리고 충북의 청주·청원·진천에 분포한 BT산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들 3개 지역을 합해 벨트를 이루면 면적이나 인구에서 실리콘밸리, 루트 128, 캠브리지테크노폴, 밀라노, 바덴뷔르템베르크 등 광역적인 클러스터로 성공한 지역과 유사한 규모이다. 세종시로부터 반경 40km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빈번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그리고 이를 연계하는 순환도로를 중심으로 대규모 벨트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충청권 국민들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충청권 경제 활성화를 뛰어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충청권 전체를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역동적인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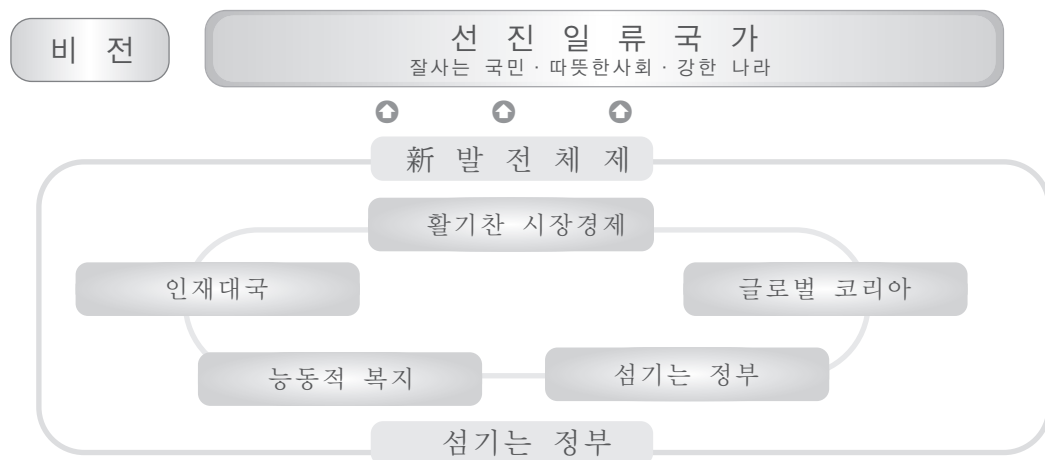
# 새정부 국정과제로 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의미와 역할

정삼철 | 충북개발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장

## 새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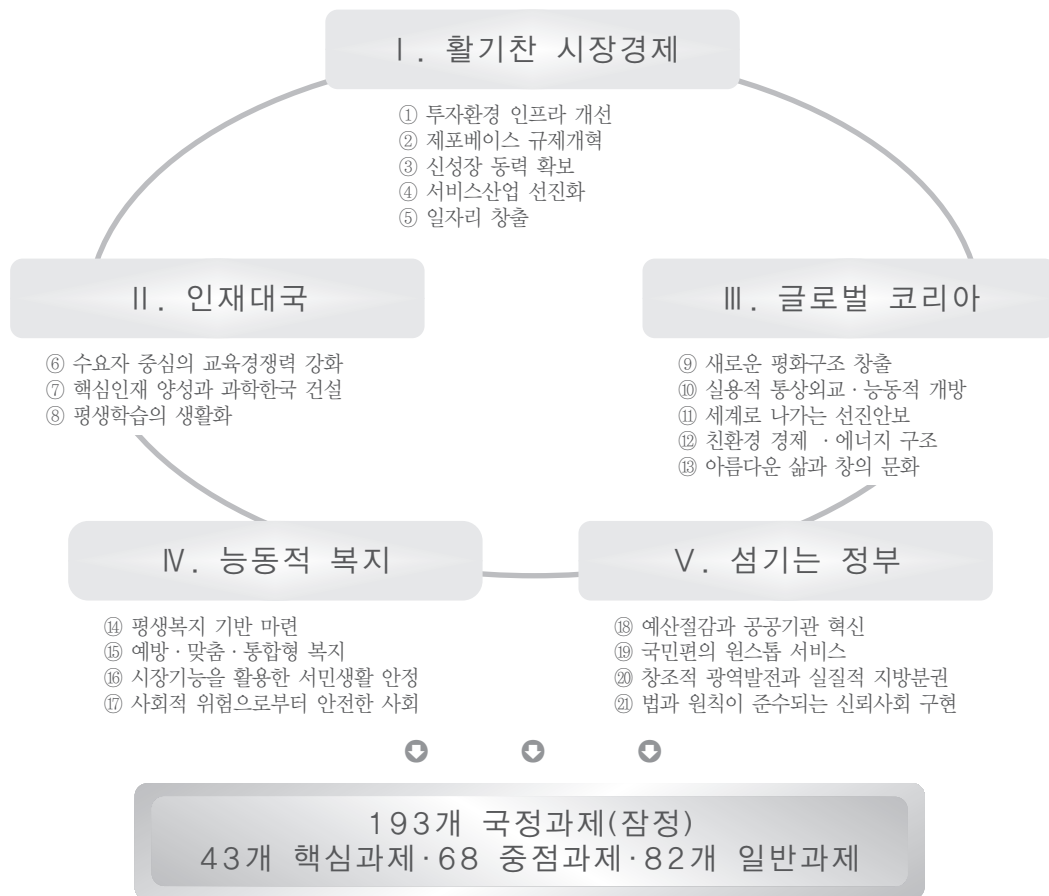
지난 2월 5일 새정부에서는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목표 193개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신정부에서 지시하고 있는 국정과제의 기본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선진일류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잘사는 국민·따뜻한 사회·강한 나라를 추구하는 한편, ‘경제 살리기’,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정신에 따라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전략으로 新발전체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新발전체제를 구현할 수 있는 5대 국정지표를 제시하고, 각각의 지표별로 국정과제를 핵심과제·중점과제·일반과제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새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체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체계



그리고 5대 국정지표별로 분류하고 있는 21대 전략과 193개의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대 국정지표 - 21대 전략 - 193개 국정과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체계상에 있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성에 대한 내용은 새정부의 국정과제 중 첫번째 국정목표인 활기찬 시장경제 항목의 3번째 전략인 ‘신성장 동력 확보’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성 과제를 핵심과제로 분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책적 위상과 중요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추진배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관한 논의는 지난 2007년 11월 1일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과학기술분야 공약제시 차원에서 세종시 + 대덕연 + 오송·오창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건설하여 한국판 실리콘벨리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후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11월 28일 충청지역을 방문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 이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6개의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중 과학비즈니스벨트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다. 2008년 1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사업추진단을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설치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도하여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 설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지원특별법,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설립법 등 관련법령 제정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이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국정 주요과제로 소개하고 있는데, 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인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요, 아시아 기초과학연구 등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은 지역의 입지특성과 기능을 감안하여 충청권을 아우르는 광역충청권의 공약으로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추진배경은 첫째, 기초과학의 역량 강화와 고부가가치의 원천기술 확보 및 R&D사업화로의 선순환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둘째, 과학과 문화예술의 접목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과학적 문화정립 셋째, 기초기술·응용기술·개발기술 등 과학 및 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추진배경의 내용을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 과학 : 지식자본·원천기술
  - 아시아기초과학연구소 설립
  - 세계정상의 석학유치
  - 세계최고의 젊은이 과학자 양성
  - 최고의 과학지식, 원천기술 창출

- 비즈니스 : 상품화·산업화
  - 지식자본과 원천기술의 기업에 확산
  - 창조적 상품과 신(문화)산업 창출
  -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 일자리 창출

세계 1위만이 경쟁력이 있다

- 국제 : 다문화·네트워크
  - 세계적인 과학자 네트워크
  - 국제적인 과학기술 연구교육
  - 최고의 과학지식
  - 기술이전, 비즈니스 촉진

- 도시·벨트 : 지속가능·인프라
  - 기업의 투자 유인가능 인프라
  - 과학기술의 소비시장
  - 과학과 예술의 융합 환경 구축
  - 지속가능한 과학경제 수도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필요성

새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국정과제보고서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비한 과학 선진국으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21세기 지식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적인 첨단연구시설 확보와 함께 과학과 인문학·예술이 융합하는 창조적 연구공간 조성 및 세계적 과학두뇌 유치전략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는 새로운 과학지식의 창출과 창조과학의 리더십 확보를 통해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요약해 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은 기존 선진국들의 과학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과학기술의 Catch-up 전략에서 벗어나 이제부터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Follow-me 전략을 추구해 나갈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본개념과 의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개념은 보다 창조적인 환경에서 세계정상의 과학이 연구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새로운 지식자본과 원천기술이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과학창조의 거점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공간적으로는 지역적 인접성과 광역교통인프라, 직접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좌표를 가지면서 지역간 연계, 결합, 확장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기능적 측면에서는 기초과학, 연구개발, 산업화에 이르는 기능적 시스템적 연계와 결합 그리고 확장의 순환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계적인 두뇌가 모일 수 있는 최고의 과학연구 환경인 세계적인 기초과학연구원을 조성하여 과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기초과학·비즈니스·문화예술이 상호 결합되어 새로운 과학 ‘한류’의 블루오션을 창출하고 나아가 미래의 먹줄거리를 만드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의 위상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과학·비즈니스·문화예술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기능벨트이자 기초과학연구단지·응용과학연구단지·과학의 사업화·산업화 등이 연계되는 지역벨트이며, 과학·의료·인문·사회가 융합되는 통합벨트를 포괄하는 복합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창조적 과학연구의 세계적인 메카이자 창조적 과학연구결과의 실용화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한국판 실리콘벨리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기본구상

새정부의 국정과제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기본구상 내용이 담겨져 있다. 본 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구상내용을 소개하면 연구소, 인력 등 요건을 갖춘 지역을 과학벨트로 조성하기 위하여 첫째, 지역별 기초조사를 추진하고 과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하고, 둘째, 기초과학 및 의료·생명과학 발전의 기반이 될 세계 최고의 시설과 인력을 갖춘 “(가칭)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는 학문 분야별 세계 정상급 과학자 100명 내외로 평의회(Council)를 구성하여 연구의 기획·평가에 대한 세계화 수준을 유지하고, 세계정상급 연구자를 팀리더로 선발하여 융합 연구 분야에 있어서 세계 중심위치를 견지할 수 있는 ‘기초연구센터’, ‘미래장비센터’, ‘신물질센터’, ‘연구병원’ 등을 설치하고, 차세대 기초과학 연구기반시설인 가속기 설치로<sup>1)</sup> 세계적인 연구원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한다는 원대한 전략구상을 담고 있다.

셋째, 세계적 과학두뇌와 다국적 기업의 교류 촉진 및 과학기술의 지식세계화 축으로서 “세계지식교류센터”의 설치를 검토하고 여기에서는 국제 지식축제·컨퍼런스 및 저개발국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넷째, 과학·인문사회·문화예술 등 학제간 융합연구를 통해 창조적 지식생산·교류를 지원하는 “지식융합센터” 설치를 통해 과학과 문화예술이 교류 및 융합할 수 있도록 지식융합심포지움 운영 및 과학예술센터, 과학박물관 등 문화인프라를 조성하는 전략도 포함되어 있다.

다섯째, 멘토링, 기술평가, 글로벌 마케팅, 창업지원 등 과학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과학사업화단”을 설립하여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섀빙기업 및 기술의 발굴·유치·투자와 U-korea 사업의 추진 등 과학기술화사업을 추진하고, 특허와 초기기업 투자를 위한 발명자본(Invention Capital)을 도입한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문화예술 등 창조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외국인을 위한 주택·학교 등을 건설하고, 의료서비스 및 종합행정서비스 지원과 영어상용화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세종시와 대덕, 오송·오창을 포함하는 충청광역권 지역에 세계적 수준의 창조적 연구공간인 (가칭)아시아기초과학연구

1) 가속기는 중이온 가속기(세계5대 시설)를 검토하고 있으며, 획기적인 무통·무혈암치료시설로서 방사성 동위원소빔 생산 및 신물질 개발연구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 그리고 방사광 가속기는 신소재 개발, 재료·화학·의학 등 응용과학과 물성, 원자·분자물리, 화학, 생물학 등 기초과학에도 활용할 수 있다.

원을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계지식교류센터”, “지식융합센터” 등과 같은 연구시설을 함께 설치하고, 과학사업화단을 설립 운영하는 한편, 창조적 연구환경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형성하여 한국판 실리콘벨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내용이자 기본 구상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핵심내용 및 콘텐츠

핵심사업	사업내용 및 정책프로그램
(가칭)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정상급 과학자 100명내외의 평의회 구성운영</li> <li>- 세계정상급 연구자를 팀 리더로 선발</li> <li>- ‘기초연구센터’, ‘미래장비센터’, ‘신물질센터’, ‘연구병원’ 등을 설치</li> <li>- 차세대 기초과학연구시설로서 중이온가속기 설치</li> </ul>
세계지식교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지식축제·컨퍼런스 개최</li> <li>- 저개발국 지원프로그램 운영</li> </ul>
지식융합센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융합심포지움 운영</li> <li>- 과학예술센터·과학박물관 등 문화인프라 조성</li> </ul>
과학사업화단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유치 및 과학기술화사업 추진</li> <li>- 발명자본 도입</li> </ul>
창조적 연구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주택 학교 건설</li> <li>- 의료서비스·종합행정서비스 제공 및 영어상용화 도입</li> </ul>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추진시기와 방법

새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추진 시기는 2008년 초부터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조기에 착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12년까지 차세대 가속기 시운전이 가능토록 제반 설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2017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중장기적인 미래전략의 기초를 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속에 국제과학비즈니스사업추진단을 설치 운영하고, 관련부처 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결합하는 조직체계를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기반 마련으로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지원특별법”과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설립법” 등 2개 법안을 제정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법률 제도적 장치를 공고히 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역할 기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정부에서 새롭게 그리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5대 국정목표의 하나인 활기찬 시장경제 달성을 위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적은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목표로 과학성과의 산업화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향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담당하게 될 핵심역할은 첫째, 국가발전전략 측면에 있어서 신성장 동력 확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지식자본과 원천기술 확보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비즈니스 측면에서 있어서 지식자본과 원천기술의 실용화와 창조적 상품과 신산업 창출의 핵심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넷째, 국제적 측면에 있어서 과학기술교류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적 과학지식교류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섯째, 도시문화 측면에 있어서 창조적 지식융합기술의 끊임없는 창출과 함께 지속발전 가능한 과학경제 인프라 기반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지역발전체제 구축 측면에 있어서 창조적 광역발전의 핵심거점지대로서 충청권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사업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새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국가적 측면에 있어서나 지역측면에 있어서 매우 중차대한 국정과제이자 충청광역권의 시급한 지역현안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에서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은 물론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의 조기추진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국가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국정핵심 과제이자 글로벌 경쟁시대를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전략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사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가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여지도 없다. 이에 본 사업개발 구상을 보다 구체화하여 조기에 확정

제시함으로써 현재 사업표류로 인한 정책혼란과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고 당초에 의도하고 기획한대로 충청광역권에 조성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자 조기성공과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기대효과

신정부에서 당초 기획한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전방위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따른 파급효과는 크게 경제적 측면의 파급효과와 사회·문화적 측면의 파급효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측면에 있어서는 총 6조 7천억원의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 측면에 있어서는 총 2조 4천억원의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고, 고용유발 측면에 있어서는 13만 7천여명의 파급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기술수출효과를 포함하여 연간 1조 4백억원에 달하는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 있어서는 수도권 인구분산과 해외인구 유입 등을 통해 약 15만명의 인구유입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통한 과학선진화로 세계적 과학두뇌를 유치해 국가적 활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신지식의 창출, 노벨상 수상, 원소주기율표상 대한민국 이름을 새길 코리아늄(Koreanium) 발견 등 과학선진 일류국가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해 지식기반사회를 창조적으로 선도함으로써 세계적 과학강국의 건설을 앞당기고 국민들에게는 국가적 자긍심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효과를 함께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광역충청권의 성공적 유치가 우선되어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기존의 입지특성과 잠재기능을 극대화하고 상호 연계가 용이한 지역을 연계하는 신산업기술 벨트이자 과학클러스터지대로서 광역충청권을 대상으로 하는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정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이 표류되면서 비판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정부의 어정쩡한 입장으로 지역간 유치경쟁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으며, 당초계획과는 달리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지역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개발계획 내용의 공개와 함께 향후 추진일정과 지원내용 등을 조기에 명료화하여 정책표류로 인한 불필요한 지역간 경쟁과 혼선을 예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광역충청권의 입장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협력적 유대강화 및 유치를 위한 전략적 공조가 우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결정도 없는 상황 속에서 광역충청권의 공조가 깨지면 자칫 경쟁지역에 사업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광역충청권 내의 지역간 기능분담과 역할은 그 다음에 논할 일이다.

### 참고문헌

1. 박상철, 2008, "충청권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의 타당성", 충청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구축 세미나 자료, 충청권 공동연구단.
2. 송두범·강영주, 200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내용 및 성공적 구축과제. 충남리포트5호 충남발전연구원
3.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8, 제17대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서 자료.
4.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8,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1 : 성공 그리고 나눔 ;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핵심정책과제.
5.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8,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2 : 성공 그리고 나눔 ; 이명박 정부의 태동.
6. 최병호, 2008, "중이온가속기 시설의 세계적 사례", 충청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구축 세미나 자료, 충청권 공동연구단.
7. 한나라당, 2008, 제18대 총선 지역공약집.
8. 청와대 홈페이지(<http://president.go.kr/kr/policy/tasks/dreamcity.php>).
9. 기타 각종 언론 보도자료.



#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의 타당성

강병주 | 한남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필요성과 방향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소득 1만 불 시대를 보냈다.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소득의 정체는 크게 보면 미약한 과학기술 수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UR협약 이후에 세계는 자신의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확보능력이 없는 국가나 지역은 세계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 집약의 일본과 노동집약의 중국이라는 환경 속에서 아직 기술 집약의 일본을 추월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블루오션 전략 대안이 바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부 반도체 분야 및 디스플레이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핵심기술 수준이 저하되어 있어 수출이 많을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식기반시대에는 핵심기술이 없으면 세계 최고수준의 상품을 만들 수 없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R&D에서 틈새시장을 찾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초과학분야의 육성/응용과 결합, 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 차별적 시장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러한 필요에서 출발된다고 하겠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는 세계 정상급의 과학이 연구되고 연구과정에서 나오는 새로운 지식 자본과 원천기술이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국제 네트워크를 가진 광역 도시권을 말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기초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적인 석학과 과학인재들이 모여 연구하고 생활하는 국제적 science metropolitan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는 과학이 중심이 되는 아이템이지만 또 다른 요소는 예술·문화적 요소이다. 과학과 예술이 만나서 새로운 장르가 탄생되고 그로부터 새로운 문화와 산업이 만들어지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모인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공유하면서 과학과 문화를 융합한 신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는 신개념의 지역발전 전략이 바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인 것이다. 따라서 국제과학기업벨트의 조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화된 도시로 개발해야 하며, 새로운 창조를 위해 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연구 문화가 주류를 이루는 도시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주요 사업내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주요사업은 아시아 기초과학연구소, 과학비즈니스네트워크 구축, 중부권 지식산업벨트 구축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아시아 기초과학연구소는 세계 정상급 연구자로 구성된 세계적인 연구소로 미래 원천 기술 및 지식을 확보하고 세계 정상급의 후속 기초과학 연구세대를 육성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소에는 핵융합 연구병원, 신물질 연구개발센터, 미래장비개발센터, 프론티어 기초연구센터, 과학사업화 전략본부, 글로벌 플랫폼 구축과 같은 6개의 세부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융합 연구병원은 세계 최첨단 신물질개발연구 기술을 기반으로 중이온 암치료, 의료용 가속기 치료시설을 통한 치료 및 건강복지센터로 운영될 것이다. 신물질 연구개발센터는 에너지, 환경, 조건 등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연구 분야로 하면서 신약, 반도체, 고분자, 재료, 생체재료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통합적 대규모 신물질개발 연구 기반 시설이 될 것이다.

미래장비개발센터는 나노센서, 나노가공, 나노 트랜지스터 등 나노산업장비 개발, 의료전용 가속기 등 산업, 의학, 신물질 개발 및 이용에 필요한 미래장비를 개발하는 기관이다. 프론티어 기초연구센터는 대한민국 BT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학제적 융합연구센터로서 모든 응용 및 개발 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아이디어 बैं크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과학사업화 전략본부는 WTO/FTA 체제하에서 무형자산인 기술, 특히 원천기술의 확보·보호 및 확산·활용의 촉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법률, 회계, 전략 전문지식서비스의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과학사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글로벌 플랫폼은 정기적인 컨퍼런스, 워크숍, 국제지식축제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저개발국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과학기반 국가발전의 이론적 교두보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다음으로 과학비즈니스네트워크는 기초과학지식의 수렴과 확산, 상품화 과정을 조성하는 기구의 필요성에서 구축되며, 연구소, 대학, 기업의 지식교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이 네트워크 구축의 주된 목적이다. 과학비즈니스네트워크의 주요 업무는 과학과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인재풀 구성과 국내외 연계 결합 구조를 만드는 실천적 기구의 조성이다. 동 네트워크는 국내에서는 과학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와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해외에서는 러시아,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 지식자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Asia Basic Science Institute의 자문기관으로 지식의 자본화, 상품화, 기업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중부권 지식산업벨트는 새로 건설되는 세종시의 과학단지과 인근의 기존 과학단지를 연계시켜 지역적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지역기능벨트으로써 국가전체의 산업기능과 중부권의 산업기능을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중부권 지식산업벨트의 주요사업은 새로 건설되는 세종과학연구단지를 기존의 대덕연구단지 및 오송/오창단지와 연계하는 협의체를 구성, 벨트 내 과학단지 및 회원 도시 간 협력체계(벨트화사업단) 확립, 산학연 교류증진을 위한 협력단체 구성 등이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의 타당성 기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의 타당성 기준은 벨트의 성격규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에서의 중심 개념은 국제, 과학, 비즈니스, 교육 및 생활여건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과학이 중심개념(Key Concept)이 되고 과학과 기술

의 육성·발전이 비즈니스화 됨으로써 과학이 국가발전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는 정보·통신의 발전에 의해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는바, 국제화된 쾌적한 공간구축이 기본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구축의 타당성은 과학, 비즈니스, 국제화, 문화 및 생활여건과 관련된 요인들로 찾아낼 수 있다.

먼저 과학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과학도시가 입지할 대상지역은 풍부한 과학관련 소재인 우수한 이공계대학, 연구소 및 R&D업체, 과학지원체계, 첨단산업단지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비즈니스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세계 및 국내 각 지역으로 부터의 용이한 접근성, 비즈니스하기에 적절한 국토·지정학적 여건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국제화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새로 건설될 도시를 국제적인 위상을 지닌 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생활여건 및 문화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과학도시에 거주할 과학자 및 가족들에게 양호한 주거 및 생활여건 조성, 풍부한 역사·문화적 유산 및 관광자원 보유 등을 들 수 있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의 타당성 기준에서의 충청권 지역

### 1. 풍부한 과학관련 소재 및 관련 산업클러스터의 분포

과학연구개발 기관 측면에서 충청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과학연구개발 기업체의 경우 2000년 519개에서 2007년 1,099개로 매년 22.2%의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제화시대, 지식기반경제시대에 있어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로서의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두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과학연구개발 인력 측면에서 충청지역은 공공연구기관이 2000년 40.8%, 2007년 42.0%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고, 대학이 2000년 15.2%, 2007년 14.2%, 그리고 국제산업비즈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인력은 2000년 10.4%, 2007년 11.5%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에 따른 과학연구개발과 관련한 공공연구기관의 집중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앞으로 충청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 허브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전망할 수 있다.

대전·충청지역이 우리나라 경제와 미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대의 잠재력은 이 지역이

전국 최대의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집적지이기 때문이다. 대전·충청지역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그리고 대덕테크노밸리 등 3개의 연구개발 및 생산기능 산업단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지역은 이러한 3개의 산업/연구단지 이외에도 21개의 우수연구센터(ERC/SRC), 22개의 지역혁신센터(RIC), 8개의 정보통신 연구센터 등이 결집되어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1973년 840만평의 부지위에 국책연구소와 기업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단지를 출범시켜 R&D중심의 기능을 수행하여 오다가 2001년부터 대덕테크노밸리가 개발되면서 생산기능이 추가되었다. 현재 대덕특구에는 2,130만평의 부지위에 74개의 연구기관, 13개의 공공기관, 13개의 지원기관, 6개의 교육기관, 711개소의 벤처·창업보육기업 등 총 817개의 기관이 입주하여 있다. 대덕특구의 주요 입주 업종은 전자, 통신, 생명과학, 원자력, 우주항공, 화학, 국방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충북 청원군 외강면 일대에 140만평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대덕특구와는 42km, 오창과학산업단지와는 15km 거리에 있다. 현재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5개의 보건·의료 분야 국책기관과 동 분야 업체 및 국내의 민간연구소, 창업보육센터 등이 입주해 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 대상업종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생명과학산업과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등이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충북 청원군, 오창, 옥산 일원에 280만평의 부지위에 충북테크노파크, 생명공학연구소, 기초과학지원연구소 등이 입주해 있다.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입주대상 업종은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ME), 메카트로닉스(MT) 등이며, 이미 113개의 기업체를 유치하여 100% 분양이 완료되었다.

충청권 과학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대덕테크노밸리는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를 통한 과학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대덕테크노밸리는 국가적 측면에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발전기반 정립과 중부권 발전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한편 지역적 측면에서는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과 대전광역시 3대 산업육성을 위한 여건 조성과 첨단기술 실용화단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는 첨단산업발전의 거점 조성, 지역 사업구조 개선의 촉매, 과학기술 산업화(상업화)의 전진기지 구축,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벤처산업의 적극적 수용여건 마련과 벤처타운 조성을 위한 산업용지 확보라는 역할수행이 기대된다.



## 2. 비즈니스에 적절한 여건구비

충청권은 서해안 개발의 연계축으로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내륙중심부는 서울 등 수도권내 거대 도시축과 정부축, 호남축을 잇는 도시개발 및 간선교통축의 중앙에 입지하여 도시개발 및 교통·물류의 중심축으로 비즈니스에 적절한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충청권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서해안의 관문항을 보유하고 있어 환황해경제권내 교류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입지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충청권내 관문항 기능을 수행할 군산신항, 보령항, 아산항은 중국의 황해연안 관문항인 대련항, 청도항과는 300km정도에 불과하여 입지적 차원의 높은 교류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충청권은 지리적 입지특성으로 인해 교통·물류의 중심축에 있으며, 화물 터미널은 청원·연기지역의 증부권 내륙화물기지가 있으며, 그밖에 대전에 대전공용화물터미널, 증부대전화물터미널, 청주에 청주화물터미널, 천안에 증부천안화물터미널 등 5개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환황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서해안이 새로운 국제생산 및 교역중심지로 등장함에 따라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는 국가 및 지역발전의 주요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권내 관문항 주변에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대전-청주광역권, 아산만광역권, 군산-장항광역권 등 21세기 국가발전의 선도적 거점형성이 기대되고 있어 대중국교역의 관문항 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해안의 중심관문기능은 현재 인천항이 담당하고 있으나 항만수용능력의 한계와 항만주변 지역개발의 제약으로 인하여 타지역과의 기능분담이 요구되고 있는바, 아산항, 보령항, 군산신항의 대중국 관문항으로서의 기능증대가 예상된다.

충청권에는 우리나라에서 용수공급규모가 가장 큰 충주댐과 함께 금강수역의 대청댐 등 2개의 다목적댐이 있으며, 2대 다목적댐의 연간용수공급량은 전국의 50.7%를 차지하고 있다.

금강유역은 북으로 차령산맥을 끼고 있으면서 한강유역과 접해있고, 동으로는 소백산맥이 낙동강유역과 분수계를 이루고 있으며, 남으로는 섬진강과 만경강유역과 접하고, 북서로는 안성천, 삽교천유역과 접하고 있다. 하지만, 충청권은 이렇게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한 국가 및 지역발전 전략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 3. 구축된 국제화 네트워크

충청권은 국제 네트워크를 위한 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다. 충청지역은 우리나라 중부권의 국제 관문지역으로서 청주국제공항을 비롯한 아산·평택항, 대산항, 군산신항 등이 인접해 있다. 청주공항은 충청권의 중심지인 행정도시로부터 30Km 거리에 입지하고 있으며, 중부고속도로 오창I.C와 정부고속도로 청원I.C와 신설되는 남측 고속화도로를 이용하여 접근이 매우 용이한 지역이다. 또한 인천공항은 충청권으로부터 150Km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2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당진I.C 및 대전~당진고속국도를 이용하여 접근이 용이하다.

한편, 충청권에는 국제화와 국제네트워크를 지향하는 많은 단체와 기구들이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다. 2030년 완공 예정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그 밖에도 충청권 내에는 국제화를 지향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아산탕정 크리스탈밸리 등 첨단산업단지들이 입지해 있으며, 진천-음성 혁신도시 등 첨단지식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또한 대전시에는 세계과학도시연합(WTA: World Technopolis Association) 사무국, UNESCO-WTA 과학도시연구센터 등 첨단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 기구들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세계과학도시연합(WTA)은 지방화와 세계화에 따른 자구적 지역 발전전략 수립의 중요성 및 지구적 협조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식기반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지역 개발의 중요성에 적극 대처하고 협조하기 위해 조직된 기구이다. WTA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도시의 번영을 추구하는데 관심이 있는 도시지역들이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1998년 9월 우리나라 대전광역시에서 11개국 23개 회원도시로 출범한 다자간 국제협력기구이다.

또한, 2009년에는 제60차 세계항공우주총회가 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그 외에도 EXPO 개최도시 시장회의, WTA 테크노마트, 국방마트, 사이언스 페스티벌, 각종 세미나, 전시회, 학회 등 연간 1,300여 회에 이르는 회의 및 이벤트 등이 열리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어 앞으로 충청권을 중심으로 국제교류 및 네트워크를 위한 회의 및 이벤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 4. 생활여건 및 문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생활여건 구비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충청권은 전국의 타 시·도와 비교하여 주거환경, 의료 및 교육시설, 공원 및 녹지면적 등이 풍부하여 쾌적하며, 양호한 주거 및 생활환경 여건을 갖추고 있다.

먼저, 충청권 주택 보급율은 전국의 타 시·도와 비교해서 매우 양호한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다. 2007년 말, 대전의 주택 보급률은 110%를 넘어섰으며, 충청남도는 129%, 충청북도는 120%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충청권의 의료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말 기준, 대전시는 종합병원 8개,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을 합친 병원 20개, 일반 의원이 926개, 그 외 치과 및 한방병원 등을 합쳐 총 1,687개의 의료시설이 분포되어 있다.

충청권의 대학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말 현재, 충청권에는 총 29개의 대학이 설립되어 있다. 대전시에는 KAIST, 정보통신대학교, 충남대, 한남대 등 8개의 종합대학에 693개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충청남도는 13개의 대학에 935개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충청북도는 8개의 대학에 602개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충청권에 소재해 있는 지역 대학들에 대한 신입생 수요증가가 예상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권 지역으로 대학이전 및 분교설치가 증가되어 충청권 지역대학의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행정도시 건설에 기인하는 충청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에 대비하여 충청권 대학들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프로젝트(NURI)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면서 대학 간 차별화, 전문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충청권은 수도권 다음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며, 아울러 고급인력양성의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가족 단위의 생활문화공간시설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풍요롭게 만든다. 그런 측면에서 충청권은 양호한 주거환경과 더불어 다양한 생활문화공간이 주변에 다수 존재하고 있다. 대전시에는 최근에 개장된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대전 시립미술관, 아주미술관, 이응노화백전시관 등 다양한 문화공간이 개장되어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충청북도는 청주 고인쇄박물관, 영동 난계국악박물관, 윤보의 집 등 역사문화 중심의 다양한 박물관이 있으며, 충청남도 역시 백제문화권 중심지답게, 국립공주박

물관, 국립부여박물관, 백제역사문화관, 계룡산역사박물관 등이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충청권에는 공주·부여의 백제문화권, 청주 고인쇄 문화권, 금강문화권, 증원문화권이 있으며, 충청권 지역에는 국가지정문화재 341점, 지방문화재 773점, 기타 342점으로 전국의 16.8%인 총 1,456점이 분포되어 있다.

충청권의 대표 문화자원으로는 지정 문화재인 전통 민속마을로 아산 외암마을, 청풍문화재단지, 계룡산 도예촌, 추사 고택, 한산 모시마을, 맹사성 고택, 송현서원, 한용운선생 생가지, 이상재선생 생가 및 김좌진장군 생가지 등이 있다. 이밖에도 탄금대, 충렬사, 국립공주박물관, 해미읍성 및 정림사지 5층 석탑 등이 있다.

한편 관광자원 면에서 충청권 내에는 자연공원, 관광지, 관광특구, 관광농원, 온천 및 자연휴양림 등 자연경관자원이 풍부하고, 국립공원으로는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계룡산 및 태안해안 등 5대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도립공원 3개소와 군립공원 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 참고문헌

1. 강병주, 2002, "과학연구단지의 발전모델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 14권 제 1호.
2. ———, 2004, 기업지원기관을 위한 지역혁신체제(RIS) 구축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 39권 제 7호.
3. 김태현, 2006,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상용화 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4. 건설교통부,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시안」
5. 과학기술부, 2006,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계획」
6. 과학기술부, 2007, 「지방과학기술연감」
7.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7,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DB」
8. 국토연구원, 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
9. 대덕테크노밸리, 2006, 「대덕테크노밸리조성사업-개발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10. 대전광역시, 「대전통계연보」, 각 년도.
11.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 2006, 「충청권 공동발전방안 연구」
12. 충청권 전략산업기획단, 2007, 「충청권 IT산업 클러스터 구축방안」
13.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각 년도.
14. 충청북도, 2006, 「오송신도시 기본계획」
15. Porter, M. E, 1998, "Clusters and the New Economics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16. ———, 2000, "Location, competi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 Local Clusters in a Global Economy",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Vol.14, No.1.

# 국방과학클러스터의 구축방안: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이관률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머리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냉전이 종식된 이후 방위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덜 강조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방비가 감축되었고, 방위산업을 민수산업화하는 전환(conversion)정책이 광범위하게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외국들은 군산복합체가 국가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테러가 세계화됨에 따라 대테러에 대한 방위산업 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유럽제국에서 국방비의 예산 규모는<sup>1)</sup>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Ministry of Defence, 2005a).

대부분의 선진외국에서 방위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방위산업이 국가 및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클러스터의 대표적 사례인 실리콘밸리의 성장은 방위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국방관련 연구개발비는 방위산업을 활성화시키게 되고, 방위산업은 지역발전에 있어서 경제효과와 고용창출의 두 가지 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방위산업에 의한 경제효과는 연간 192억 달러이고, 고용창출효과는 35,400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John M. Ward, 2007).

우리나라의 경우도 1970년대 이후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러나 무기 공급과 개발이 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위산업을 독자적으로 육성하는데 한계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도 국방기술의 자립화를 위해 국방기술

1) 미국의 경우 2003~2005년간 연구개발비는 65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Ministry of Defence, 2005a).



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고, 이를 통해 방위산업을 육성할 장기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방위산업이 지역 및 국가발전에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 방위산업의 개념과 정책기조

### 1. 방위산업의 개념과 특성

일반적으로 방위산업(defense industry)<sup>2)</sup>은 국가방위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될 수 있다(정갑영, 2000). 따라서 방위산업은 국가를 방위하는 데 필요한 무기·장비뿐만 아니라, 군인의 의류나 식량을 공급하는 소비재 산업도 포함된다. 이러한 방위산업은 산업의 한 부문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항공산업, 전자산업, 조선산업과 같은 산업의 여러 부문에 걸쳐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제품을 생산하기까지 많은 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범위를 정의하기 어렵다.

이러한 방위산업은 ① 수요독점적 구조, ② 비협조적 군비경쟁과 과잉생산설비, ③ 대규모 전후방연관효과, ④ 기술파급효과에 의한 외부경제성이라는 네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정갑영, 2000). 첫째, 방위산업은 국방서비스가 가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수요는 국가가 모두 독점하는 특성을 가진다. 둘째, 방위산업은 적대국과의 관계에 의해 확대 혹은 축소되기 때문에 ‘죄수의 딜레마 모형’과 같이 상호비협조적인 군비경쟁을 하게 된다. 그 결과 방위산업은 적대국과 비협조적 군비경쟁을 하게 되고, 결국 과잉생산설비를 갖는 특징을 갖는다. 셋째, 방위산업은 산업의 전후방연관효과가 크고 기술의 파급효과도 크게 나타나는 특성을 갖는다. 예컨대 28대 산업중분류 중에서 방위산업은 섬유가죽제품, 화학제품, 제1차 금속, 일반기계, 정밀기기, 전기전자기기, 수송기기 및 기타제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넷째, 방위산업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되고, 개발된 방위기술은 일정한 시차를 거쳐 민수산업으로

2) 방위산업(defense industry)은 군수산업, 국방산업 등으로 지칭되는데, 이는 이음동의어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방위산업체가 군집된 지역을 방위산업클러스터 혹은 군수(국방)산업클러스터라고 지칭할 수 있다.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민간부문에 방위기술의 이전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비용을 감소시키게 되어, 궁극적으로 시장가격의 하락과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외부경제를 유발하게 된다.

## 2. 방위산업과 지역발전의 관계

방위산업과 지역발전의 관계를 보는 관점은 크게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송희준, 1995). P. Kennedy는 국방에 대한 자원투자는 경제부문의 투자감소와 실업증가를 유발하여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 국방부문의 각종 기술개발과 방위산업의 발전을 통해 경제발전에 공헌을 한다는 주장도 많다. 특히 1960~70년대 미국 방위관련전문가들은 우주, 항공 등 방위용 첨단기술개발이 민간부문에 공헌하는 스핀오프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위산업이 국가 및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이유는 국방비가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한 경직된 지출구조, 방위산업에 대한 낮은 연구개발비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방위산업의 긍정적 효과는 유효수요와 고용의 증대, 그리고 외부경제의 향유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정갑영, 2000). 우선 방위산업은 유효수요와 고용의 증대시킨다. 방위사업비의 증가는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생산활동을 자극하여 가동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줄이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둘째, 방위산업은 방위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활용으로 민간부문의 생산성을 강화하는 외부경제를 유발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산업은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방위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향유하고 있는 사례로는 미국과 유럽의 몇몇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다른 주에 비해서 방위산업이 고도로 집중된 건벨트(Gunbelt)가 형성되어 있다(Gansler, 1995). 이 건벨트는 뉴잉글랜드 지역으로부터 메릴랜드, 버지니아, 플로리다의 동부 해안지역과 캘리포니아, 워싱턴의 서부 해안지역과 이 양안을 연결하는 애리조나, 텍사스의 남부 해안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의 방위산업지역으로는 프랑스의 Loire, Tulle, Tarbes, 영국의 Midlands, Scotland, North, 독일의 Rheinland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주요 선진국들은 방위산업과 지역발전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즉 방위기술의 상업화를 통해 국가 및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성과를 방위기술화하는 협력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국방과 민간으로 이분화되어 있던 기술개발체제를 통합하여 민군상호협력의 공동개발체제로 전환하여 투입자원의 효율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 3. 방위산업의 정책기조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육성은 197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다. 그 시초는 각 군별로 흩어져 있던 연구개발시설을 국방과학연구소로 통합·설립(1971)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이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1973)”의 제정과 중화학공업 및 방위산업의 병행 추진을 위한 창원국가산업단지(1974)가 조성, 그리고 방위산업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덕연구단지(1978)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방위산업의 육성이 주춤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새로운 도약기에 접어들고 있다. 그 대표적 근거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수출규모 변화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체의 수출규모가 1998년에 1.47억불이었던 방위산업 수출액이 2007년에는 8.45억불로 증가하게 되었다(이현수, 2008).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방위산업을 다시 육성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 정책이 2006년 신설된 방위사업청을 꼽을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과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 방위사업청이 신설된 이후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정책기조 또한 매우 급변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함과 동시에 세계 10위권의 방위산업 수출국가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2010년까지 20억 달러 방위산업 수출액을 달성하고, 2014년까지 첨단무기체계 기술개발을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며, 2024년까지 첨단무기 독자개발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국방 관련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까지는 국방비 대비 6.5%까지 연구개발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 주요 방위산업 수출 국가를 벤치마킹하여, 방위산업 수출 전담기구를 범정부차원에서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더욱 늘려 방위산업체 제품수출을 적극 지원

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방산협력협정 체결 국가 확대 및 정부 간 방산협력 활동 강화와 선진무기체계 소개 및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신규시장을 확장하고 있다(방위사업청, 2008).

## 방위산업의 현황과 개발여건 분석

### 1. 방위산업의 일반현황

방위산업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위사업법(제35조)에 의해,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유도무기, 항공기, 함정, 탄약, 전자·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레이더·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전자장비,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열상장비, 전투공병장비, 화생방장비, 지휘 및 통제장비 등의 11가지 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방위사업체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방위사업체들은 대부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경우 일반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회원은 86개 업체이고 준회원은 81개 업체이다. 일반회원은 방위산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준회원은 방위산업체 이외의 관련 업체도 포함하고 있다.

2008년 현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회원은 총 86개 업체이다. 전체 86개 방위산업체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 방위산업물자는 통신·전자장비(18.6%), 전투기동장비(14.0%), 총포류(14.0%), 그리고 항공유도(14.0%)이다. 이를 기술수준별로 구분해 볼 때, 통신·전자장비와 항공유도분야는 OECD 기술분류 중 첨단기술분야에 해당된다.

한편 방위산업체의 설립연도를 살펴보면, 전체 방위산업체의 48.8%가 1970년대에 설립되었다. 반면 통신·전자장비, 함정, 항공유도 등의 첨단 분야는 1990년대 이후에 설립된 기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물자의 유형과 시대별 방위산업체의 증가는 큰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탄약, 화생방, 총포류, 그리고 전투기동장비는 1980년 설립된 방위산업체가 중심을 이루는 반면, 1990년대 이후에는 방위산업체가 통신·전자장비, 함정, 항공 유도를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전에는 중·저기술이 요구되는 총포류, 탄약, 화생방, 그리고 전투기동장비가 방위산업의 중심을 이루었다면, 1990년 이후에는 통신·전자장비, 합정, 항공유도와 같은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분야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표 1〉 시대별·기술수준별 방위산업의 변화

구분		시대별	
		1980년 이전	1990년 이후
기술 수준	저기술	총 포 류 탄 약 화 생 방	
	중기술	전 투 기 동 장 비	
	고기술		통신 · 전자장비 합 정 항 공 유 도

## 2. 방위산업의 공간분포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공간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86개 업체 중 44.2%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방위산업체의 경우 대부분 본사를 서울에 위치하고 있을 뿐 실제 생산공장은 경남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경남에 14개 업체(16.3%), 인천에 12개 업체(14.0%)가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방위산업체의 생산공장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60% 정도의 방위산업체가 경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경남지역, 특히 창원과 사천지역에 방위산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전통적 방위산업에 필요한 기계·금속 관련업종이 남동임해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성장하고 있는 첨단형 방위산업의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들 산업의 경우 첨단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바, 대도시와 연구기반이 지향적 입지성향을 띠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충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방위산업체는 모두 4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체의 4.7%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대전지역에는 방위산업체가 입지하고 있지 않다.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탄약(논산)과 항공유도(논산)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 각각 1개소와 통신·전자장비(천안, 예산)를 생산하는 2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표 2〉 방위산업의 공간분포

(단위: 개소, %)

구 분	전체	전투 기동장비	총포류	탄약	통신· 전자장비	함정	항공유도	화생방	기타
전 체	86 (100.0)	12 (100.0)	12 (100.0)	8 (100.0)	16 (100.0)	8 (100.0)	12 (100.0)	2 (100.0)	16 (100.0)
서 울	38 (44.2)	5 (41.7)	5 (41.7)	3 (37.5)	4 (25.0)	6 (75.0)	8 (66.7)	2 (100.0)	5 (31.3)
부 산	3 (3.5)	0 (0.0)	1 (8.3)	0 (0.0)	1 (6.3)	0 (0.0)	0 (0.0)	0 (0.0)	1 (6.3)
인 천	5 (5.8)	0 (0.0)	1 (8.3)	0 (0.0)	2 (12.5)	0 (0.0)	1 (8.3)	0 (0.0)	1 (6.3)
대 전	2 (2.3)	0 (0.0)	0 (0.0)	0 (0.0)	1 (6.3)	0 (0.0)	0 (0.0)	0 (0.0)	1 (6.3)
울 산	2 (2.3)	2 (16.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경 기	12 (14.0)	2 (16.7)	0 (0.0)	1 (12.5)	5 (31.3)	0 (0.0)	1 (8.3)	0 (0.0)	3 (18.8)
충 북	1 (1.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6.3)
충 남	4 (4.7)	0 (0.0)	0 (0.0)	1 (12.5)	2 (12.5)	0 (0.0)	1 (8.3)	0 (0.0)	0 (0.0)
전 북	2 (2.3)	1 (8.3)	0 (0.0)	1 (12.5)	0 (0.0)	0 (0.0)	0 (0.0)	0 (0.0)	0 (0.0)
경 북	3 (3.5)	0 (0.0)	0 (0.0)	0 (0.0)	1 (6.3)	0 (0.0)	0 (0.0)	0 (0.0)	2 (12.5)
경 남	14 (16.3)	2 (16.7)	5 (41.7)	2 (25.0)	0 (0.0)	2 (25.0)	1 (8.3)	0 (0.0)	2 (12.5)

자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웹사이트(www.kdia.or.kr)

### 3. 충남지역의 개발여건

충남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방위산업 관련기관이 집적지이기 때문에 향후 국방과학클러스터가 구축될 경우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충남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방위산업 관련시설 집적지이다. 국방시설로는 3군본부, 육군훈련소, 자운대, 육군군수사령부, 국군간호사관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고, 연구기관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협력센터, 기계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있으며, 교육기관으로는 육군항공학교, 국방대학교, 지역대학 등이 입지하고 있다.

둘째, 충남지역은 방위산업의 특성상 요구되는 신속하고 비밀스러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국내 유일한 지역이다. 특히 현재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 및 3군본부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및 보안성 유지가 용이하다.

셋째, 충남지역은 방위산업 발전에 기본조건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충남지역은 지역내에 국책연구소와 대학 등이 다수 입지하고 있는 바, 이들 연구 및 교육기관을 통해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

넷째, 충남지역은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안정적인 지역산업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충남은 천안, 아산, 당진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체가 급속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일 뿐 아니라, 아울러 대덕연구단지에서 분가한 기업체들이 충남지역 내에 재입지하고 있다.

다섯째, 충남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친군정서가 강한 지역이다. 전통적으로 충남도민과 논산·계룡시민은 군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협조적·우호적인 정서가 강하다. 충남 계룡시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군협력관을 두고 있다.

##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 1. 용어의 정의

클러스터는 특정의 전문화된 산업 혹은 부문이 일정한 동질성을 가진 유연적 공간 범위에서 다양한 혁신을 창출하는 집합체로 정의할 수 있다(이성근·이관률, 2008). 따라서 국방과학클러스터는 방위산업체가 군집함과 동시에 활발한 네트워크를 유지하여 다양한 혁신을 창출하는 집합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국방과학클러스터는 방위산업클러스터 혹은 국방산업클러스터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방과학클러스터라는 용어로 선거공약화 되어 현재 정책적 용



어로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방위산업이라고 하면, 재래식 무기를 중심으로 한 군수품을 연상하고 있는 바, 이와 차별화하기 위해 국방과학클러스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밀한 네트워크인 클러스터를 국방과학클러스터로 표현하고자 한다.

현재 충남지역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추진 중에 있다.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어 왔으나, 구체적으로 국방과학클러스터가 추진되는 것은 대선공약화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충남지역에 국방과학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충남지역의 개발여건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과제의 발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이 영역별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2. 국방과학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남지역은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성에 있어서 필요한 전제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제 국방과학클러스터가 원활히 조성·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방위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이 집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별 교류와 네트워크, 특히 군과 민간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국가 및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이 미흡하다. 따라서 군과 민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에 국가적인 지원(예산, 조직, 제도 등)과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최대의 방위산업 집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방위산업을 생산·제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이 전문한 실정이다. 따라서 방위산업으로 특성화·전문화된 국방산업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방위산업이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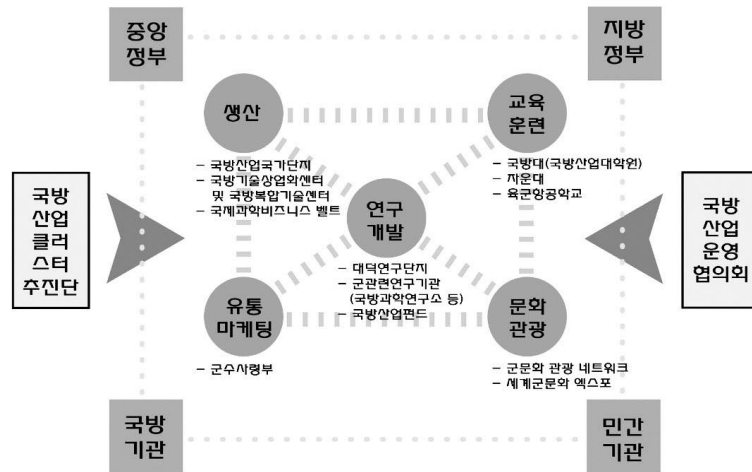
셋째, 국방기술을 민간에 이전·확산할 수 있는 거점기관이 부족할 뿐 아니라, 방위산업의 체계적 추세인 복합기술개발 연구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방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확산하고 있으나, 내용적·범위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방기술 중에서 상업화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부문에 이전하고, 민간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민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국방기술화하는 지원기관의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국방관련기관이 다수 지역내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국방대학교가 충남 논산으로 이전해 올 경우, 국방대학교를 활용한 국방산업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방산업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상업화, 유통·마케팅, 그리고 전략적 의사결정 부문의 전문인력을 지역내에서 양성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방대학교 안에 석박사과정의 국방산업대학원의 개설이 요구된다.

다섯째, 지역에 집적화되어 있는 국방산업 관련기관을 이용한 장소판촉과 이미지 제고도 취약한 실정이다. 현재 계룡시와 논산시, 그리고 서산시 등에서 군과 관련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일회성의 지역단위 행사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방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자원을 관광자원화하고 국방관련 자원을 테마화·상품화할 수 있도록 국방문화투어리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3. 충남지역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는 정책과제에서 도출된 충남지역의 문제점이 보완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과학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한 행정체제 구축, 국방사업 국가산업단지의 조성, 국방기술상업화센터 및 국방복합기술센터의 건립, 국방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방산업대학원 개설, 그리고 국방문화투어리즘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와 같다.



〈그림 1〉 국방과학클러스터의 구축모형

### 1) 국방과학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한 행정체제 구축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1차적으로 「국방부 + 지식경제부(한국산업단지공단) + 충남도」가 공동으로 국방과학클러스터추진기획단을 설립해야 할 것이다. 국방과학클러스터추진단은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정책, 제도, 예산 등의 지원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국방과학펀드 조성·운영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국방산업 관련기관 간 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방과학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방위산업발전을 중장기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방위산업전략계획(Defence Industrial Strategy Planning)」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성격을 띠는 「국방과학클러스터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충남도의 경제개발정책과 국방과학클러스터 육성정책의 일치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 2) 국방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방관련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충남지역에 방위산업으로 전문화·특성화된 「국방산업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방위산업체 및 미래 방위산업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개발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산업 국가산업단지의 위치, 규모, 시설기능 등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조성되는 국방산업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에는 방위산업과 관련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및 물류·유통공급 체계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방산업 국가산업단지에는 국내기업을 비롯하여 외국인 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은 외국인전용단지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생산-유통·물류-주거-녹지 등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언스파크의 관점에서 조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방위산업 관련주체간 협력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혁신센터(innovation center of defense industry)를 설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방산업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주력 대상이 전략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충남 지역의 국방관련 기관의 입지여건과 향후 방위산업의 발전방향을 고려할 때, 전자통신(레이더 부문), 소재, 복합무기, 그리고 전략적 의사결정 부문 등이 발전 잠재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유도무기, 항공기 탑재무장, 첨단정보·전자장비 등을 핵심주력무기로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이 조성되는 국방산업 국가산업단지는 총포류, 전투기동장비와 같은 재래형 방위산업에서 탈피하여, 전자통신, 소재, 복합무기 등과 같은 첨단방위산업 및 핵심주력무기로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 3) 국방기술상업화센터 및 국방복합기술센터의 설립

국방기술의 민간이전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국방기술상업화센터를 설립하고, 민군기술협력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국방과학기술연구처(DARPA)나 국방기술 및 산업기반위원회(NDTIBC), 일본의 방위청기술연구본부(TRDI) 등의 벤치마킹이 요구된다.

국방기술상업화센터는 기술평가 및 거래활성화, 기술전문가 양성, 기술마케팅 강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상업화 거점기관으로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방기술상업화센터는 방

위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 정보, 기술, 경영, 시설 등 수요에 부응하는 입체적 One-stop 서비스 제공토록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방위산업의 세계적 추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복합무기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국방복합기술센터를 설립이 필요하다. 국방복합기술센터는 기존의 국방과학연구소의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국방기술상업화센터와 국방복합기술센터는 국방기술의 전략적 상업화(spin-off), 민간기술을 국방부문에 도입 활성화(spin-on), 국방과 민간의 필요한 공동기술개발(spin-up) 등과 같은 복합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4) 국방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방산업대학원 개설

국방대학교가 충남 논산으로 이전해 옴에 따라 국방대학교를 활용한 국방교육을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의 일환으로 방위산업 중에서 중요한 테마로 성장하고 있는 연구개발, 상업화, 유통·마케팅, 그리고 전략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국방산업대학원에 개설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방위산업에서 중요한 분야인 민군기술개발, 민군기술이전 및 활용, 민군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 등의 전문교육과정을 개설·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방과학클러스터추진단 및 국방과학운영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국방과학클러스터 포럼을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국방과학클러스터 포럼은 국방과학 관련기관의 정보교류와 네트워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신정보교류 및 사례발표 등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논산시로 이전하기로 확정된 국방대학교가 조기에 이전해 와야 할 것이고, 국방대학교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방교육지구의 조성이 요구된다.

#### 5) 국방문화투어리즘의 활성화

향후 조성할 국방과학클러스터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의 향상, 해외시장개척 및 이를 통한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방위산업, 평화문화, 군체험관광 등을 테마로 한 투어리즘

의 접목을 통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의 성공적인 클러스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투어리즘은 클러스터의 이미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클러스터 내 기업들의 명성을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문화투어리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방관련 관광콘텐츠의 개발, 국방 및 군사를 테마로 한 각종 박물관과 전시관의 건립 등과 이를 벨트화한 연계관광코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국방관련 문화행사를 통합하여 세계군문화엑스포를 국제적 행사로 승격시켜 축제의 품격을 높임과 동시에 행사규모를 확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방을 주제로 한 특색 있는 테마파크를 국가재정사업 또는 민간자본에 의해 조성·운영토록 할 필요가 있다.

## 맺음말

세계적으로 방위산업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이 되고 있고 경제활성화에 큰 비중의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지향적 방위산업 구조가 지속화되면서 방위산업과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이 낮았다.

21세기에 들어 세계적 IT강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는 기초과학기술의 발전, 국방기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군 + 민간」의 협력체제 강조 등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향후 국내에서 방위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주요 기조는 2014년까지 첨단무기체계 개발기술을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과 2024년까지 첨단무기 독자개발능력 확보에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방산협력 협정체결 국가 확대 및 정부가 방산협력 활동 강화를 통해 신규시장을 확보하고, 방산수출지원 조직 보강과 더불어 산자부 등 유관기관과의 관계관으로 구성된 범정부 방산수출협의회를 통해 실질적인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방위산업 관련 산업의 집적지로서 방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조건, 즉 신속한 비밀스러운 의사결정의 가능,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 안정적인 지역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다. 즉 충남지역은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에 있어서 국내의 타 지역에 비해서 절대적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다.

충남지역에 국방과학클러스터가 효율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국방과학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국방산업 국가산업단지의 조성, 국방기술산업화센터 및 국방복합기술센터의 설립, 국방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방산업대학원 개설, 그리고 국방문화투어리즘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은 관련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방위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1. 방위사업청, 2007, 새로운 출발, 방위사업청 1년의 성과와 다짐.
2. 송희준, 1995, "한국의 국방기술과 경제발전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4권 제2호, 한국정책학회.
3. 이성근 · 이관률, 2008, "구미 · 창원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비교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0권 제2호, 한국지역개발학회.
4. 정갑영, 2000, "국방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접근", 국방연구, 제43권 제1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5. 황동준외, 2001,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국방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웹사이트 ([www.kdia.or.kr](http://www.kdia.or.kr))
6. Australian Defence Force, 2007, Defense and Industry: Policy Statemenet 2007.
7. Department of Defense, 2007, Defense Industrial Base.
8. Gansler, J., 1995, Defense Conversion: Transforming the Arsenal of Democracy, Cambridge, The MIT Press.
9. Guay, T. R., 2007, Globaliz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Defense industry base in <http://strategicstudiesinstitute.army.mil>.
10. Ministry of Defense, 2005a, Defence Industrial Strategy: Defence White Paper.
11. Ministry of Defense, 2005b, Defence Technology Strategy for the demands of the 21st Century.
12. Ward, J. M., 2007, "Trade and the Defence Industrial Base", 2007 국방클러스터 국제포럼 자료집, 대전광역시 · 육군본부.



#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방위산업분야

최상욱 |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신정부의 방위산업 정책기조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우선시 정책으로 인해 충청권 입장에서 볼 때 대덕연구개발 특구와 같이 초기구상에 비해 많이 축소되어 손해를 본 정책도 있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오창과학산업단지 구축 등은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도움을 받았다 할 수 있으므로 득과 실의 평가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반해 실용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표방하는 신정부에서는 결과에 따라 득과 실이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신정부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정부정책의 분석을 통해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방위산업과 관련된 신정부 정책의 분석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신정부 인수위에서는 국정지표로 “글로벌 코리아”를 선정하고 전략목표중 하나로 “세계로 나가는 선진안보”를 선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를 국정과제로 하여 국방연구개발 투자를 증대하고 민·군 겸용 기술개발과 범부처 협력 사업을 확대하며, 국가과학기술을 견인하고 해외 경쟁력을 견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중소 방산업체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지원 계획과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방위사업청 및 국과연을 활용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sup>1)</sup> 방위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에서 보듯이 방위산업 발전의 핵은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에 국방과학기술 정책분석을 통해 방위산업 정책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국방과학기술도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의 범주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과기부와 교육부의 통합에 따른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기부와 교육부의 통합에 따라 과학기술분야는

1) 국방부 업무보고결과 브리핑자료, 2008.3.13

일정부분 위축이 불가피하나 통합사유를 보면 정부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실질적 사유로는 정부조직의 슬림화를 들 수 있으나, 실용정부에서는 대학교육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의 실패에 대해 몇 해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산업현장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인해 엔지니어 7만 명의 1년간 재 교육비가 2조 8천억 투입되고 더욱이 교육기간 중 실무투입이 불가능함에 따른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sup>2)</sup> 이런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과기부와 교육부를 통폐합 하였으며, 현재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신 정부의 실용화 전략에 의거 대학에서는 10년 이후를 내다보는 기초기술의 개발과 함께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양성된 인력을 출연(연)에서 흡수하여 향후 5년 내의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벤처창업 및 기술이전을 통한 업체이관으로 상품화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선 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KAIST와 ICU 통합논의, 출연(연)의 임무 재정립 및 통폐합 등도 실용성 증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과학기술 투자의 전략적 확대 및 효율성제고”를 선정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정부 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원천 연구투자 비중을 현재의 25%에서 ‘12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소재·나노, 융합기술(IT+BT 등)을 활용한 신성장 산업, 주력산업 고도화부문, 에너지·환경 등 국가수요 해결분야에 집중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신정부의 국방과학분야 정책은 국방과학기술의 목적이 안보였던 것을, 안보와 국가경제에 기여를 동시 목표로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방과학기술도 국가과학기술의 틀 안에서 서로 상호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즉, 국방과학기술과 국가과학기술에서 동시에 사용 가능한 기술이 많은 기초연구분야의 투자를 늘려 국가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하고, 민·군간 실질적 협력이 가능한 범 부처 협력사업<sup>3)</sup>을 발굴 추진하여 초기 많은 투자가 필요한 최첨단 국방기술을 개발하여, 현재 5%에 머물고 있는 방산 수출비중을 높여<sup>4)</sup> 방산업체의 자족기능을 보유했을 수 있도록 국내 방위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국내 방위산업 발전방향은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중인 국방획득제도 체계개선과 금년 말 폐지가 예정된 방산 전문

2) 이인렬, 산업기술인력 현황과 과제, 2001.12.17

3) 국방분야의 범 부처 협력사업으로 '03년 무궁화 5호의 위성사업을 시작으로, '06 한국형 헬기사업(KHP, 6년간 1.3조 투자) 등 현재 7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음.

4) 국방선진국의 경우 20%이상(미국 25%, 프랑스 31%, 이스라엘 70%)의 수출비중유지 : SIPRI YEARBOOK 2005, SIPRI, 2006

5) 전문화·계열화 제도 : 향후 연구개발이 필요한 무기체계 분야(품목)를 먼저 선정하고 그 해당분야의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 이들 업체를 연구개발사업에 우선 참여시키는 제도로 중복투자방지과 기술력제고에 기여하였으나 독과점 폐해 및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신규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08. 12월 폐지기로 결정

화·계열화제도<sup>6)</sup>에 대한 후속대책 및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 등의 결과가 나오는 연말이 되어야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 국내 방위산업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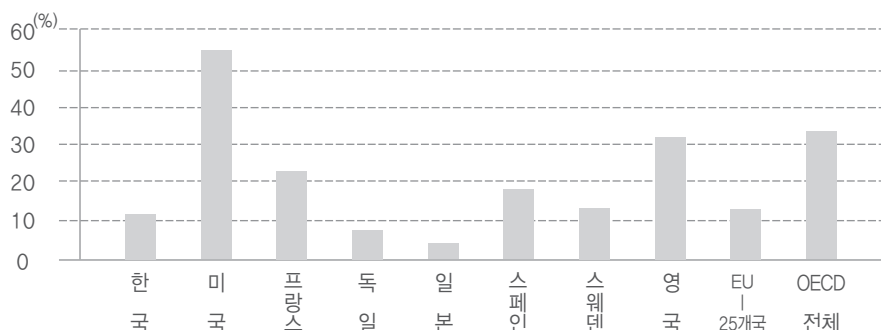
방위산업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산업으로서, 필수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산업을 의미한다. 방위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국제 분쟁의 상황에서도 외국의 무기 수출금지로부터 발생하는 위험<sup>6)</sup>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 방위산업 기반구축은 유사시 국가행위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주는 안보자산이라 할 수 있다. 방위산업은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 구소련 및 동유럽공산주의의 붕괴에 따른 탈냉전화 가속 및 이에 따른 무기의 양적 팽창 필요성이 감소되며 방위산업은 대변화를 요구받게 되고, 방산 선진국인 미국에서부터 민·군 겸용기술 개발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국방연구개발비로 국가연구개발비 대비 54%를 사용하고 국방과학기술이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는 특성상 민군겸용기술개발은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일본을 위시한 타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한 협력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국내의 방위산업은 남북 대치 상황에 따라 '7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전력증강 정책을 유지하며 군의 전력화 위주로 발전되어왔다. '70년대 방위산업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크고 투자가 일천한 상황에서 군의 기본병기를 역설계 개발하는 단계였고, '80년대에는 선진국 무기의 모방 또는 개량개발을 통한 무기체계개발에 치중하였다. 이 결과 방위산업이 국내 중공업 발전에 일조하게 되는 시기이다. '90년대 들어서는 안보환경의 변화, 국제외환위기의 도래와 교육 및 복지예산 등의 증가 추세로 인하여 국방예산은 상대적인 압박을 받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고도정밀무기를 독자 개발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국방연구개발을 통한 방위사업의 육성은 결국 군사기술의 종속화를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일 것이나, 국내에서도 일정부분 전쟁억제 능력 보유 및 기본화기의 전력화 완료에 따라 사고의 전환을 요구받는 시기으로써, 민군겸용기술을 대안으로 보고 '98년 민군겸용기술 개발을 위한 민군겸용기술 촉진법에 의거 국과연 산하에 민군겸용기술센터가 신설되게 된다. 2000년대는 국방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세계 수준의 독자무기

6) 아르헨티나는 1982년 포클랜드 전쟁시 프랑스로부터 공급받아 왔던 엑조세 미사일을 공급받지 못하였고, 초강대국인 미국도 이라크 전쟁시 스위스 업체로부터 무기체계 핵심 구성품을 적기에 공급받지 못한 사례 등이 있음

를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되는 시기이다. 과학기술측면에서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활성화되어, 국가과학기술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국방과학기술을 포함한 국가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학기술사업 및 과제에 대해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범 부처적으로 수행가능 한 대형사업을 선정하고, 부처 협력을 통해 국책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04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비 대비 국방연구개발비는 OECD 평균인 32%에 훨씬 못 미치는 12.6%인 실정으로 국방과학기술의 투자측면에서도 대형사업의 범 부처 협력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 '08년의 국내 국가연구개발비 대비 국방연구개발비는 13.4%



〈그림 1〉 '04년 주요국의 국가 연구개발비 대비 국방연구개발비<sup>7)</sup>

민간의 우수한 IT분야를 활용 지휘통제 및 감시정찰을 위한 기술인 위성통신, 위성정찰 등의 우주분야를 개발하고, 탐지 및 정찰을 위한 무인화(로봇)분야 등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같이 소재/부품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초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도 같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방위산업은 방위사업법에 의거하여 방산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방산지정제도란 해당분야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제도”와 “방산 전문화 및 계열화 제도”를 지칭한다.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제도”는 경쟁조달이 곤란한 군 전용물자의 조달원 확보 및 품질을 보장하기위하여 무기체계(일부 비무기체계 포함)와 그 주요 구성품에 대해 지정업체에게 양산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

7)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6.

로 '73년 방산특조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방산 전문화 및 계열화 제도”는 '83년에 실시된 이후 중·장기 획득체계에 포함된 군용물자 중에서 향후 연구 개발 또는 기술 도입·생산해야 할 필요가 있는 품목에 대해 지정된 업체에게 참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전문화 계열화 지정현황은 11개 분야에 전문화 업체 34개 및 계열화 업체 53개로 총 88개의 방산업체가 지정되어 있으며, 방산업체당 평균 97.7개의 협력업체를 보유하여 총 4,585개의 협력업체<sup>8)</sup>가 국내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신정부에서 ‘국방개혁 2020’의 수정 및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등의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근본 틀을 바꿀 수는 없는 상황으로, 이에 따른 전력투자비 확대에 힘입은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세는 완만하나마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국내 방산업체 방산부문 매출 및 손익<sup>9)</sup>

단위 : 억원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총 매 출 액	43,447	42,681	46,440	53,165	54,547
매출성장률(%)	17.4	-1.8	8.8	14.5	2.5
영 업 이 익	1,508	1,543	1,413	2,500	2,673
경 상 이 익	253	555	863	1,486	1,634

그러나 당장 올해 말로 폐지가 예정된 전문화/계열화제도에 따라 국내 방산업체는 기술력에 따라 재편과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정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방안으로 중소기업 품목지정제도를 통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등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국내 무기체계 연구개발 성과를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방과학연구소 창설인 '70년부터 '04년까지 총 12조 9,131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국방예산 125조 700억원을 절감하는 등 투자비의 11.5배인 148조 9,9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방연구개발 분야의 생산 유발계수<sup>10)</sup> 및 부가가치 유발계수<sup>11)</sup>도 각각 1.752, 0.732로서 산업 평균의 1.659, 0.714보다 높았음이 확인되어 국가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8) 2007 방위산업체 경영분석,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07. 10. 29

9) 2007 방위산업체 경영분석,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07. 10. 29

10)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국내 전체사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산출액의 크기

11)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국내 전체사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의 규모

〈표 2〉 국내 방산업체 방산부문 매출 및 손익<sup>12)</sup>

사업명	투자비 (A, 억원)	예산절감 <sup>13)</sup> (B, 억원)	저력증대 <sup>14)</sup> (C, 억원)	투자효과 (B+C/A)	고용창출 <sup>15)</sup> (명)
신형 경 어뢰	1,254.3	5,018.2	2,911.8	6.32배	5,640
휴대용 대공 유도 무기	1,482.1	6,085.0	6,012.8	8.16배	4,638
전투기 외장형 전자방해장비	928.1	2,306.5	4,415.4	7.24배	6,382

※ '05년도 기준 불변가

방위산업의 투자효과 분석결과 국내 국방연구개발투자도 자국의 안보만을 책임지는 소비성 산업이 아니라 고용창출 등 국내산업 파급효과도 큰 국가 투자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위산업은 기존 첨단분야(금속, 기계, 전자 등)와 신규 첨단분야(IT, BT, NT 등)가 결합·구현되는 산업이므로 대규모 선도투자 등 정부 개입을 통하여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방위산업분야는 관련 민수산업과의 기술교류(spin-off, spin-on)를 통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고, 신흥개발 국가의 노동 집약적 산업과 차별화가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 등이 국방과학기술과 접목되어 미래의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돋움한다면, 국방 분야가 국민의 세금을 소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부를 창출해내는 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방위산업 분야 제언

클러스터란 특정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기반시설 및 자원들을 특정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12) 국방연구개발투자 경제효과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4

13) 예산절감액 = 해외 유사 무기체계 순기비용 - 국내개발 무기체계 순기비용

14) 전력증대 기여액 = 해외 유사장비의 단가 × 성능개선(또는 감소정도) × 소요량

15) 고용창출 인원 = 취업유발계수 × 투자비 + 양산기간 업체 참여 인원

혁신형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미국의 실리콘 벨리를 보면 1891년 스텐포드대 개교가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며, '60년대 이후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하여, 현재는 컴퓨터, 바이오 등 3,000여개의 하이테크 기업이 밀집되어 있으며, 미국 벤처투자의 33.6% 집중 및 세계 100대 첨단기업의 20%가 입주해 있다. '01년 기준으로 지역 총생산 2,050억불로 한국 GDP의 50% 정도로 성장해 왔다.

방위산업은 특성상 제조업 전분야를 망라하는 종합산업으로 방산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방 단독 클러스터 조성은 비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주문생산방식의 국방특성상 큰 규모의 경제가 곤란하여 대부분의 방산업체가 민수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사업만으로 일정 지역에 산업단지 형태의 집적은 곤란할 것이다. 안보 측면에서도 전시 대비를 고려할 때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것보다 방산/군수 공장을 전국에 산재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향후 첨단 정보과학군 건설과 NCW<sup>16)</sup>개념수행을 위해 전력화 달성의 필수요소인 '지휘통제·감시정찰' 및 '무인화 전투체계' 관련 산업인 IT와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가능성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로봇산업과 관련된 방산업체가 자율 탐지·추적기능을 보유한 이시스 로봇을 개발 완료한 '도담시스템'이 유일한 실정으로 인간로봇 휴보를 개발한 KAIST 및 민군 겸용사업으로 견마형 로봇을 개발 중인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로봇산업의 클러스터화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의 접근시도는 가능해 보인다. 신 정부의 5대 권역별 투자정책기조에 따라 충남과 대전의 상호협력을 통해 대학 및 출연연구소를 활용하여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방위산업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의 유치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을 전후로 세계 로봇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확대가<sup>17)</sup>예상되어 국방분야의 선점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로봇산업의 국내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80% 수준으로 집중 투자·육성시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민군 협력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중 하나이다. '06년 방위사업법 개정시 국방분야에서는 민간분야 첨단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신개념 기술시범 제도<sup>18)</sup>를 도입하였으며 '08년 15억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의 증가가 예상되는 관계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서는 관심이 필요한 분야일 것이다.

16) NCW(Network Centric War) : 감시정찰-지휘통제-정밀타격 네트워크를 연계시켜 전장가시화 및 실시간 전투력 통합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쟁수행개념

17) '04년 기준 시장규모는 3,500억(세계 6위), 사용대수 46,845대(세계 5위), 로봇밀도 138대/만명(세계 3위)이며, 2020년경 1가구 1로봇 시대 도래 예상

18) 신개념 기술시범제도(ACFD :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 기존 개발기술을 신속하게 종합하고, 민간분야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적시에 반영 할 수 있는 제도



## 방산 중소·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모색

국방분야에서 향후 필요로 하는 기술인 IT(정보), ST(우주), RT(로봇), NT(나노)를 연구하는 대학 및 출연(연)의 결과를 중소·벤처기업에 기술이전 시 지역입주 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과 개발자의 직접 벤처창업 시 창업의 도움을 주고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충청권(충남, 충북, 대전) 입장에서 협의하여 정부에 요구하여 상생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충남의 입장에서는 계룡대를 축으로 국방교육·문화를 담당하고(국방대 이전이 필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활용 및 논산주변에 중소기업 단지를 조성하고 대전에서는 벤처단지를 조성하는 방안 등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충청권의 경우 육군정보통신학교, KAIST, 충남대를 위시한 관련기술 보유대학과 ADD, 항공우주연구원, 기계연구원 등의 출연연구소와 중소·벤처기업 등을 연결해주는 창구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국방 조달물자 및 국방 R&D사업의 업체 선정 시가산점 부여 등도 유치 활성화를 위해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 하겠다.

## 맺음말

방위산업과 관련된 신정부의 정책 및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고찰 결과 충남을 축으로 하는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는 민군협력이 가능한 중소·벤처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향후 국방분야에서 필요가 예측되는 기술 중 국방로봇같이 관련기술 수행업체가 아직은 미천한 분야에 대한 중소·벤처기업 유치 시 중·장기적으로 지역 선점에 따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국방과학클러스터가 신정부에서 2~3조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하겠다. 연계가 어려울 경우,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시도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충남, 충북, 대전) 유치에 방해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 조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모든 과정이 충남만이 아닌 충청권 차원에서 관련 지자체와 심도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역할분담을 하여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의 유치실패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1. 김성배, 2007, 「민군기술협력을 활용한 국방연구개발 발전방향연구」,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2. 이호순, 2004, 「국방기술민수이전 활성화 방안」,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겸용기술센터.
3. 김성배, 2006, 「국방과학기술의 중·장기 정책 발전방향」, 한국국방연구원.
4. 한남성, 2007, 「2007 방위산업체 경영분석」, 방위산업 진흥회.
5. 황호경 외, 2004, 「국방연구개발 정책서 '06~' 20 일반본」, 국방부.
6. 이재억, 2006, 「'70~' 04 국방연구개발투자 경제효과」, 국방과학연구소.
7. 최병학, 2007, 「지역특화 국방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방안」,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국방산업 육성과 지자체의 비전」, 충남대학교.
8. Kisaburo KODAMA, 2008, 「Globalization Strategy of Tsukuba Science City」, 지식경제부, 「"2008 ICIC DAEDIK」, 대전 컨벤션센터.
9. 김선근, 200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방향」, 대전광역시,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을 통한 첨단의료산업 육성 심포지엄」, 대전 유성호텔.
10. 박종구, 2008, 「교육과학기술부 체제하에서의 새정부 과학기술 과제」, 과실연, 「교육과학기술부 체제하에서의 새정부의 과학기술 과제」, 한국기술센터.

# 국방과학클러스터의 사례분석 : 미국을 중심으로

이인희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미국의 국방과학클러스터

우리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은 알게 모르게 전세계와 연결되어 있지만, 최근의 세계경제공간은 경제활동의 단순한 분산이 아니라 산업 활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적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지역적 집적은 국가 내에서도 이루어진다. 집적은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이점뿐만 아니라, 집적지역 내의 기업간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기술혁신의<sup>1)</sup> 잠재력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혁신 클러스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혁신네트워크는 주요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지식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조직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혁신에 공헌하는 네트워크(박삼욱, 2002)이다.

이것은 거래비용의 절감이나 집적의 이점만을 고려한 정태적인 개념이 아니라, 경제주체간의 상호교류와 공동학습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창조성을 높이는 한편 불확실성과 위험요소를 줄이는 역동적인 개념(Camagni, 1991)이다. 지역혁신클러스터를<sup>2)</sup> 이루는 기본 요소는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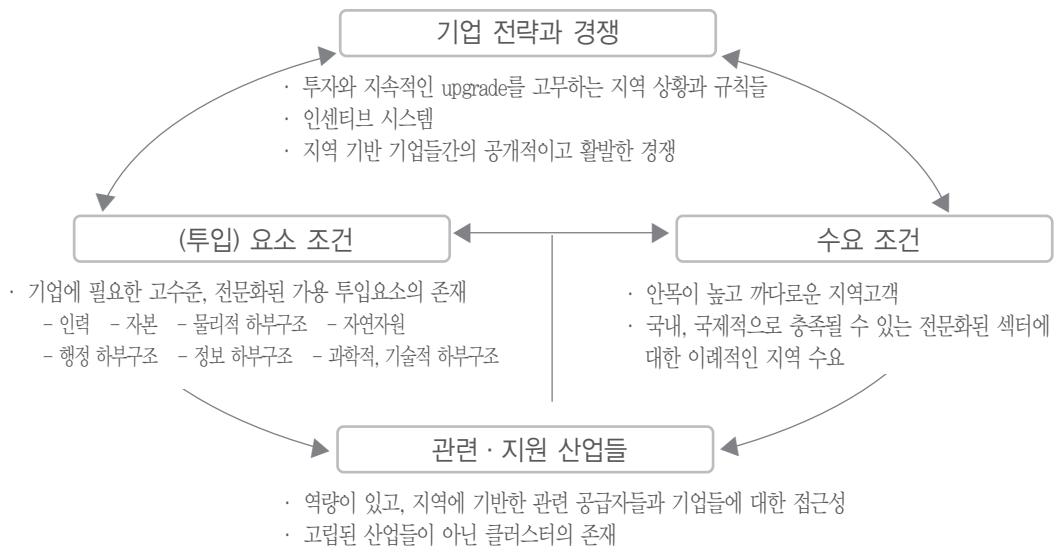
1) 기술의 혁신은 장기적인 생산성의 향상에 필수적이며, 단순한 과학적 발견 이상의 것이다. 이는 여러 경제주체들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학습의 결과이며, 경제주체간의 네트워크는 혁신의 중요한 과정을 이룬다. 1970년대 이전에는 기업이 독점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기업 자체가 기술개발활동을 통하여 기술혁신을 이루었다. 1970년대와 1990년대 초까지 선진국에서 수많은 연구공원들을 건설되었는데 이는 주로 기술혁신의 선형적인 모형의 개념을 중시하여 추진(Massey, et.al., 1992; Park, 1992) 된 것이다. 최근에는 기술혁신을 기업과 기업 환경 사이에 비선형적이고 상호작용의 진화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비선형적인 상호작용이란, 기술혁신이 기업내외의 많은 경제활동 주체들과 수평적인 상호교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또 자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상호작용은 내부적 협력과 공급자, 고객, 경쟁기업 등 타 기업과의 협력, 대학 등과 같은 지식제공자, 금융, 인력훈련,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포함한다.

2) 클러스터는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과 관련 제도들간의 외부효과 및 연계의 근본적인 영향을 반영한다. 이것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이는 클러스터 내에서는 특정 투입요소, 서비스, 피고용인, 정보, 제도와 훈련프로그램과 같은 공공재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클러스터는 혁신을 고무하면 가능하게 한다. 이는 클러스터 내에서 혁신기회를 인식하는 능력이 향상되며, 지식창조를 돕는 다수의 공급자와 제도가 존재하고, 지역 내에서 가용한 자원을 이용한 실험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클러스터는 또한 상용화를 촉진한다. 이는 새로운 기업과 기존 기업의 새로운 생산라인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며, 가용한 기술과 공급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생산품의 상용화와 새로운 기업의 출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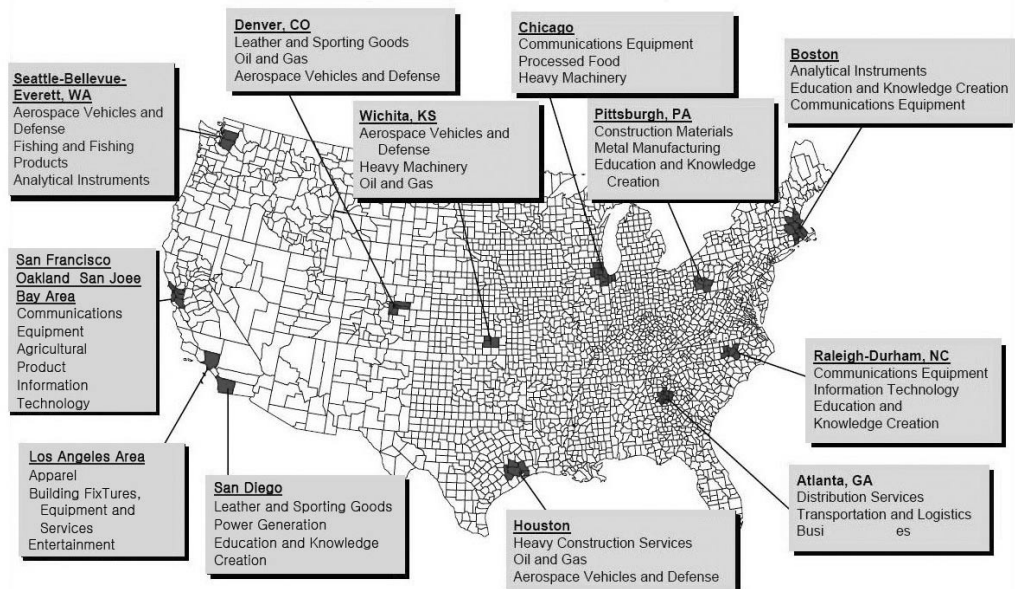
산네트워크의 발달, 고차서비스 기능의 집적, 고급인력의 공급과 기업가 정신, 대학과 연구기관의 집적, 공동학습과정, 경성 지원하부구조 등이며, 이러한 요소의 특성과 변화에 따라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유형이 달라진다.

본 연구는 국방과학 관련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미국 내 지역 혁신클러스터를 살펴봄으로써, 충청남도의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사례지역은 워싱턴 대도시권, 캘리포니아 샌디에고(Sandiego), 아리조나 주 투산(Tucson), 텍사스 등이다.

일찍이 미국 내에서는 지역경제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클러스터 기반 개발접근방식이 채택되었다. 클러스터 형성의 초기에는 연방정부와 민간기업간의 프로젝트 계약 및 하청 중심으로 허브와 스포크 유형의 네트워크 형성되었고, 연방정부의 조달비용 지출이 지역 첨단산업 관련 혁신클러스터 형성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연방정부의 핵심적 역할은 여전하지만, 연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간의 협력과 네트워크가 전개되고 있으며, 벤처 기업들이 상호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공동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성의 제고와 혁신 창조를 위한 기업환경은 기업의 전략과 경쟁, 수요조건, 투입요소조건, 관련·지원산업간의 상호작용이며(그림 1) 이를 통해 혁신클러스터가 생성된다. 성공적인 경제발전은 국가의 기업환경이 복잡한 경쟁방식을 고무하고 지지하는 일련의 경제적 업그레이드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생산성, 혁신, 기업환경



Note: Clusters listed are the three highest ranking clusters in terms of share of national employment  
Source: Cluster Mapping Project, Institute for Strategy and Competitiveness, Harvard Business School  
EDA Cluster-Based Development 04-06-03 CR

Copyright © 2003 Professor Michael E. Porter

〈그림 2〉 미국 내 주요 클러스터 구성

〈표 1〉 클러스터 별 종사자 수

	Cluster	2000 Employment	Percent of Total U.S. Employment
1	Business Services	4,667,320	4.23%
2	Financial Services	3,242,151	2.94%
3	Hospitality and Tourism	2,565,077	2.33%
4	Education and Knowledge Cr.	2,246,974	2.04%
5	Distribution Services	1,962,523	1.78%
6	Heavy Construction Services	1,883,271	1.71%
7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1,644,641	1.49%
8	Metal Manufacturing	1,412,368	1.28%
9	Processed Food	1,388,073	1.26%
10	Automotive	1,386,153	1.26%
11	Entertainment	1,057,193	0.96%
12	Publishing and Printing	983,152	0.89%
13	Plastics	874,482	0.79%
14	Information Technology	860,230	0.78%
15	Analytical Instruments	744,832	0.68%
16	Building Fixtures, Equ. & Ser.	670,048	0.61%
17	Production Technology	665,382	0.60%
18	Apparel	559,276	0.51%
19	Chemical Products	438,967	0.40%
20	Communications Equipment	425,332	0.39%
21	Heavy Machinery	411,940	0.37%
22	Motor Driven Products	408,427	0.37%
23	Textiles	402,839	0.37%
24	Forest Products	392,080	0.36%
25	Furniture	379,108	0.34%
26	Medical Devices	372,442	0.34%
27	Oil and Gas Products & Ser.	370,192	0.34%
28	Aerospace Veh. and Def.	367,315	0.33%
29	Lighting and Electrical Equ.	329,723	0.30%
30	Prefabricated Enclosures	317,080	0.29%
31	Power Generation & Trans.	290,896	0.26%
32	Agricultural Products	265,260	0.24%
33	Biopharmaceuticals	264,319	0.24%
34	Construction Materials	199,051	0.18%
35	Leather Products	133,253	0.12%
36	Jewelry and Precious Metals	126,621	0.11%
37	Sport., Recr. & Childr. Gds.	107,064	0.10%
38	Aerospace Engines	94,360	0.09%
39	Fishing and Fishing Products	51,222	0.05%
40	Tobacco	43,843	0.04%
41	Footwear	23,962	0.02%
	<b>TOTAL</b>	<b>35,028,441</b>	<b>31.78%</b>

Source: Cluster Mapping Project (<http://data.isc.hbs.edu/isc/index.jsp>)  
EDA Cluster-Based Development 04-06-03 CR

Clusters usually referred to as "high tech" make up 6.8% of traded employment and 2.2% of total U.S. employment

40

Copyright © 2003 Professor Michael E. Porter

〈표 2〉 국방과학 클러스터의 종사자수에 기준한 상위 20개 주(2004)

#	State	2004 Total Employment	2004 Share of National Employment	CAGR of Employment 1990-2004	2004 Employment Location Quotient
1	California	67,067	21.7191	-8.84	1.88
2	Washington	45,686	14.795	-6.25	7.50
3	Texas	40,045	12.9681	-3.53	1.84
4	Kansas	35,231	11.4092	-3.13	11.76
5	Arizona	23,467	7.5997	0.70	4.28
6	Connecticut	21,289	6.8941	-3.49	5.16
7	Georgia	18,585	6.0184	-0.99	2.01
8	Colorado	8,310	2.6911	-5.85	1.62
9	Alabama	7,485	2.4239	-0.25	1.71
10	Ohio	6,799	2.2017	-5.09	0.53
11	Florida	6,551	2.1213	-3.40	0.36
12	Pennsylvania	5,391	1.7458	-6.35	0.39
13	Missouri	4,519	1.4633	-15.23	0.70
14	New York	4,163	1.348	-11.02	0.21
15	Utah	4,160	1.3472	-10.39	1.66
16	Illinois	3,353	1.0858	-3.34	0.24
17	Arkansas	3,240	1.0492	-3.04	1.20
18	Oklahoma	3,197	1.0352	-6.55	1.00
19	Louisiana	2,560	0.829	-5.60	0.59
20	South Carolina	1,911	0.6187	-1.50	0.46

미국 내 주요 혁신 클러스터의 입지 지역을 살펴보면(그림 2), 워싱턴 주의 시애틀-벨러뷰-에버렛, 콜로라도 주의 덴버, 캔자스 주의 위치타, 텍사스주의 휴스턴, 캘리포니아의 로스엔젤리스 등의 지역에서 국방과학<sup>3)</sup>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미국 전역에 입지한 분야별 클러스터 종사자 수에서는 국방과학 부문이 46만여 명으로 미 전역 종사자수의 0.4%를 차지하며, 정보통신·통신기기·의료기기·국방과학·생명과학 등 하이테크 부문이 2.2%를 차지한다(표 1). 국방과학 클러스터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가 많은 지역은 캘리포니아, 워싱턴, 텍사스, 캔자스, 아리조나, 코네티컷 주이며, 지역 내 국방과학 클러스터 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입지계수는 캔자스, 워싱턴, 코네티컷, 아리조나 주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표 2). 종업원 수 상위 6개 주가 입지계수에서도 상위에 위치하였는데, 이를 통해 캘리포니아, 워싱턴, 텍사스, 캔자스 등 6개 주에서 국방과학클러스터가 발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분석단위로 할 때, 캘리포니아 주 LA-롱비치-산타나 메트로폴리탄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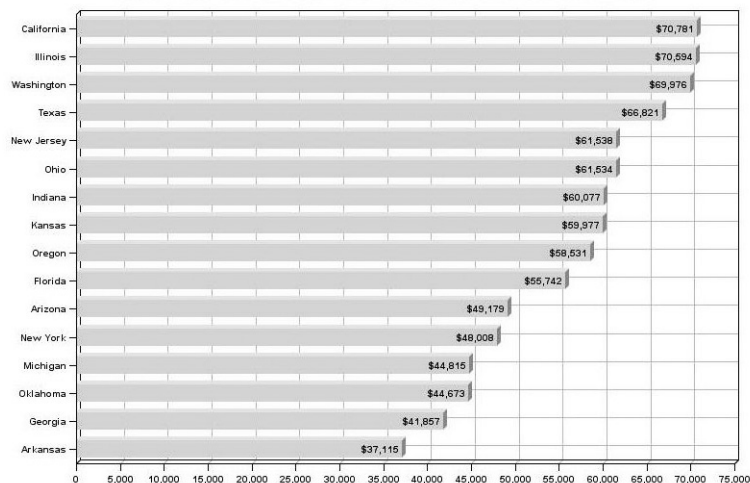
3) 본 연구에서는 'Aerospace and defense'를 국방과학 부문으로, 'Aerospace & defense cluster'를 국방과학클러스터로 명명하기로 한다.



이 45,273명으로 가장 많은 국방과학 부문 종사자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슷한 규모의 종사자 수를 워싱턴주의 시애틀-타코마-벨레뷰 메트로폴리탄 지역이 보유하고 있다. 1위에서 4위까지는 3만 명 이상으로 상위 6위의 메트로폴리탄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표 3).

〈표 3〉 국방과학 클러스터 순위(메트로폴리탄)

Rank	Metropolitan Area	2004 Total Employment	2004 Share of National Employment	CAGR of Employment 1996-2004	2004 Employment Location Quotient	2004 Average Wages	CAGR of Average Wages 1996-2004
1	Los Angeles-Long Beach-Santa Ana, CA	45,273	14.9611	-9.04	3.17	\$70,722	3.7
2	Seattle-Tacoma-Bellevue, WA	41,785	13.5219	-5.46	11.07	(\$)	(\$)
3	Dallas-Fort Worth-Arlington, TX	35,556	11.515	-4.11	5.19	\$49,684	2.9
4	Wichita, KS	36,694	9.9399	-1.02	43.52	\$51,085	(\$)
5	Tucson, AZ	19,960	6.3372	6.85	23.39	(\$)	(\$)
6	San Jose-Sunnyvale-Santa Clara, CA	18,935	6.132	-5.7	8.19	(\$)	(\$)
7	Denver-Aurora, CO	8,015	2.5958	-5.08	2.88	(\$)	(\$)
8	Atlanta-Sandy Springs-Marietta, GA	7,610	2.4644	-1.45	1.35	(\$)	(\$)
9	Bridgeport-Stamford-Norwalk, CT	7,580	2.4452	-5.93	6.25	(\$)	(\$)
10	Hartford-Vital-Hartford-East Hartford, CT	5,519	1.8001	-8.52	3.76	(\$)	(\$)
11	Phoenix-Mesa-Scottsdale, AZ	5,030	1.6452	-7.02	1.31	(\$)	(\$)
12	San Diego-Carlsbad-San Marcos, CA	4,733	1.5499	-8.11	1.95	\$72,264	(\$)
13	St. Louis, MO-IL	4,711	1.5295	-14.98	1.4	\$61,124	(\$)
14	New York-Northern New Jersey-Long Island, NY-NJ-PA	3,874	1.2546	-12.14	3.19	\$54,573	2.73
15	Savannah, GA	3,810	1.2338	0.11	11.54	(\$)	(\$)
16	Rockford, IL	3,750	1.2144	0	10.94	(\$)	(\$)
17	Philadelphia-Camden-Wilmington, PA-NJ-DE-MD	3,650	0.961	-9.35	3.45	(\$)	(\$)
18	Tulsa, OK	3,646	0.9603	-8.67	3.18	\$45,992	(\$)
19	Little Rock-North Little Rock, AR	2,110	0.6833	0.82	2.75	(\$)	(\$)
20	Sacramento-Arden-Arcade-Roseville, CA	1,995	0.6461	-4.66	1.69	(\$)	(\$)



〈그림 3〉 국방과학 클러스터의 종사자 평균 연봉(2004)



국방과학 클러스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평균 연봉은 1위 7만달러에서 16위 3만7천달러로 큰 차이를 보인다(그림 3).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워싱턴 주가 매우 높은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 워싱턴 대도시권 \*

워싱턴 대도시권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와 그 주변의 버지니아 주 및 매릴랜드 주를 포함한다. 원래 연방정부 공무원, 변호사, 의사 등 비 공학 부문의 고급 인력들이 집중한 고차 서비스산업의 클러스터지역이었던 이 지역은 1990년대에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한 혁신클러스터로 변모하였다. 과거 정부의 의사결정과 서비스의 중심지가 첨단기술 산업 클러스터 지역으로 변모한 것이다.

1990년대 워싱턴 대도시권의 첨단기술 분야의 고용증가율은 애틀란타와 휴스턴에 이은 세 번째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첨단기술 분야 고용자 수가 1988년 188,172인에서 1997년 284,724인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Stough and Kulkarni, 2001). 구체적인 첨단기술 분야는 시스템통합과 설계,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우주항공기술, 생물공학기술이며 정보통신 클러스터(InfoComm Cluster)의 발전이 현저하다(Potomac Knowledge Way, 1998). 또한 이들 핵심 산업의 발달을 가능케 하는 기업서비스, 법률서비스, 엔지니어링서비스, 경영서비스 등 고차 지원서비스 기능 역시 집중하였다.

워싱턴 대도시권의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에는 연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Mason Enterprise Center, 2001). 연방정부의 민간기업으로부터의 물품 및 용역의 조달이 워싱턴 대도시권의 민간부문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 지역 지역총생산의 12%를 차지할 정도이다. 조달비용 지출 중에서 첨단기술 제품과 서비스에 지출하는 비중이 198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99년에는 이 분야에 135억 달러가 연방정부에 의해 지출되었다. 연방정부가 첨단기술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함으로써 이 지역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한 것이다. 워싱턴대도시권에 대한 연방정부 조달의 집중은 실리콘 벨리에 대비하여 보면 확연히 들어난다(표 4). 워싱턴 대도시권은 684억 달러를 조달한 데 비해 실리콘 벨리는 169억 달러에 불과하다. 2002년 9월 11일 테러사건 이후 연방 정부의 방위산업 예산이 증가함으로써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촉진하였다.

\* 워싱턴 대도시권은 박삼욱(2003)의 논문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특히 국방성 근처의 버지니아 주의 페어팩스 카운티(Fairfax County)에 정보통신 분야의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었는데,<sup>4)</sup> 이는 미국 보건성 연구원이 입지한 매릴랜드 주의 몽고메리 카운티(Montgomery County)에 생물공학분야 산업의 클러스터가 형성된 것과 유사하다.

워싱턴 대도시권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형성의 특징은 ‘연방정부의 핵심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연방정부와 국방성에의 지리적 근접성은 국방성이라는 하나의 중심 핵(hub)과 많은 민간기업 들이 서로 연계되어 협력관계를 이루는 소위 허브와 스포크(hub and spoke)의 관계를 갖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주 정부나 조지 메이슨 대학의 기술혁신센터에서도 인력훈련은 물론 신기술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조직, 기업간의 기술개발협력을 위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지역 내 기업들간의 공통 학습과 협력을 통한 혁신네트워크를<sup>5)</sup>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표 4〉 첨단산업의 연방정부 의존 정도: 워싱턴 대도시권과 실리콘 밸리의 비교 (1999년)

	워싱턴 대도시권	실리콘 밸리
지역총생산액	2,182억 달러	1,707억 달러
연방정부 총지출	684억 달러(31.3%)	169억 달러(9.9%)
연방정부 조달비용	258억 달러(11.8%)	43억 달러(2.5%)
연방정부 첨단기술분야 조달비용	135억 달러( 6.3%)	23억 달러(1.3%)
총 고용에 대한 첨단 기술분야 비율	10.9%	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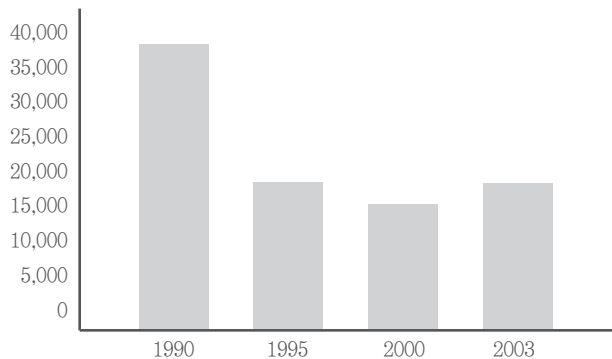
자료 : 박삼욱, 2003

4) 워싱턴 DC 주변 버지니아 주에 Tysons Corner, Crystal and Pentagon Cities, Fair Oaks, 매릴랜드 주 Bethesda, Rockville, Chevy Chase 등 소위 에지 시티 (edge city)가 등장한 것은 바로 이 지역의 첨단기술관련 클러스터에 의한 것이다(Stough, R., et. al., 1998).

5) 혁신 네트워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와,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업 간의 협력과 공동학습이다. 과거 혁신네트워크를 주도하는 주체가 연방정부 일변도에서 최근 민간기업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 1990년대 후반 들어서 많은 벤처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상호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자체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연방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기업 상호간에 협력이 이루어지고 집단학습이 이루어지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의 국방과학클러스터 (Aerospace & Defense cluster)

샌디에고는 미국의 전통적인 군사복합체가 입지한 지역이다. 1990년대 초반의 국방과학클러스터의 쇠퇴<sup>6)</sup>에도 불구하고(그림 4), 우주항공과 국방관련 산업은 샌디에고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초를 이루고 있다. 샌디에고는 80여 개 이상의 군사시설이 입지해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복합체를 이루고 있다. 국방관련분야의 경제활동은 샌디에고의 총 지역생산의 8%를 차지하며, 2004년 기준으로 국방성과 51억 달러를 조달 계약함으로써 전체 미국 카운티들 중 4위를 차지하였다.<sup>7)</sup>



〈그림 4〉 샌디에고의 국방·교통 클러스터 종사자수

샌디에고의 국방과학클러스터는 과거 10년 전의 쇠퇴에서 벗어나 새로이 부흥하고 있는 중이다. 2000년 1만6천명이었던 클러스터 종업원 수는 2003년 1만8천 여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들 국방과학클러스터 종업원들은 SAIC, General Atomics 등 300여 개 회사들에<sup>8)</sup> 근무한다. 이들 회사들은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시스템통합, 조선과 수선, 항공전자공학, 연구개발(R&D), 무선통신, 무인항공기 디자인과 제조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방클러스터에 초점을 맞춘 인력교육과 트레이닝은 경쟁력의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샌디에고 주립대학과 UC샌디에고는 우주항공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엔지니어링

6) 1990년대 초 연방정부의 국방예산 감축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1990년대에 샌디에고를 떠났는데 그 결과 샌디에고 전체 약 2만여 명의 종업원이 감소하였다.

7) 지역적인 관점에서 국방관련 지출을 보면 더욱 인상적인데, LA-오렌지 카운티-샌디에고 카운티 지역의 국방성 계약은 2004년 169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미국 전역에 소비된 국방비의 8%이다.

8) 주요 회사들은 SAIC, General Atomics, NASSCO, BAE Systems, Cubic, Goodrich Aerostructures, L-3 Communications, Northrop Grumman등이다.

사이언스/응용역학에 대해 통합학위를 수여함으로써, 학생들이 두 대학의 교수진과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샌디에고 카운티 정부는 기존의 국방과학산업에 부가적인 산업통합(industry consolidation)이 이루어진다면, 남부캘리포니아와 샌디에고의 우주항공과 국방관련 클러스터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장래 캘리포니아의 멕시코 국경지역 제조업체와의 잠재적인 시너지 효과를 바라고 있다.<sup>9)</sup>

### 아리조나주 투산 (Tucson, Arizona)

투산은 국방과학 클러스터가 매우 특화되어 있다 (그림 5). 국방과학 클러스터 종사자 수는 미 전국 대비 6.2%를 차지하여 지역 내 타 산업클러스터에 비해 월등히 높다. 투산의 국방과학클러스터는 그 집중도가 탁월한데, 전국 국방과학클러스터 전국 순위에서 5번째로 큰 규모를 갖는다. 1만9천여 명의 국방과학클러스터 종사자수는 투산 내 총 하이테크 클러스터 종사자의 55%를 차지한다<sup>10)</sup>(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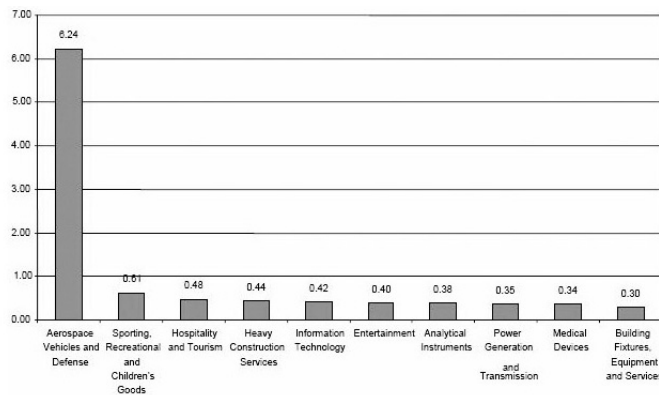
국방과학클러스터 내 하위부문은 우주항공 엔진분야(항공기엔진, 정밀금속)와 미사일과 우주선, 그리고 방위무기에 집중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 항공기, 미사일, 우주선의 제조 ii) 우주항공 엔진, 추진체계(propulsion), 보조기기 또는 부품의 제조 iii) 우주항공 생산품의 시제품(prototype)의 개발과 제조 iv) 항공기 개조 v) 항공기 또는 추진체계의 분해수리와 개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투산은 미사일과 우주선 서브클러스터가 발달되어있다. 투산의 국방과학클러스터 내 미사일·우주선 서브클러스터 종사자 수를 미 전역의 메트로폴리탄 지역과 비교하면, 캘리포니아 주 산호세-서니베일-산타바바라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뒤 이어 2위에 랭크되어 있다. 투산의 미사일·우주선 서브클러스터는 2004년 1만7천5백 명을 고용하였으며, 입지계수는 94.85로 미 전역에서 가장 높아서 미사일·우주선 서브클러스터가 투산에 매우 특화되어있음을 보여준다(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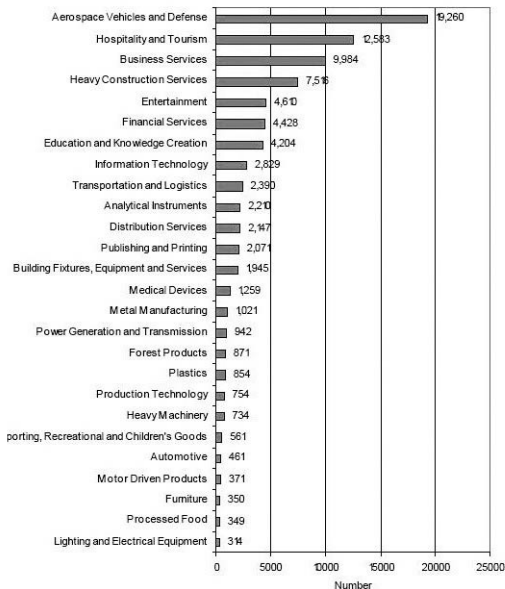
9) 두 지역의 국경을 넘는 우주항공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은 고급의 두뇌자원 풀을 형성·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미 MEXUS 학위프로그램(SDSU/UABC/CETYS/Southwestern College), 아리조나 주립대학과 Tec de Monterrey간의 교육 파트너십 등을 통해 수행된 바 있다.

10) 레이턴 미사일 시스템은 우주항공 근로자의 60%, 우주항공 엔지니어의 80%를 고용하고 있다.

Source: (The KMK Consulting Team, 2006)



〈그림 5〉 Tucson의 상위 20위 클러스터: 전국 클러스터 종업원수 대비 (2004)



〈그림 6〉 Tucson 지역내 클러스터 종업원수

〈표 5〉 미사일·우주선 서브클러스터 순위 (메트로폴리탄)

Rank	Metropolitan Area	2004 Total Employment	2004 Share of National Employment	CAGR of Employment 1990-2004	2004 Employment Location Quotient
1	San Jose-Sunnyvale-Santa Clara, CA	13,280	28.383	-5.32	15.23
2	Tucson, AZ	17,690	25.2897	6.24	94.65
3	Los Angeles-Long Beach-Santa Ana, CA	12,346	17.8416	-9.99	3.86
4	Denver-Aurora, CO	7,500	10.8365	-5.87	11.94
5	Dallas-Fort Worth-Arlington, TX	3,900	5.636	0.26	2.84
6	Huntsville, AL	1,870	2.7024	-7.11	20.45
7	Sacramento-Arden-Arcade-Roseville, CA	1,760	2.5434	-5.23	4.27
8	Houston-Baytown-Sugar Land, TX	1,750	2.529	-0.83	1.45
9	New Orleans-Metairie-Kenner, LA	1,750	2.529	-5.41	5.49
10	Washington-Arlington-Alexandria, DC-VA-MD-WV	1,300	1.8787	-8.85	0.92

투산의 국방과학클러스터는 1997년~2006년 2,607명의 고용창출을 하였으며, 지역특화를 나타내는 입지계수는 5.85에서 8.36으로 증가하여 그 특화 정도가 심화되었다. 2004년 기준 투산의 국방과학클러스터 종사자의 평균 연봉은 8만2천 달러로 미국 평균 연봉 6만6천 달러보다 매우 높다(표 6). 미래의 투산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로서도 국방과학클러스터가 1만9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표 7).

〈표 6〉 클러스터 별 고용창출, 1997-2006

Title	Employment		Change 1997-2006	Location Quotient		Change 1997-2006
	1997	2006		1997	2006	
Metal Ore Mining	2,161	2,180	20	17.08	25.36	8.27
Aerospace Product and Parts Manufacturing	8,188	10,795	2,607	5.85	8.36	2.50
Business Support Services	4,860	8,513	3,653	2.52	4.06	1.42
Computer and Peripheral Equipment Manufacturing	1,652	1,934	282	2.07	3.48	1.41

〈표 7〉 Tucson의 미래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 후보군

Technology-Driven Manufacturing Clusters	Employment
Aerospace Vehicles, Engines and Defense	19,270
Analytical Instruments	3,210
Medical Devices	1,259
Biopharmaceuticals (Emerging) (Battelle data)	3,003
Environmental Technology (Emerging) (Harris data)	955
Total	25,698
Advanced Services Clusters	Employment
Education and Knowledge Creation	4,204
Information Technology	2,829
Business Services	9,984
Financial Services	4,420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2,390
Distribution Services	2,147
Heavy Construction Services	7,616
Total	33,490
Travel and Tourism Clusters	Employment
Hospitality and Tourism	12,503
Entertainment	4,610
Total	17,113
Other Promising Manufacturing Industries	Employment
Publishing and Printing	2,071
Building Fixtures, Equipment and Services	1,945
Medical Research Labs (Battelle data)	1,100
Metal Manufacturing (Precision)	1,021
Power Generation and Transmission	942
Plastics	854
Production Technology	754
Processed Food	349
Lighting and Electrical Equipment	314
Communications Equipment	114
Total	9,464

〈표 8〉 투산 내 주요 우주항공 국방과학 산업체

Company Name	Year Estab.	Sales Amount	Emp	Location Type	Owner ship	Primary Line Of Business
Learjet Inc		\$252,019,800	900	Branch	Private	Mfg Aircraft/Airport Services
Aircraft Restoration & Mktg		\$250,000	8	Single Location	Private	Aircraft Restoration Part Sales
Manson Co Inc	1948	\$100,000	4	Single Location	Private	Mfg Aircraft Engine & Engine Parts
Be Aerospace Inc	2002	\$22,001,420	140	Branch	Public	Manufactures Commercial Jet Interiors
Securaplane Technologies Inc	1985	\$18,497,748	120	Single Location	Public	Manufactures Aircraft Parts & Equipment
Christopher Miller		\$59,000	1	Single Location	Private	Aircraft Parts
Raytheon Missile Systems Co	1992	\$1,132,500,000	7,400	Head-quarters	Public	Manufactures Guided Missiles & Space Vehicles
Raytheon Lockheed Martin	1989	\$11,000,000	111	Head-quarters	Private	Manufactures Guided Missiles & Space Vehicles
Raytheon Fire Department		\$1,500,000	26	Single Location	Private	Manufactures Guided Missiles & Space Vehicles

Source: Harris Selectory, DTIA analysis

투산 국방과학클러스터에 입지한 주요 산업체는 레이턴 미사일 시스템, 린젯 등 9개 업체이다. 이들 산업체는 항공기제조, 항공엔진 제조, 항공서비스, 미사일, 우주선 등을 생산한다. 국방과학 산업의 수요는 미국 국방비 예산, 항공 트래픽, 새로운 상업용 항공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경제환경에 의해 조정된다.<sup>11)</sup> 하지만 현재 투산의 국방과학 산업에서는 연방정부 특히 국방성이 가장 큰 고객이다.<sup>12)</sup> 그 예로서, 미사일 제조업체인 레이턴 미사일시스템의 수입 중 75%가 연방정부로부터의 계약에 의한 것이다.

11)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누리는데 반해, 중소기업은 주요 계약자를 위한 선택된 부품 제조에 효율적으로 집중함으로써 경쟁하고 있으며, 시스템통합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12) 정부 조달계약은 군사용 항공기, 위성, 미사일 시스템 등 군의 필요를 발표하면서 시작된다. 기업은 해결책과 디자인에 대한 설명, 예상 비용 등을 담아 입찰에 참여한다. 군의 계약은 의회의 자금 가용성의 지속성에 의해 수행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취소될 경우, 기업은 납품 상품에 대한 구매가, 당시까지 소요된 인건비, 약간의 이익금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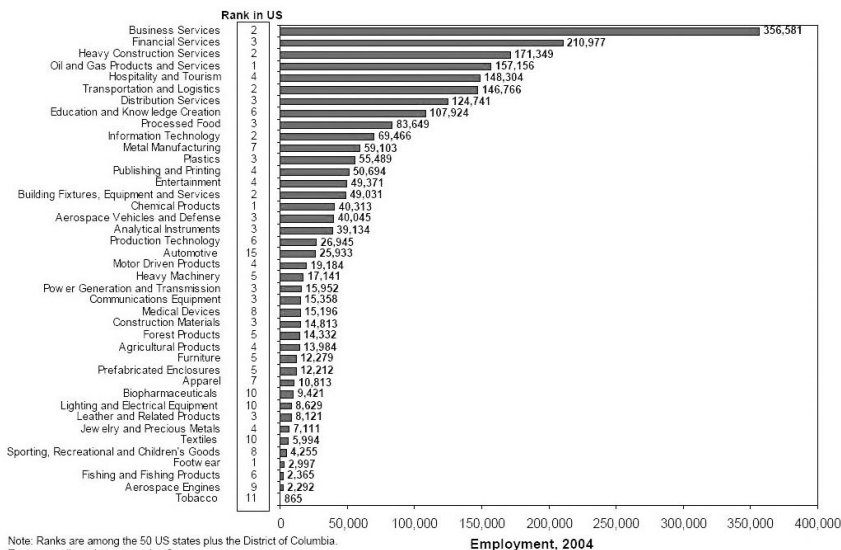
## 텍사스 (Texas)

텍사스는 유인 항공기의 발명 이래, 우주항공과 국방의 첨단에 서 왔으며, 혁신과 산업의 첨단지역이다. 쌍엽기에서 우주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항공기가 텍사스에서 탄생하였다. 텍사스의 우주항공과 항공 산업은 1천700여 개의 기업에서 2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sup>13)</sup>

2004년 텍사스 주지사 페리는 장기적, 전략적 일자리 창출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정부가 집중적으로 장려할 6개의 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였다.<sup>14)</sup> 그 중 하나가 우주항공과 국방클러스터이다. 최근의 연방정부 기금과 민·관으로부터의 장래 투자경향으로 볼 때, 국방과학클러스터는 경제발전 가속을 위한 투자 대상이 되었다.

텍사스 내 클러스터 별 고용자 수를 살펴보면, 2004년 현재 기업서비스클러스터가 35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국방과학클러스터는 4만여 명을 고용하여 텍사스 내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텍사스주의 국방과학 클러스터는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 순위에서는 3위를 차지한다(그림 7).

〈그림 7〉 텍사스 내 클러스터 별 고용(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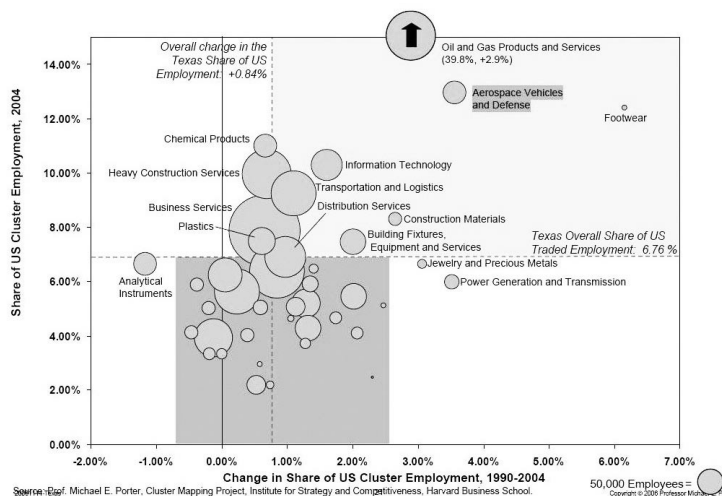


13) 텍사스의 주요 우주항공·항공산업 기업은 아메리칸 에어라인, 콘티넨탈 에어라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익스프레스 젯, 아메리칸 유로컴터, 보잉사, 존슨 스페이스 센터, 록히트 마틴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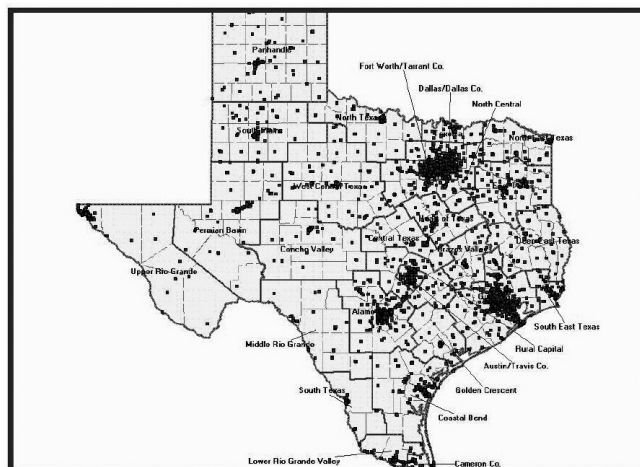
14) 첨단테크노로지와 제조업클러스터, 우주항공과 국방클러스터, 생명공학, 정보·컴퓨터테크놀로지클러스터, 정유·화학클러스터, 에너지산업클러스터



국방과학클러스터는 미 전역에서 급속한 성장 경향을 나타낸다. 이 경향은 각종 클러스터들의 미국 전역 대비 비중과 그 비중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국방과학클러스터는 그 비중이 높고,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8). <그림 9>는 텍사스인력위원회(TWC)가 작성한 지도로서, 텍사스 주의 주요 국방과학클러스터의 분포를 보여준다. 국방과학클러스터 시설들은 달라스-포트워스(Fort Worth)지역과 오스틴, 샌안토니오, 그리고 휴스턴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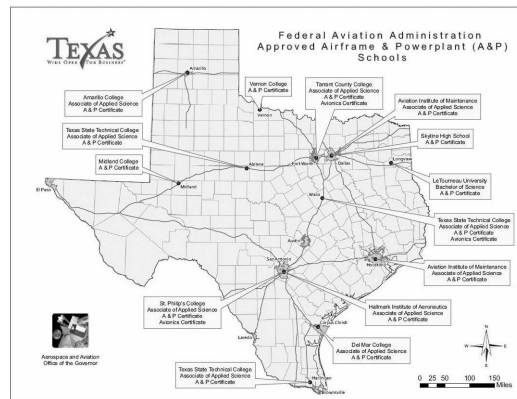


<그림 8> 클러스터 특화(1990-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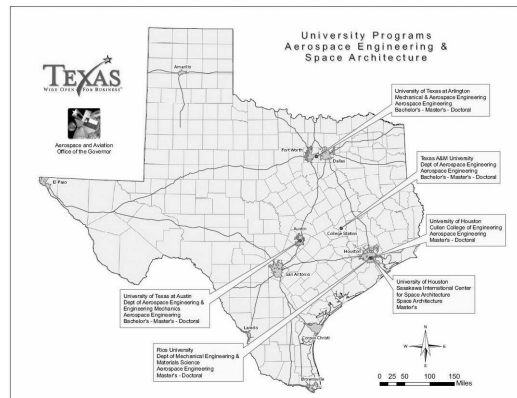


<그림 9> 텍사스 주의 국방과학클러스터 분포

텍사스 주에서 국방과학클러스터의 형성을 가능케 한 것은 양질의 노동시장과 교육환경, 기업 간 협력과 전략적 파트너십, 그리고 기업친화적 환경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텍사스 주정부는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래의 노동시장에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인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그림 10, 그림11).<sup>15)</sup>



〈그림 10〉 미국 FAA 승인 항공기 기체, 동력장치 교육기관



〈그림 11〉 우주항공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대학

15) FAA 승인 관련교육기관은 엘링턴 칼리지, 텍사스주립 테크니컬 칼리지, 미드랜드 칼리지, 버논 칼리지 등 14개 교육기관으로, 텍사스 주요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우주항공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을 교수하는 대학교는 University of Arlington, TexasAM, 휴스턴 대학교, 라이스 대학교,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등 6개 대학교이다.

둘째, 텍사스신규기술기금(Texas Emerging Technology Fund)을 설립하여 기술이전과 연구개발성과의 상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셋째, 항공 및 방위산업클러스터 참여주체간 협력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공유함과 동시에 혁신창출센터(Create Center of Innovation)를 통해 관련 주체간 네트워크 강화 및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있다. 넷째, 신규시설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기업친화적인 텍사스 주 정책, 물류와 유통과 같은 강력한 공급사슬의 구축 등을 통해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정책적 시사점

이상 미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추출된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과 발전에는 정부, 민간기업, 경제협력체, 대학·연구기관 사이의 밀접한 협력과 의사소통, 공동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절에서는 정부, 민간부문, 대학·연구기관 별로 나누어 각 섹터가 국방과학클러스터의 구축과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

### 1. 정부의 역할

국방과학클러스터의 성공적 구축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민간 경제행위주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다. 여기에서는 정부의 역할은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그림 12). 정부는 기업전략과 경쟁, 수요조건, 투입요소조건, 관련·지원 산업의 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업 전략과 경쟁’ 측면에서 정부는 지역 내 경쟁저해 요인제거, 외부투자유치, 관련 정부부처의 조직, 관리를 수행해야 하며, ‘수요조건’에서는 제품보증, 클러스터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클러스터가 생산한 상품, 서비스에 대한 주요고객의 역할을 수행한다. ‘요소조건’에서는 전문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육성, 클러스터가 요구하는 전문화된 교통, 정보 기타 하부구조의 개선을 수행하여야 한다. ‘관련·지원산업’에서는 클러스터 참여기관의 포럼의 지원, 클러스터 지향 자유무역지대 조성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2. 민간부문의 역할

민간부문은 정부, 대학, 연구기관과 협동작업을 통하여 클러스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역박람회를 통한 마케팅, 클러스터 마케팅, 실험·표준을 위한 지역조직 구성, 대학교와 함께 전문화된 직업기술 관련 교과과정 개발, 연구센터 후원, 클러스터 기반의 무역협회 설립 등의 역할이다.(그림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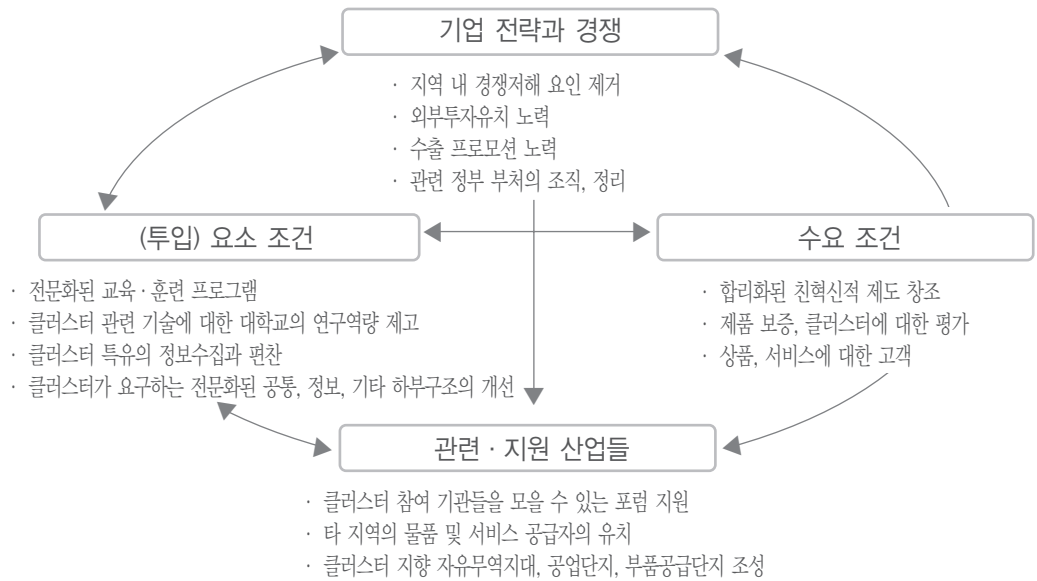
클러스터를 구축·발전시키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혁신 네트워크이다. 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업-정부-대학교-연구기관, 기업 간의 협력과 공동학습이다.<sup>16)</sup> 과거, 연방정부와 민간기업이 "허브와 스포크" 관계를 이루며 협력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기업들간에도 활발한 상호작용이<sup>17)</sup> 이루어지는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민간기업간의 협력과 공동-기술개발의 혁신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모험자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에 더불어 회사대표의 역할 역시 중요한데, 기술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장차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예측하고 모험자본을 동원하는 일은 바로 회사대표의 비전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에서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주체가 '사업자연합 (industry association)'이다.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과 발전을 위해서, 사업자연합은 전통적인 대정부 로비 방식 등에서 벗어나, 무역과 규제와 관련한 정부와의 협상, 정보의 수집과 전파, 인력 채용 분야, 교육분야-외부교육기관과의 밀접한 협력 및 특정 학과에 대한 후원 등- 대학교와의 파트너십 등 연구분야, 공동구매 등 조달분야, 환경 등 여러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표 9). 미국의 사례에서 중요한 사업자연합은 아리조나에서 역할을 수행한 AMIT가 있다.<sup>1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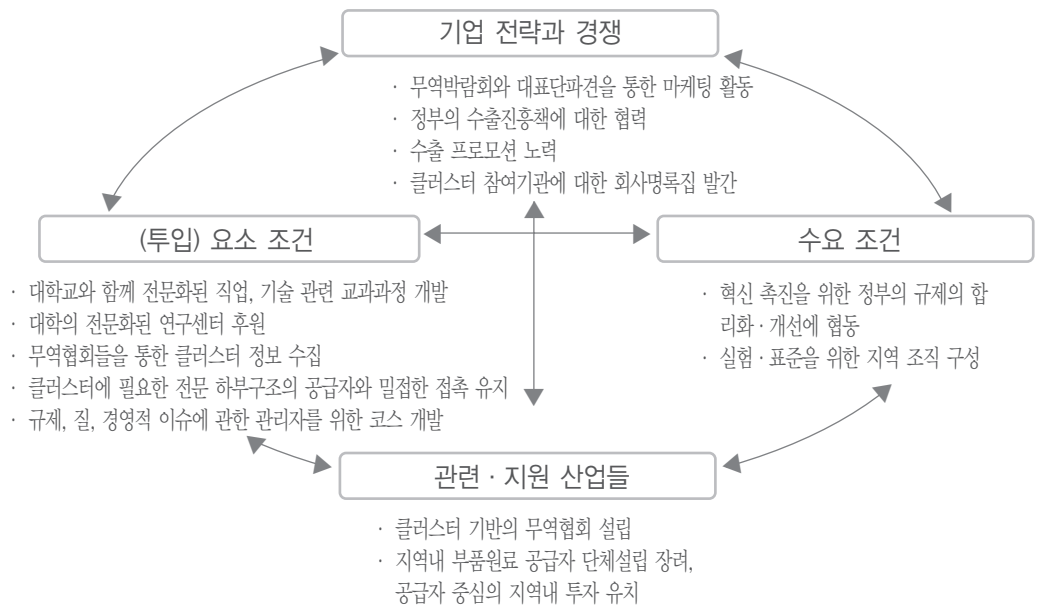
16) 예로서, 1990년대 초까지 워싱턴 지역에 입지한 첨단기술 분야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연방정부, 특히 국방성과 기술개발계약을 통하여 기술혁신 과정에 참여하였다. 연방정부와의 협력은 첫째, 특정 서비스나 연구를 위한 정부의 특별한 요구에 응하는 경우, 둘째, 정부의 기술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 셋째,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장차 필요로 할 것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파악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연방정부에 접촉하고 후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등이다. 1990년대 초에는 첫 번째의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가 전체협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변화하였다. 이는 혁신네트워크를 주도하는 주체가 연방정부 일변도에서 민간기업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17)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학교 기술혁신센터에서도 인력훈련은 물론 신기술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조직, 기업간의 기술개발협력을 위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지역 내 기업들간의 공동 학습과 협력을 통한 혁신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18) AMIT는 2005년 남부아리조나 산업·우주항공연합(SAIAA)과 남부아리조나 정보통신연합(ITSIA)이 합병되어 만들어진 비영리 조직이다. AMIT의 임무는 아리조나 외부기업과의 상거래 창출, 남부아리조나의 우주항공·제조업·정보통신기술의 성공을 위한 프로모션 활동이었다. 이를 위해 AMIT는 경험의 교환, 전문가집단의 육성, 네트워크 기획의 제공, 클러스터내의 필요에 대한 정부와의 대화에서 대변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그림 12〉 국방과학 클러스터 구축과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그림 13〉 국방과학 클러스터 구축과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

〈표 9〉 사업자연합의 역할

전통적인 역할	새로운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정부 로비</li> <li>◆ 네트워킹을 위한 회의 소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와 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과 규제</li> </ul> </li> <li>◆ 정보수집과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정기적인 벤치마킹</li> </ul> </li> <li>◆ 합동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무역박람회, 대표부 파견</li> </ul> </li> <li>◆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관리자를 위한 교과과정</li> <li>- 외부 교육기관과의 밀접한 협동</li> <li>- 특정 학문분야에 대한 후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대학과의 파트너십</li> <li>- 표준화와 실험</li> <li>- 연구기관의 전문화</li> </ul> </li> <li>◆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합동 구매 프로그램</li> </ul> </li> <li>◆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실험 프로젝트</li> <li>- 연구 후원제도</li> </ul> </li> </ul>

### 3. 대학교·연구기관의 역할

국방과학클러스터의 구축과 발전을 위해서, 대학교와 비영리 연구기관들은 자신들이 클러스터의 한 일부이며 지역기업 환경의 일부라는 인식을 가지고 클러스터 내에 입지한 기업, 다른 연구기관들과 활발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주요역할은 기업·연구기관과의 협동을 통한 지식의 창조와 전파, 인력개발, 그리고 경쟁 이니셔티브의 촉진 등이다. 이를 통해 대학은 그들이 입지한 지역기업환경을 업그레이드하는 데에 더욱 연계가 되며 이를 통해 달성된 지역의 풍요로움은 다시 대학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 즉 교수진과 학생들의 유치에 유리해지며, 연구, 교육에 있어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맺음말

이상 미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추출된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과 발전에 필요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활동의 집적과 기업간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생산 활동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고차 서비스기능, 즉 금융, 회계, 디자인, 광고, 법률, 경영자문 등의 지식집약적인 서비스 활동과, 정보화된 오피스 빌딩,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같은 지원하부구조가 필요하다. 셋째, 새로운 벤처기업과 첨단시설기업, 특히 모험자본의 공급이 필요하다. 넷째, 클러스터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제품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공동 연구개발활동을 통한

공통학습과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앙 및 지방정부의 기업친화적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국방과학클러스터의 구축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클러스터 개념을 정부의 간섭과 산업정책의 포장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보조금이나 경쟁의 회피를 지향해서는 안 된다. 셋째, 신생 소규모 기업이나 전통적 클러스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넷째, 전혀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에 구축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잠재력이나 업그레이드하려는 의지보다 포괄적 분류(예, 고부가가치)에 기초하여 국방과학 클러스터의 서브클러스터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충남의 국방과학클러스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국방과학클러스터의 구축과 발전에 필요한 정부, 민간, 연구기관 등의 역할과 클러스터 구성의 필수 요소 및 주의 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충남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면 국방과학클러스터의 성공적 구축과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으며 충남 지역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1. 박삼욱 2002 : 네트워크세계의 산업 : 산업의 세계화와 국지화, 지리학 37, 111-130.
2. 박삼욱 2003 : 네트워크세계에서의 산업변화 : 워싱턴 대도시권의 혁신클러스터.
3. Camagni, R. editor 1991: Innovation Network: Spatial Perspectives. London and NewYork: Belhaven Press.
4. Census Bureau 2005: Annual Survey of Manufactures.
5. Graf, K. 2005 : Aerospace and Aviation, Presentation to Office of the Governor of Texas.
6. Kemper, R. 2006 : Promising Practices in Promoting Regional Innovation (www.compete.org).
7. Mason Enterprise Center 2001 : Forecasting the Greater Washington Economy: 2001. Fairfax, VA: George Mason University.
8. Massey, D., Quinlan, P. and Wield, D. 1992 : High Tech Fantasies: Science Parks in Society, Science and Space. London: Routledge.
9. Park, S.O. 1992 : Science parks: problems and strategies, 지역연구8, 27-40.
10. Potomac Knowledge Way 1998 : Building the New Economy: Implementing the InfoComm Revolution in the National Capital Area, Washington, D.C.: Bowne.
11. Porter, M.E. 1998 : Clusters and the new economics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77-90.
12. Porter, M.E. 2008 : Cluster Mapping Project, Institute for Strategy and Competitiveness, Harvard Business School.
13. San Diego Dialogue, California EDD.
14. Stough, R., Haynes, K. and Campbell, J.H. 1998 : Small business entrepreneurship in the high technology service sector: an assessment for edge cities of the U. S. National Capital Region, Small Business Economics 0, 61-74.
15. Stough, R.G. and Kulkarni, R. 2001 : Planning issues and the new generation technology economy: comparative regional analysis and the case of the U.S. National Capital Region. In Williams, J. and Stimson, R., editors, International Urban Planning Settings: Lessons and Success, Amsterdam, London NewYork, Oxford, Paris, Shannon, Tokyo: JAI: An Imprint of Elsevier Science, 395-430.
16. Texas Workforce Commission(TWC) 2006 : Quarterly Employment & Wage.
17. The KMK Consulting Team 2006 : Tucson Economic Blueprint; Strategic Analysis Report.
18. The Texas Industry Cluster Initiative 2005 : High Impact Implementation for an Innovation-Driven Economy.
19. <http://data.isc.hbs.edu/isc/index.jsp>
20. <http://www.defensenews.com>
21. <http://www.Economy.com>, DTIA Analysis
22. [http://www.governor.state.tx.us/divisions/press/initiatives/industry\\_cluster/industry\\_cluster\\_sp/](http://www.governor.state.tx.us/divisions/press/initiatives/industry_cluster/industry_cluster_sp/)
23. <http://www.texasindustryprofile.com/apps/gis/clustergis>
24. <http://www.texasone.us/site/PageServer?pagename=KeySectorAerospaceAndDefense>
25. <http://www.twc.state.tx.us>

# 충남관광의 과제와 발전전략

이인배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I. 서론

### 1) 새로운 관광환경에 적합한 관광 발전전략의 모색 요구

국제사회 변화의 사회·문화 환경으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광시장의 확대, 기술개발과 신관광산업의 성장, 관광협력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개발과 新관광(new tourism)의 관심 증대 등이 있다.

정치·경제환경으로는 세방화(Glocalization)의 진행과 관광 경쟁력 심화, 동북아와 국내외 관광수요와 공급 증가, 신흥시장(BRICs)의 등장과 관광시장 영향,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증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환경 변화의 사회·문화 환경으로는 KTX개통과 주40시간 근무제 실시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대, 가치관 변화와 관광수요의 다양화·다변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건강과

환경 중심의 생활양식 확산 등이 있다(문화관광부, 2007).

### 2) 충남 관광수요를 반영한 장기적 목표와 관광정책의 방향 제시

전국민여행실태조사에 의한 충남의 관광점유율은 숙박관광이 2005년 9.8%에서 2020년 12.5%까지 증가되며, 당일관광은 2005년 8% 수준에서 2020년 10.2% 수준까지 증가하여 충남지역은 당일관광객보다 숙박관광객의 비율이 훨씬 더 높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1일 평균 목적지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점진적으로 선진국형 단일목적지 체류형 관광형태가 일반화되는 추세이다(이인배·최영문, 2006). 충남의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관광객 수요변화 특성을 반영한 장기비전과 관광목표를 설정하

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광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 3) 관광수요와 공급측면에 고려한 지역 관광정책의 추진 필요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사회는 여가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다. 이에 국민들의 여행활동이나 관광체험 추구가 증가했고, 동시에 여가권이나 관광인식이 대폭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수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소득과 여가시간의 증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삶의 질 향상추구로 인해 관광객의 욕구가 다양한 체험을 요구하고 있고, 주5일근무제의 도입으로 주말을 전적으로 여가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점차 여가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었고, 사회적 가치관이 가족중심주의로 흐르면서 개성관광의 추구하고 함께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특별관심관광(SIT)을 통하여 가족단위로 체험에 나서고 있다. 또 이를 통해 기분전환과 동시에 노동에서 찾을 수 없는 생의 다양한 후면적 의미와 지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지자체 단체장은 관광산업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얼마간의 가시적이고 정략적 개발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무엇보다 관광개발을 통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나아가 문화시설의 확충 및 여가공간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일차 목적이다.

이는 한국의 산업구조가 3차 산업으로 개편 과정에 있고 이제 1차 산업이나 제조업이 한국적 상황에서 경쟁력을 상실해간다는 반영이기도 하다. 더불어 최근의 관광 붐은 여타 산업과 협업함으로써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관광산업이 가지는 내생적 장점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 4) 최근 문화관광개발정책과 사업평가에 의한 관광자원개발 추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역관광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법정계획은 현재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으로 각 시·도별로 수립하고, 추진하나 이들 계획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의 관광개발사업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와 기초단체의 관광자원 개발사업인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과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은 2006년부터 사업평가와 진단을 통하여 관광자원 개발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관광지 개발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국 227개 중 203개소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충남은 총 25개 관광지 중 22개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평가에서 전국에서 문화관광개발사업은 178개중 158개,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은 24개 사업인데, 이중 충청남도는 문화관광자원개발 9개사업,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3개 사업이 대상이었다.

이상과 같은 추세로 볼 때, 충남에서도 관광발전을 위한 관광동향과 수요를 전망하여 향후 충남의 관광개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외의 관광환경의 변화, 장기적인 관광발전을 위한 과제의 제시와 충남의 관광발전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Ⅱ. 충남 관광수요와 관광개발의 과제

### 1. 관광정책의 변화와 동향

#### 1) 신관광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선진국형 관광문화의 정립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녹색관광, 농촌관광, 자연관광, 생태관광, 모험관광 뿐만 아니라 대안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책임 관광, 소집단관광, 연성관광 등 다양한 관광개발방식이 등장하였다.

특히, 이들 관광형태와 개발방식을 통합 신관광(new tourism)은 관광의 양적, 질적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국가 및 지역발전을 모색하려는 한국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관광형태이다.

또한, 관광과 산업간 복·융합, 유비쿼터스(ubiquitous), 관광 테크놀로지(tourism technology), 관광인적자원에 기반을 둔 국내 관광의 활성화는 21세기 글로벌 관광시대를 맞이하여 선진형 관광산업을 구축할 수 있는 기본토양이 될 수 있다.

## 2) 국가 관광정책변화의 효과적 해결 수단

국내 관광의 활성화는 종래 인바운드 중심의 관광정책에서 국내관광을 중심으로 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간 선순환적 성장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내관광 활성화는 인바운드 관광객의 유치, 아웃바운드 관광수요의 적정화에 기여함으로써 관광부문간 균형발전을 선도하여 국내관광 여건이 갖추어져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떠 나가고, 외국 사람이 더 들어온다는 인식이 확산된다.

또한, 정부의 각종 관광진흥시책, 지역활성화 시책의 추진에 따라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역할이 커짐에 따라 국내관광의 육성은 국내산업의 소프트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며, 지역 및 국가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기여할 수 있다.

## 3) 신관광 시대 국민·지역·국가발전의 기여도 제고

국내관광의 활성화는 주5일 근무제 시행, 해외여행의 보편화 등 국내 관광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고품질 관광상품의 개발을 위해서도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의 관광수용태세는 취약한 상황으로 해외여행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관광자원 및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국민의 관광욕구(needs)를 따라오지 못하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등 수용태세는 국내관광 혁신을 위한 중요한 당면과제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국내 관광활성화는 점차 해외로 이전되는 국민의 관광수요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지역경제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국가적인 측면에서 소득 및 고용창출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4) 양적 대중관광에서 질적 대안관광으로의 전환에 기여

국민생활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웰빙과 로하스(LOHAS)를 지향함에 따라 국내관광 부문도 양에서 벗어나 질적 관광으로 근본적인 환골탈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관광이 종래와 달리 단순 휴식과 기분전환을 넘어서 체험과 교육 등 가치지향적인 방향으로 전개됨에 따라 국내관광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경제사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소비자집단이 출현하는 등

소비유형이 유기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광기업들의 연구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국내관광 활성화는 관광시장의 확산뿐만 아니라 관광행동, 관광개발, 관광마케팅, 관광정책 등 제반 관광 행태에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한국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심원섭, 2007)

## 2. 충남의 관광수요 전망

충남 관광객수 수요 전망은 충청남도 관광객수(인회/지점) 수요에 국민여행실태조사의 숙박관광과 당일관광 변화율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2005년에는 당일관광이 절반을 차지하다 점차 감소하여 2020년에는 22%의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충남 관광점유율을 활용하여 충남의 관광객수(인회/지점)에 대한 숙박관광객수와 당일관

광객수 변화추이를 계산한 결과, 2005년 숙박관광객 56,682천명, 당일관광객 28,636천명에서 2015년에는 숙박관광객 90,143천명 및 당일관광객 23,841천명, 그리고 2020년에는 숙박관광객 111,751천명 및 당일관광객 23,929천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숙박관광객이 증가폭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여행실태조사의 관광객수(인/일) 개념과 충남통계연보상의 관광객수(인회/지점)를 비교할 경우,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1일 평균 목적지수는 2005년 2.4지점의 관광지 방문에서 2010년 1.7지점의 관광지 방문, 2015년 1.6지점의 관광지 방문 및 2020년 1.6지점의 관광지 방문 수준까지 떨어져서 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을 머무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점진적으로 선진국형 단일목적지 체류형 관광행태가 일반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충남 숙박관광과 당일관광 수요 변화 전망

(단위 : 천인, 지점)

구 분 \ 년 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관광객수 (인회/지점)	충 남	숙 박	56,682	65,992	81,073	96,825
		당 일	28,636	28,223	32,911	38,854
		소 계	85,318	94,215	113,984	135,679
충남 관광 1일당 목적지수(지점)			2.4	1.7	1.6	1.6

자료 : 이인배·최영문(2006), 충청남도 관광수요 변화분석과 대응과제

### 3. 충남 관광발전의 과제

#### 1) 관광객과 관광자원의 편중성 극복

##### (1) 지역에 편중되는 관광객의 균형적 배분 유도

충청남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중 권역별로 구분해 보면<sup>1)</sup>, 해양관광권이 57.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내포문화관광권 18.7%, 역사온천관광권 11.7%, 백제금강문화관광권 7.9%, 대도시근교권 2.9%로서 서해안 중심의 해양관광권에 57.4%가 편중되어 관광객이 방문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보령, 서산, 태안, 홍성 등이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해양관광권과 내포문화관광권이 서해안고속도로의 영향으로 관광객 방문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분석될 수 있으나 최근 서해안 유류유출사고로 관광객의 증가가 일시적이거나 정체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 편중되는 관광패턴을 충남지역으로 고르게 확산하는 관광수급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 (2) 관광자원의 분포 특성에 대응하는 효율적 관리와 운영 필요

충청남도의 관광자원군 분석에서 자연형 관광자원의 비중이 높은 지역(보령시, 태안군), 인문자원의 비중이 높은 지역(공주시, 부여군), 레저자원의 비중이 높은 지역(아산시, 부여군, 당진군), 시설자원의 비중이 높은 지역(천안시, 아산시), 기타 차별화된 자원군을 발견하기 어려운 지역(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과 같은 5가지로 분포특성이 있다.

따라서 충남의 시군별 관광자원 분포의 차별화된 특성을 발견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던 지역의 경우 관광자원 환경과 사회 및 경제여건을 고려한 관광개발과 관리·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차별화된 특성이 발견되는 지역의 경우 기존의 관광매력성을 연계할 수 있는 전략적인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임명제, 2007)

#### 2) 계절적 집중의 분산과 4계절 이용 확대 필요

##### (1) 하절기 중심의 관광객 집중현상을 4계절로 이용패턴 분산

충청남도의 계절별 이용성향에서는 봄 16.3%, 여름 52.1%, 가을 19.9%, 겨울 11.7%로 관광객수의 이용비율은 겨울을 제외하고,

1) 권역별 구분은 「충청남도 3차종합계획변경계획」과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서 적용함



행락철인 봄과 가을보다는 휴가철인 여름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계절적인 편중성을 극복하고 4계절 방문할 수 있는 관광목적지로서 관광자원의 개발과 프로그램의 발굴·육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해수욕장 집중에서 다양한 역사·자연 관광자원에 분산 유치 필요

충청남도는 관광객들이 하절기 중심의 해수욕장 이용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2005년 85,318천명의 관광객중 해수욕장 이용객이 27,058천명으로 31.7%가 해수욕장에 집중되고 있다. 해수욕장은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당진군에 총 36개소가 분포하며, 태안군과 보령시가 가장 많이 방문하고, 홍성군은 해수욕장이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편중되게 방문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충청남도는 하절기 중심형 3계절 이용형태의 관광목적지이며, 계절별로 방문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과 공간의 개발뿐만 아니라 관광코스와 활동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해수욕장 이용객수와 여름철 이용객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때 여름철 이외에 다른 계절에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자체적인 수용대책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3) 관광자원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추진 필요

### (1) 관광수요와 공급분석에 의한 공간개발의 효율적 추진

충남 관광공급은 관광공간과 시설들이 지정되어 왔으나 실제 조성실적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충남에 체류하는 관광객들이 숙박하는 장소로 민박과 펜션, 모텔과 여관이 이용되고 있어 차별화되면서 고급화된 숙박시설의 확충도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용교통수단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자가차량을 이용하나 일부

〈표 2〉 충청남도 관광수급 분석

(단위 : 천명)

구 분	2005년	2010년	2020년
공급능력	647	763	1,037
최대수요	997	1,100	1,585
수급비교	△350	△337	△547

자료 : 충청남도(2006),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의 관광객이 전세와 관광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교통편의시설과 교통수단에 대한 대안의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 관광지 수급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관광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에는 동시수용력에 의한 부족분이 547천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관광시설과 공간의 효율적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 3〉 관광개발 자원유형과 규모 비교

(단위 : km<sup>2</sup>)

구 분		전 국				충 남			
		1996		2005		1996		2005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자연 공원	국립공원	20	6,473.1	20	6,579.85	2	390.138	2	384.312
	도립공원	20	730.4	23	783.82	3	78.443	3	92.07
	군립공원	27	239.4	33	441.43	1	1.95	1	1.95
	소 계	67	7,442.9	76	7,805.1	6	470.531	6	478.33
관 광 지		153	180.2	225	153.802	20	11.942	25	13.499
관 광 단 지		8	40.4	15	104.46	-	-	-	-
휴양업(종합/전문)		28	25.9	34	34.61	1	1.762	3	2.11
체육 시설	골 프 장	96	112.3	191	193.93	3	3.495	5	5.319
	스 키 장	11	11.3	14	16.42	-	-	-	-
	요 트 장	1	0.023	1	0.023	-	-	-	-
	승 마 장	4	0.037	24	0.292	-	-	3	-
	소 계	112	123.66	230	210.665	3	3.495	8	5.319 <sup>5)</sup>
도 시 공 원		9,326	885.885	10,459	1,021.102 <sup>1)</sup>	610	50.877	638	53.919 <sup>2)</sup>
청소년수련시설		432	13.0	687 <sup>3)</sup>	-	37	1.067	40	-
유 원 지		164	125.0	234	-	7	2.212	21	-
자 연 휴 양 림		61	1,115.4	98	1,188.96	7	19.610	12	27.959
관 광 농 원		294	7.3	392	-	41	0.902	37	-
온 천 지 구		86	134.9	135	187.126	10	9.524	12	10.002 <sup>4)</sup>
합 계		10,731	10,094.545	12,585	10,705.825	742	571.922	802	591.138

주 : 1) 행자부, 한국도시연감, 2005 2)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5 3)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2005

4) 2004년 자료, <http://tour.go.kr/> 5) 승마장 면적 계산 안 됨

자료 : 1) 문화관광부(2006),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구성, 2) 통계청(2005), 한국통계연감

3) 충청남도(2005), 충남통계연보 4) <http://tour.go.kr/>

〈표 4〉 충청남도 관광권역별 관광객 증감율 분석

(단위 : 명, %)

구 분	1996년 관광객수(명)	2005년 관광객수(천명)	연평균증가율(%)
해양관광권	20,755,450	48,978,931	10.0
백제금강문화관광권	4,494,893	7,953,309	6.5
내포문화관광권	4,771,279	15,987,829	14.4
역사온천관광권	8,759,553	9,946,247	1.4
대도시근교권	700,488	2,452,193	14.9
계	39,481,663	85,318,509	8.9

## (2) 관광자원의 유형과 규모에 적합한 공급방안의 마련

앞 〈표 3〉의 관광자원 개발규모 비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앞으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레저스포츠 시설과 공간이나 가족단위의 체험형의 관광자원이 충청남도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공급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4) 관광객의 행태변화에 적합한 능동적 관광정책의 추진 요구

### (1) 관광객의 이용수요를 고려한 관광지원시설의 활성화 필요

주5일 근무제와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 등에 따라 충남 관광환경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에 따른 지역 관광객의 증감률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근교권이 14.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충남은 전국에서 숙박여행지로서 4위를 차지

하고 있으나 관광호텔업 등록은 전국 20,694실 중 886실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3%로서 숙박시설이 부족하며, 관광숙박시설도 18개 업체중 10개 업체가 아산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표 4〉의 분석과 같이 아산지역이 포함된 역사온천지역의 관광객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4%를 차지하고 있어 거의 정체된 상태에서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2) 자원특성과 이용수요에 적합한 관광공급 정책의 추진

앞의 〈표 4〉에서는 관광객이 지역별로 많이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해안권의 관광자원 유형별 수급분석에서도 자연휴양형, 레저스포츠형, 위락형, 해양형 관광공간과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표 5〉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앞으로는 해양의 시대를 맞이하여 해양관광 참여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의 서해안에서도 해양

〈표 5〉 해양관광 참여인구 및 전망

구 분	1997년	1998년	2000년	2003년	2010년
해양 관광 참여인구	74,143	72,129	84,404	92,060	116,431
해 수 욕	56,579	55,042	63,643	68,741	83,080
바 다 낚 시	5,200	5,059	5,849	65,78	8,658
해양스포츠	1,034	1,006	1,574	2,394	6,368
해양연관형	11,330	11,022	13,338	14,347	18,325

자료: 해양수산부(2003),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관광활동의 수요를 고려한 해양관광자원의 개발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3)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에 의한 관광산업 피해 대응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조선 기름유출사고는 일본 나훗카호(1997년)의 1.7배, 한국 여

수 씨프린스호(1995년)의 2.5배 규모로, 충남 피해 6개 시군지역은 충남지역 방문 관광객의 2/3 및 관광지출액의 73%를 점유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해외의 사례로 초기 유류유출량이 유사한 유럽 프레스티지호(2002년) 사건발생 후 1차년도 영향 Prestige호로 인한 익년도 관광파급효과에서 프랑스 남서해안은 사고 익년도에 프랑스

〈표 6〉 2000-2006년 충남 서해안 관광객수 변화추이 및 증감율

(단위 : 명, %)

년도	충남(전체)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당진군
2000	56,796,029	15,534,452	1,582,859	3,255,247	1,115,944	9,791,603	2,791,959
2001	55,284,467	12,898,383	1,586,427	2,535,613	779,278	11,150,097	3,354,602
2002	63,221,151	14,929,255	1,877,131	2,197,492	1,356,081	14,681,979	3,273,121
2003	65,861,111	15,093,676	1,922,637	3,299,755	1,577,359	14,923,253	3,673,094
2004	67,520,223	14,871,278	1,963,347	3,714,956	1,837,334	15,997,326	3,397,575
2005	85,318,509	19,156,053	2,421,684	10,133,478	2,323,354	19,689,400	4,450,435
2006	85,700,667	19,650,926	3,271,110	7,498,768	2,356,625	20,627,493	4,613,716
평균증감율('00-'06)	7.5	5.0	13.6	29.0	17.4	13.7	9.5

자료 :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1996-2004년) 및 한국문화정책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해안지역 관광객 예약율 50% 감소 및 관광산업의 60%가 전업하였고, 스페인 Galicia지방은 사고 익년도에 내국인 숙박여행객 15% 및 외국인 숙박여행객 20%가 감소하였다.

충남의 경우 기 관광수요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델파이조사를 통해 6개 시군의 관광객수요를 추정한 결과, 주요 피해지역인 태안군 관광객수는 2008년에 한 해 동안 약 40%정도 감소하고, 서해안 6개 시·군 전체로는 관광객수가 21.8%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전화위복 기회의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최영문, 2007).

## 5) 사회구조와 현대적 여행패턴의 변화에 맞는 관광개발 요구

### (1) 관광행태의 변화에 적합한 관광자원과 프로그램의 제공 필요

충남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대부분 주말이나 휴가 또는 방학에 이용하며, 1박2일의 숙박이 주류를 이루면서 자연명승 관람(1위), 휴양과 휴식(2위), 수변과 해변활동(3위) 등이 주요 관

광활동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관광자원과 시설은 총량적인 공급확대도 중요하지만 행태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관광자원과 시설의 공급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도 중요하다.

최근 농어촌체험관광과 자연휴양림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관광자원 개발로 변화하는 관광행태에 부응하면서 이들 수요자 변화에 충족시키는 관광활동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개성적인 관광활동의 추구하고 가족지향형으로의 관광활동 변화로 독창성 있는 저가형·가족형·체험형 관광개발, 특히 레포츠형과 같은 동적 관광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광자원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관광지를 방문하는 목적지수가 점차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에서도 관광활동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데, 2020년에는 1.6지점으로서 거의 한 목적지에서 다양한 관광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처럼 방문목적지수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표 7〉 충청남도 관광시 1일당 목적지수 변화

(단위 : 지점)

구 분	1999년	2005년	2010년	2020년
충남 관광시 1일당 목적지수	3.7	2.4	1.7	1.6

자료 : 이인배·최영준(2006), 충청남도 관광수요 변화분석과 대응과제

관광자원과 시설의 개발은 물론 다양한 관광프로그램과 관광코스의 발굴·육성이 필요하다.

## (2)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자원과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

주5일 근무제의 정착 및 관광여건의 변화에 따른 관광활동의 확대는 사회의 모든 계층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나,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관광여건의 차이로 인한 소득계층에 따른 관광활동의 양극화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가중이 우려된다.(윤양수·김의식, 2002)

따라서 충청남도에서 주5일 근무제와 노령화인구의 증가에 따른 충청남도에서도 기존의 다양한 관광객들을 수용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공간과 시설, 관광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 6) 관광수급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관광정책의 추진 필요

충남 관광권역별 관광객 증가의 분석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주5일근무제의 영향을 받는 해양관광권과 내포문화권, 대도시근교권 등은 관광객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반면, 역사온천관광권은 고속철도의 개통이 이루어졌고, 수도권과의 접근성은 개선되었으나 자가용 중심의

가족형 체험중심의 관광성향이 현대의 관광성향이기에 때문에 관광객의 증가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시설을 가지고 있어도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도 못하고, 관광객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지역의 관광환경여건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관광객의 방문을 촉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개선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체계화된 관광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Ⅲ. 충남 관광개발의 효율적 추진전략

### 1. 관광자원 개발과 관리의 체계성과 효율성 제고

#### 1) 권역별 거점 관광도시 육성과 연계 관광코스 개발

충남의 지역특성별 관광권역 설정과 대표적 특화 관광자원을 발굴·육성한다. 충남의 5대 관광권인 해양관광권, 내포문화관광권, 백제·금강문화관광권, 역사·온천휴양권, 대도시근교권 등을 관광자원 특성과 관광객 행태에 맞

도록 특색있고 다양한 관광명소를 특화하여 개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정채되어 있는 지정관광지 조성의 활성화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명소관광지를 육성한다. 그리고 테마형 역사 문화자원과 종교관광자원을 대상으로 관광편익시설의 조성과 다양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상품으로 제공한다.

더불어 충남 여러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생태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생태공원 조성 and 학습·교육·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또한, 농산어촌 어메니티자원의 관광자원화와 시골 재래시장을 주말형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응한 관광자원개발 및 이벤트 개최 등의 각 추진시책별 사업유형에 따라 세부시책과 개발사업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개발을 추진한다.

## 2) 관광기능을 극대화 하는 거점관광 도시와 개별관광지 개발

### (1) 충남의 관광거점 도시를 전략적으로 육성

관광도 시스템이다. 따라서 관광거점도시는 강한 집객력이 있는 독특한 매력을 갖추어야 한다. 보고, 사고, 먹고, 모이고, 쉬고, 관광도시를 거닐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는 즐

거움이 있는 콘텐츠도 구비해야 한다. 충남 역시 관광의 즐거움과 편의를 위한 교통, 안내 정보, 숙박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거점 기능을 하는 도시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충남관광의 허브관광도시로 개발한다.(김성진, 2006)

이를 위해 새로이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신도청도시를 국제적 수준의 문화관광도시로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하는 신 관광도시로 개발한다. 그리고 아산은 휴양과 웰빙 관광객을 위하여 온천이 집중한 도시에 온천·보양관광도시를 개발한다. 내륙으로는 백제문화권 중심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연계하는 배후지역에 역사문화관광도시를 개발한다. 서해안은 환황해권 관광거점 기능을 수용하는 서해안관광벨트 중심의 해양관광휴양거점 전진기지를 조성한다.

### (2) 다양한 소재의 명소관광자원 개발과 상호 연계 네트워크 구축

충남의 관광지뿐만 아니라 도시와 마을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위도와 기후대가 비슷한 지역의 세계적 관광명소는 대부분 도시 또는 마을이라는 사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충남의 기존 도시와 마을을 중심으로 소도읍과 관광마을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육성하고, 이를 거점관광도시와 연계하는 관광루트의 관광목적지로 개발한다.





〈그림 1〉 관광거점도시 개발구상도

자료 : 충청남도(2006), 충청남도 제3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그리고 특정지역으로의 관광객 집중을 완화하고 분산수용을 위해서는 관광소외지역에 대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 내륙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특산물이나 특색 있는 자원발굴을 통한 녹색농촌 관광마을 혹은 테마형의 관광휴양마을, 휴양펜션 빌리지 등과 같은 테마형의 관광마을이나 관광시설자원을 전략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더불어 지역방문객들을 분산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자원이나 관광매력 콘텐츠 자원의 개발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의 이용이 편리한 효과적인 관광네트워크의

구축과 함께 보다 다양한 관광매력 코스의 개발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관광객이 집중되는 서해안의 해양관광권과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네트워크 관광유인 루트를 개발하고, 충남과 연접하고 있는 자치단체와의 연계 이용망 구축을 통해 지역관광자원의 다차원적인 활용을 통해 관광객들의 집중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네트워크 전략 혹은 관광클러스터화 전략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 혹은 충북, 전북과의 광역관광연계망 구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지정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

문화관광부는 관광목적지로서의 자원성은 있으나 시설노후화 및 관광콘텐츠·프로그램 등이 미흡하여 매력도를 상실한 기존 관광지에 대하여 업그레이드 모델을 제시하고, 획일화된 관광지 조성·개발·이용행태 등을 지양하여 관광지 특성에 맞는 정비·관리·운영·홍보 및 연계관광지 개발, 관광 프로그램 다양화 등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 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를 선정 대상으로 하며, 시·도에서는 시·군·구 신청을 종합·조정하여 2개소 이내로 신청하고 이를 관광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관광지 리모델링 추진 위원회의 1차 서류 심사 및 2차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최종 1개소를 선정하면, 정부에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15억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 지원액의 50% 이상을 부담한다.

충청남도에서도 2007년 현재 25개소의 관광지가 지정되어 있고, 이들 관광지 중에는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한 관광지가 있으므로, 기존에 관광지 개발이 미흡하고 시설이 노후화된 지역은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 3) 관광시장 수요창출과 환기

#### (1) 하절기 중심의 관광패턴을 4계절형으로 분산 유치

충청남도의 관광객들은 계절적으로 이용하는 패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6월, 7월, 8월인 여름철에 52.1%를 차지하여 하절기 중심의 관광객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4계절로 이용패턴을 조화있게 분산하는 관광자원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추진한다.

##### ①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패턴 극복

충남지역 방문객들의 시기적, 계절적 편중은 그간에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이룩한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상품이 성공을 거두면서 여름철 관광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적 차원에서 볼 때 충남은 여름철에 선호되는 해수욕장과 같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시기적으로 하계 휴가 시즌이 이때 시작되어 해수욕을 즐기려는 관광객이 여름철에 집중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충남관광패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이에 이러한 계절적 관광편중 현상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계절별 테마관광자원의 전략적 개발 접목

충남관광의 계절적 편중성을 극복하고 나아가 4계절 방문할 수 있는 관광목적지로서 부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관광콘텐츠 자원의 개발과 더불어 계절별로 특색있고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된 관광프로그램 발굴 육성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절별로 수용이 가능한 다양한 관광자원과 시설공간의 개발뿐만 아니라 계절별 관광코스과 더불어 다채로운 관광활동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역의 자원분포를 감안하여 계절별로 특성화된 관광 드라이브코스를 개발하거나 계절별로 이용이 가능한 매력적인 휴양공간 등의 개발을 전략적으로 모색함으로써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③ 역발상을 통한 해수욕장 활용의 다차원화

여름철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해수욕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다른 계절에도 이용이 가능한 새로운 관광아이템을 발굴 접목하거나 주변 관광지나 관광자원과 연계한 활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겨울바다 갯벌여행, 해수욕장 연날리기 프로그램, 해수온수욕장 개발, 겨울바다 가족캠핑파이어 개최, 해양동굴수족관 건설, 겨울바다 보양식 상품개발 등의 역발상을

통해 보다 다양한 전략적 관광콘텐츠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해수욕장과 같은 해양관광자원 이용의 계절적 이용편중을 극복하고 나아가 지역관광자원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④ 가격차별화를 통한 충남관광 그랜드세일 전개

관광객의 관광수요는 관광자원 및 시설이용에 대한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 이에 충남관광이 4계절 방문목적지로서의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 관광객의 계절별 편중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비수기인 겨울철의 경우는 유휴관광자원 및 시설을 이용하여 가격할인을 통한 그랜드세일 마케팅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방문촉진을 유도해 나가는 전략적 마케팅 사업을 전개하고, 해수욕장 주변이나 국립공원 주변지역의 관광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숙박가격 할인주간 등을 설정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계절별 특성화 자원의 발굴 조성 강화

충남지역 관광객들의 계절적 편중을 보다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국적

경쟁력을 가진 매력관광자원이나 시설 확충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빈약한 겨울철과 봄철, 가을철 행락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관광지나 자원시설의 확충을 보다 적극 확대해 나가는 것이 계절별 방문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관광권역별 혹은 거점관광지별로 테마형의 야간관광명소나 경관 등을 조성하여 주간중심의 관광패턴을 야간시간대까지 연장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관광이용 패턴을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⑥ 복·융합 관광으로 계절의 편중성 극복

충남관광객 이용의 계절적 편중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효과를 극대화하는 관광자원 개발방식으로 4계절 관광자원화를 유도해야 한다.

관광과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산업이 융합된 관광생태계가 구축되어야 상상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이고, 관광과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산업 각각의 “0.5차 더하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충남에서도 해수욕장 중심의 하절기 관광패턴을 동절기와 춘추절기로 분산될 수 있도록 관광자원과 관광상품, 축제·이벤트 행사 등을 지역내 관광자원과 산업 등을 연계

한 복·융합 관광산업으로 개발한다. (정삼철, 2006)

### (2) 충남의 지역별 관광객 이용패턴에 적합한 관광자원 개발

#### ① 시·군별 특성에 맞는 대표 관광자원과 관광명소의 개발

충남의 시와 군별로 입지하고 있는 관광자원의 특성을 활용하여 대표 관광자원과 관광명소를 육성한다. 충남이 보유하고 있는 어메니티자원은 지역사회의 관광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다. 충남의 청정한 자연, 아름다운 풍경, 개성 있는 문화적 전통 등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아름다움, 여유로움, 감성 등 어메니티를 체험하는 관광자원으로 제공한다.

관광개발은 디자인이다. 관광가치를 디자인해서 가치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충청남도 역시 관광자원의 개발은 디자인을 통해 질적 선진화를 서둘러 지역 관광개발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 ② 관광권역별 관광상품과 문화콘텐츠 상품의 개발

충남의 계절별·관광시장 지역별 관광상품 제공방안이 유효해 보인다. 태안, 보령, 서천은 충청남도가 구상하고 있는 5대 권역중 해

양관광권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주로 여름을 중심으로 보령머드축제, 2009년에 재개최를 추진하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등의 축제와 연계된 지역 관광상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백제·금강문화관광권인 공주, 논산, 부여, 청양, 금산, 서천, 계룡 등의 지역은 봄, 가을을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금산인삼축제, 백제문화제, 한산모시제와 연계한 백제역사문화자원과 금강생태관광자원을 아우르는 관광상품은 자녀를 둔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일 것이다.

또한, 문화컨텐츠 상품을 제공하여 지역문화산업을 활성화 한다. 웰빙생활과 현대 관광수요에 적합한 관광상품으로 건강을 주제로 한 차별화된 먹거리 서비스 제공 및 체험상품을 개발한다. 그리고 역사자원과 특색있는 지역문화를 소재로 하는 문화컨텐츠 상품 개발과 판매를 촉진한다. 뿐만 아니라 한류 대중문화를 충남의 자원과 접목한 관광상품 개발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

### ③ 광역 관광벨트와 관광루트 관광상품 개발

충청남도, 대전, 충청북도의 권역관광개발을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통합 관광협력네트워크의 개발이 필요하다. 권역 관광상품의 개념은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는 백제문화권으로 분

류되며 역사관광지역으로 그 성격이 차별화된 다. 대전은 현재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의 도시로서 그에 적합한 관광매력물을 만들어야 한다.

이들 광역관광권내에서 관광벨트 및 관광루트의 형성과 지역 관광자원의 연계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관광자원의 분포특성과 테마를 연계하여 상호 네트워크형의 관광벨트를 구축한다. 그리고 해안과 내륙을 연계하는 테마관광도로 조성을 통한 균형 있는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추구한다. 또한, 새로운 관광패턴형의 항공·해양레포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상호 연계하는 관광루트도 구축한다.

## 4) 관광제도 개선과 전략적 홍보를 통한 충남의 관광진흥 추진

### (1) 관광자원 입지와 유형별 특성에 맞는 관광기회 제공

#### ① 지역사회·문화 중심의 관광자원 개발 추진

21세기의 도시(지역) 개발은 관광개발이어야 한다. 충남의 관광개발은 방문객을 위한 관광개발과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 개발이어야 한다. 특히, 충남지역의 관광자원에서 보이지 않은 것(invisible)이 관광객을 사로잡도록 한다. 세계적 관광명소는 두 가지 유형으로 기념

비적인 건조물과 기념비적이지는 않지만 꾸준히 세계인들을 매료시키는 것이다.

충청남도 역시 로렐라이 언덕과 인어공주 동상과 같이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든 눈에 보이지 않는 콘텐츠(노래와 동화)를 개발한 사례와 같이 그 동안 소프트웨어(software)보다 하드웨어(hardware)를 우선했고, 콘텐츠(contents)보다 컨테이너(container)를 중시했다면, 액터(actor)보다 프로젝트(project)에 관심을 두었던 관광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김성진, 2007).

## ② 정부 중심의 개발방식에서 거버넌스에 의한 관광개발과 홍보 추진

협치(governance)가 관광개발의 성패를 좌우한다. 우리의 관광개발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규정할 수 있다. 바람직한 자치단체 주도의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참여형 개발로 전환하고, 신규개발은 최소화해야 하며, 그리고 규제 합리화와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충청남도에서도 지역의 미래에 관심을 가진 지역단체와 사람들의 교류와 네트워크가 점차 확대될 것이고 그 그룹에서 리더십을 갖춘 리더도 있으므로 이와 연계한 관광개발과 홍보를 통해 지역거버넌스 주도형 관광마케팅을 전개해야 한다.

## ③ 인접 시군간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과 홍보

충청남도는 관광자원의 특성이 다양하고 잠재력이 있으나 이러한 관광자원을 연결해주는 관광상품이 부족하다. 그동안 개별적인 지역별 관광상품화 노력은 많았지만 광역적인 연계작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충청남도 16개 시·군 지자체간 관광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연계상품 개발과 운영이 잘 되지 않았다. 따라서 광역적 관점에서의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의 이용성과 관광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광상품의 개발과 홍보 역시 인접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 (2) 수요자별 관광객 유치 촉진과 홍보 마케팅 전략 강화

### ① 충청남도 홍보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개

충남의 거점 관광지나 초기 개발 관광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점관광지나 초기관광지의 집중적 홍보는 인근 소규모 관광지의 발전에 일단 집중적으로 영향을 주어, 장기적으로 충남 지역전체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홍보를 위해서는 거점관광지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충남이 가지는 기존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종합하고 소구하면 될 것이다.



나아가 홍보활동의 전문성과 종합성,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는 홍보에 있어서 지자체 단체간의 합동 홍보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을 브랜드화 하고 명소화하는데는 축제가 효과적이고 가시적이다. 지역축제는 장소를 파는 관광마케팅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다. 이에 충남과 시군별로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를 세계적 축제로 집중 육성하고, 국제규모의 메가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충남지역의 관광홍보 전략은 주로 특정지역에 위치한 특정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해 옴으로써 이들 지역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부터는 이와 같은 관광홍보 전략을 충남내륙 지역의 또 다른 관광매력이나 자원요소를 보다 집중 부각시켜 연계해 나갈 수 있는 홍보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 ② 충청남도 관광홍보의 다양성 유도

충청남도 관광자 방문은 절반 이상이 서해안 지역으로 집중되어 있으므로, 서해안을 거점으로 하여 충남 내륙으로의 벨트화 또는 루트화 하여 충남관광을 분산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홍보강화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서해안 관광의 또 다른 특성은 성수기가 여름으로 한정 되어 비수기가 길다는 것이다. 비수기가 긴 관광지에서의 관광산업체는 경영에

압박으로 지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서도 서해안지역과 내륙 지역을 연계하는 관광코스에 개발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해안고속도로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내륙연결도로망의 확충과 정비를 추진하고, 이러한 루트를 관광벨트나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상대적으로 관광객의 방문비용이 낮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관광매력 요소자원의 새로운 발굴을 도모하여 집중 부각시켜 나갈 수 있는 홍보마케팅 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별 대표브랜드와 관광매력시설이나 자원요소 등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홍보토록 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분산수용 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③ 충청남도 관광홍보의 공세적 자세로 추진

충남 관광홍보는 관광사업자나 관광분야 종사원 입장이 아닌 관광객 입장에서 알려야 한다. 관광객이 관광지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큰 영향을 미치는 한 요소는 접근성이다. 충청남도는 서울, 수도권, 대전지역을 배후로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의 인구는 전 국민의 50%를 상회한다. 이런 큰 배후 지역이 1시간대면 충청남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며, 매우 우수한 접근성이다.



또 다른 충청남도 관광의 큰 장점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관광, 온천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휴양관광, 백제유물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문화관광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레포츠 등 동적인 관광과 휴양 등 정적인 관광을 선호하는 관광객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역인 강원도와 비교하여도 우위를 가지는 것이 많다. 충청남도가 강원도보다 관광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강원도는 다른 대안이 없기에 관광홍보에 집중한 것이고 충청남도는 관광보다는 다른 분야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인식에 대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므로 충청남도도 이제부터는 충남의 관광홍보를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여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한다.

#### ④ 정확한 목표시장 설정 및 시장 포지셔닝에 의한 홍보

목표시장으로서 충남·대전권과 서울·경기·인천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숙박관광 뿐만 아니라 당일관광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광의 주된 테마는 가족중심의 주제로서 체험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관광의 최대화두는 체험이다. 그런데 이 체험은 우선 재미있는 체험이어야 하며 이면적으로 교육적이어야 감동을 주고 재방문

객을 창출할 수 있는데 우선 홍보에서는 교육적 측면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질의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해설사의 적극양성도 필요하다.

충남 관광은 전국 비율에서 8.8%로서 6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등의 광역시에도 활발한 마케팅을 해야 한다. 광역시 관광객의 1%대만이 충남을 찾고 있다.

#### ⑤ 구체적인 슬로건과 목표와 연중 캠페인 실시

충청남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슬로건이 무엇일까? 충청남도 관광구심점은 무엇일까? 그런데, 백제의 옛 유적, 안면도의 소나무와 수려한 해양자원, 온양온천 등 몇 가지가 떠오르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충남관광의 이미지 가운데 구체적인 하나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기존의 ‘느낌여행 충남’을 충남 관광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늘 가까운 충남(near-chungnam)’의 의미에 관광브랜드를 개발하고 관광마케팅을 강화하여,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점이지대로서의 부드러운 충남, 편안한 충남을 이미지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부드럽고 편안함이 있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충남’을 팔아야 할 것이다.

‘느낌여행 충남’이 충청남도 관광 전략이라면 전술은 각 해당 해의 관광 목표를 나타내

는 것이다. 관광 슬로건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것으로 관광 슬로건 아래 목표를 모두가 공유하여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충남의 관광발전 전략에 맞도록 매년 새로운 슬로건을 제시하고, 이를 알릴 수 있는 충분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⑥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관광홍보 기능 강화

충청남도에서 관심을 기울일 또 한 분야는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관광상품의 유통이다. 한국 소비자들의 성향은 온라인 시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관광상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온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인 옥션은 본사가 있는 미국보다도 한국에서 더 빨리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옥션, 여행사, 항공사, 호텔, 소규모 민박업체 등도 실시간 예약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데, 상당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온라인을 통하여 단순 정보 제공기능만 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관광포털 사이트도 많지 않지만 민간 업체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그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온라인을 활용한 관광상품 홍보기법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위성영상에

기반한 경주국립공원 3차원 관광안내시스템을 선보였다. 이러한 첨단 분야를 충청남도의 관광상품 홍보와 유통에 적극 접목하여야 충청남도의 관광홍보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더불어 관광마케팅의 강화는 인접 지역간 상호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관광 홍보 및 안내정보체계의 구축과 관광 마케팅 강화는 인접 시군과 통합하여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 (3) 2010년 ‘충남 방문의 해’ 사업 추진

충청남도는 태안 유류유출사고의 극복, 백제역사문화단지 완공 및 대백제전 개최와 2010년 행복도시 주민 첫입주, 지역내 육·해·공 교통망 완비를 목표로 2009년 이후 충남 중심을 관통하는 동서간 고속도로 완공, 2009년 당진·평택항 개항으로 인한 크루즈 해외관광객 유치, 2010년 서산비행장 개항으로 인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을 목표로 하여 2010년 충남 방문의 해를 인트라바운드 선두주자로서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충남방문의 해 특별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2010 충남방문의 해 슬로건 및 아이덴티티 개발 및 홍보, 방문의 해 홍보사이트 U-Travel 구축, 안전 관광충남 선언식 개최 등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총회 개최와 관광관련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국제관광회의와 관련한 PATA : 태평양아시아 관광 협회(Pacific Asia Travel

Association), ASTA(American Society of Travel Agents), WTO 등 관련단체 홍보방안 강구하고, 이에 버금가는 국제 관광학술회의와 국제행사를 유치해야 할 것이다.

2010년 충남방문의 해를 위해 준비하는 사업계획은 신규사업(기획, 특집), 업그레이드 관광충남, 관광인프라 개선, 현대체계 구축(환경하는 지역주민), 방문의 해 붐 조성 및 마케팅 등에 부문별로 다양한 전략사업을 수립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한다.(충청남도, 2007)

#### (4) 충남 서해안을 환경관광산업 특화 지역으로 집중 개발

##### ① ‘환경관광특구 조성’ 및 ‘국제 환경 관광 프로젝트(안)’의 추진

유류유출 사고를 계기로 태안군 북쪽을 환경관광특구로 지정하여 해양오염을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면서 침체된 지역관광산업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개발중인 만리포 관광지와 사구, 갯벌, 수목원과 연계한 환경관광지구를 조성하여 환경관광명소로 개발을 추진하고, 해양오염과 희귀생태자원을 근거로 국제 환경기구 등이 참여하는 국제 환경관광지역으로서 발전시킨다.

이러한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서남해안 연안개발계획 등 서해안 유류유출사고와 관련된 특별법에 태안 유류유출 주변지역을 ‘환경관광특구(가칭)’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지역의 세계적 환경관광명소로

#### \* 유류유출 피해지역 주변의 환경관광특구를 위한 자원 현황

- 태안해안국립공원 : 해안국립공원의 보존과 관리 사업
- 만리포 관광지 : 해양환경 테마관광지로 조성(조성계획 수립중)
- 신두리사구 : 천연기념물 지정, 국제보호식물 지정
- 두웅습지 : 람사협약에 람사르습지 신규 등록
- 천리포수목원 : 세계적인 희귀 및 보호 식물과 수목 보유
- 신재생에너지특구 : 환경친화적 에너지 관광자원 개발
- 이원간척지구 : 화훼단지 및 웰빙관광지구 조성
- 해수욕장 : 만리포, 천리포, 학암포, 신두리, 파도리 해수욕장 등
- 갯벌과 독살 : 갯벌과 독살 등 생태체험관광지로 조성

주 : 1) 특별법에 환경관광특구사업의 내용 반영하여 제정

2) 태안군 환경관광특구 조성계획 등은 연구사업으로 추진

3) 복구에 동원된 특이 기자재와 소모품을 보관하여 추후 환경전시관 건립

- 신두리사구 : 환경부 법적보호종(보호야생동물)
- 천리포수목원 : 국제 보호종 식물과 수목 보유
- 태안해안국립공원 : 희귀 동식물 및 보호종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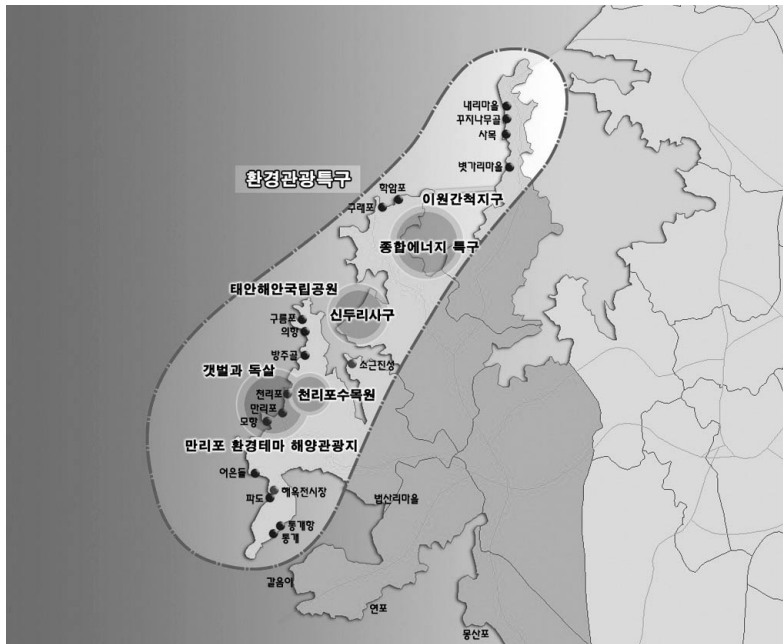
주 : 국제환경단체 및 기구와 참여와 지원사업으로 추진

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환경단체와 기구 등이 참여하는 ‘국제환경관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유류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청정지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의 관광마케팅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메가이벤트와 자원봉사활동, 지역주

민들의 피해복구 노력 등에 관한 다양한 문화 행사와 축제, 이벤트 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들을 위한 환경관광상품으로서 교육 및 체험, 기억에 남는 관광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여 운영해야 한다.

유류유출 피해가 복구되는 일정한 시점에서 ‘국제 해양환경엑스포’ 개최로 유류유출의 큰



〈그림 2〉 태안 ‘가치 환경관광지대’ 개념도

## 서해안 수산물 어획, 유통·판매 조사 및 보증사업 예시 :

- 기름유출 사고지점과 이외 지역에 대한 수산물 관리와 유통
- 서해 바다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보증과 판매관리
- 안정성 수산물에 대한 판매촉진 사업 전개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 청정한 지역으로 새롭게 변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고, 기름 오염피해를 극복한 세계적 사례지역으로 세계 각 국가들간의 공동협력과 기름오염 복구를 위한 환경산업 엑스포로서 해양오염의 극복 및 관리와 관련된 세계 환경학자와 환경사업체의 정보 교류와 교역전을 개최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환경단체 및 기구 지원과 참여사업으로 추진하고, 행사명칭 및 세부계획은 2008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충남 서해안과 태안의 청정한 해양, 생태자원과 해양오염을 환경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관광 수입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고, 국제환경단체나 기구의 참여 유도를 통해 친환경국가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해양오염 극복의 국제적 중요사례지로 부각될 수 있다.

## ② 서해안 ‘어업과 관광업 살리기’ 운동 전개

유류유출 사고를 계기로 태안군뿐만 아니라 서해안 전역 수산물에 대한 오염되었다는 부정적 인식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시키는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유류유출’로 해당지역은 해양오염이 되었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 해양오염이 극복되고 난 후에는 인접 연근해의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증명과 보증을 하는 홍보와 정보제공으로 수산물 판매를 촉진토록 해야 한다.

해양오염이 완전히 복구되기 전까지 서해안의 수산물 판매와 음식점은 당분간 동·남해안의 수산물을 대체하여 판매하고, 음식점 등에 공급하다가 해양오염의 극복되는 시점을 향하여 서해안 수산물 어획, 유통·판매 조사

## 서해안 관광 재개 선언 추진사업 예시 :

- 유류유출 사고지 환경정비 후 ‘서해안 관광재개 선언식’ 개최  
(충청남도, 문화관광부 등 국민운동차원의 선언식 개최)
- 공공 및 단체 등에서 워크숍과 단합대회 등 태안에서 실시
- 유류유출 사고지를 임시 정비하여 환경교육의 답사관광 실시

및 보증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서해안의 관광산업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해안 '관광 재개 선언'을 통하여 서해안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고, 관광활동을 하는데 유류유출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홍보하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한다.

### ③ 서해안 '관광 살리기 축제 및 이벤트' 개최와 관광상품의 개발

유류유출 사고를 계기로 서해안의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매년 및 계절별, 장단기 행사로서 테마와 스토리라인으로 연계하여 축제와 이벤트를 개최하고, 더불어 연중 특산물과 관광이벤트, 스포츠 행사 등 수시행사로 개최해야 한다. 이를 위한 사업예시는 다음과 같다.

## IV. 결론

관광산업은 21세기 무공해 고부가가치 성장 산업이자 무형의 수출산업으로 평가되면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관광수요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는 물론 지역적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광수요의 창출과 관광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광경쟁력은 물론이요 관광생명력도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무차별적 무한경쟁 환경 속에 놓여 있어 보다 새롭고 창조적이며 전략적인 수요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충남 관광발전을 위하여 통해 도출된 과제로는 첫째, 관광객과 관광자원의 편중성 극복

#### 서해안 관광살리기 축제와 메가이벤트 사업 예시 :

- 6개월 : 자원봉사 감사 여름휴가 초대축제(해수욕장 개장에 맞추어)
- 매년(12월) : 1주년 자원봉사 대축제(1주년 + 자원봉사 축제)
- 2009년 봄(4-5월) :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
- 2010년 : 2010 충남방문의 해 개최
- 2012년 : 국제 해양환경엑스포 개최

#### 서해안 특산물과 관광이벤트, 스포츠 행사 등 수시행사 예시 :

- 수산물 축제 : 계절별로 생산되는 수산물 축제의 정기개최
- 환경이벤트 : 생태 및 환경관련 이벤트 및 국제행사 개최
- 스포츠행사 : 해양스포츠, 마라톤, 항공스포츠 등 이벤트 및 행사 개최
- 문화행사 : 지역문화행사 및 이벤트와 전통축제 등의 개최
- 기관 및 기업체 행사 :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단체와 대기업체 연수행사
- 언론 및 방송이벤트 : 상시 행사에 대한 언론 홍보와 방송이벤트 병행 개최



이 필요하다. 둘째, 계절적 집중의 분산과 4계절 이용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관광자원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관광객의 행태변화에 적합한 능동적 관광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구조와 현대적 여행패턴의 변화에 맞는 관광개발이 요구된다. 끝으로, 관광수급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관광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상 충남관광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현재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보다 발전된 형태로 도약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광하드웨어 확충뿐만 아니라 관광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관광콘텐츠의 발굴, 그리고 감동이 담겨 있는 관광휴먼웨어 서비스가 조화롭게 갖추어 지역관광 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 관광개발은 도민 생활의 질 향상에 바탕을 두고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수요자와 공급자간에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지역 자원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이용자들의 만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충남 지역관광의 균형발전, 관광 이용패턴의 분산, 지역문화·정주생활과의 조화, 통합적 관광정책의 추진, 지역주도형 관광사업 추진, 새로운 관광환경에 맞는 충남 관광마케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충남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은 충남 지역관광의 균형발전과 지역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 계절적 편중보다는 분산형 관광 이용패턴의 정책 추진, 인접 지역과 관련 관광사업간 통합적 관광정책의 추진, 지역주도형 관광정책과 정책의 추진방식 채택, 관광충남으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집중적 관광마케팅 전개,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유류유출에 따른 피해 대응 및 관광산업의 전화위복 기회 마련 등의 일곱 가지로 제시하였다.

충남 관광개발의 효율적 추진전략수립을 위한 접근 개념은 관광자원 개발과 관리의 체계성과 효율성 제고, 관광시장 수요창출과 환기, 관광제도 개선과 홍보를 통한 충남의 관광 진흥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자원 개발과 관리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권역별 거점 관광도시 육성과 연계 관광코스를 개발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기능을 극대화 하는 거점관광도시와 개별관광지 개발을 추진해야 하며, 세부추진 사업으로는 충남의 관광거점 도시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소재의 명소관광자원 개발과 상호 연계 네트워크 구축, 지정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

둘째, 관광시장의 수요창출과 환기이다. 하절기 중심의 관광패턴을 4계절형으로 분산 유치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 패턴을



극복하고, 계절별 테마관광자원의 전략적 개발 접목과 역발상을 통한 해수욕장 활용의 다차원화, 가격차별화를 통한 충남관광 브랜드 세일 전개, 계절별 특성화자원의 발굴 조성 강화, 복·융합 관광으로 계절의 편중성 극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충남의 지역별 관광객 이용패턴에 적합한 관광자원 개발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군별 특성에 맞는 대표 관광자원과 관광명소의 개발과 관광권역별 관광상품의 개발을 추진한다. 더불어 선택형 관광상품과 프로그램의 발굴·제공을 위하여 광역 관광벨트와 관광루트 상품을 개발한다.

셋째, 관광제도 개선과 홍보를 통한 충남의 관광 진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광자원 입

지와 유형별 특성에 맞는 관광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문화 중심의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정부 중심의 개발방식에서 거버넌스에 의한 관광개발 추진하며, 인접 시·군간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을 실시한다.

또한, 수요자별 관광객 유치 촉진과 홍보마케팅 전략 강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홍보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개, 충청남도 관광홍보의 다양성 유도, 충청남도 관광홍보의 공세적 자세로 추진, 정확한 목표시장 설정 및 시장 포지셔닝에 의한 홍보, 관광홍보 전담 기능의 강화, 구체적인 슬로건과 목표와 연중 캠페인 실시,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관광홍보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 참고문헌

1. 김성진, 2006, 지속가능한 정주형 관광개발체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문화관광부, 2006, 2006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3. 심원섭, 2007, 국내관광 활성화 중장기 정책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 윤양수·김익식, 2002, 레저행태 변화와 여가공간 조성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5. 이인배·최영문, 2006, 충청남도 관광수요 변화분석과 대응과제, 충남발전연구원.
6. 임명제, 2007, "확장형모형을 활용한 관광목적지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 충청남도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관광학회 4권 2호.
7. 정상철, 2007, "지역집중과 계절편중 충남관광패턴의 극복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충남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 발제자료.
8. 최영문, 2007,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로 기름유출에 따른 2008년 충남관광 영향분석", 충남발전연구원 내부워크샵 자료.
9. 충청남도, 2007, 충청남도 제3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10. 충청남도, 2007, 「2010충남 방문의 해」.
11. 충청남도, 2006,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12. 충청남도, 2006, 충청남도 관광이동통계자료.
13. 충청남도, 2006, 도정백서.
14. 충청남도, 2007, 충남통계연보.
15. 한국관광공사, 2006, 2005 국민여행실태조사 보고서.
16. 해양수산부, 2003,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17. <http://tour.go.kr/>
18. BBC NEWS(2003년 3월 7일), Oil threat to French tourism.
19. M.Dolores Garza-Gil, Albino Prada-Blanco and M. Xose Vazquez-Rodrigueza(2005), Estimating the short-term economic damages from the Prestige oil spill in the Galician fisheries and tourism, Ecological Economics

# 비도시지역의 개별공장 입지수단에 관한 전문가 의식 분석

오용준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I. 서론

공장입지의 선정에 관하여는 상충하는 이해와 가치가 있다. 우선, 공장이라는 경제적 부가가치의 주체를 육성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장은 필연적으로 환경에 대한 부정적 작용과 함께 공장으로서의 입지가 확정될 때에는 주변 토지에 난개발의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산업입지정책은 개별공장 입지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를 간과하여 왔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적인 산업입지 공급 및 관리제도가 부재한 실정이었다. 개별입지 억제 및 계획입지 우선정책에도 불구하고 개별입지는 전국적으로 전체 등록공장의 74%(2006년 말 현재)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산업단지 조성절차 개선의지로 인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개선에 요구가 증가할 전망

이다. 특히, 2008년 1월부터 소규모 공장 설립절차가 완화되었는데, 계획관리지역 내 1만 m<sup>2</sup> 미만의 공장설립은 당초에 조례로 위임하여 허용하던 것을 조례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직접 허용하였다. 그리고 공장설립시 거치도록 하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대대적인 개별공장 입지 규제완화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비도시지역의 개별공장 입지수단인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제와 지구단위계획제도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행위허가제는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지역에만 적용되었으나, 2002년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그 적용범위가 비도시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은 세분화되고 개발행위허가제는 확대되어 시행되었다.

계획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이러한 제도들은 당초 도입목적 및 기능

이 뚜렷한 차이가 있었지만, 비도시지역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은 개발적인 성격을 포함하게 되고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관리계획의 성격이 일부 부여되면서 두 제도간의 혼란이 가중되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관련 사업법과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각각의 성격과 역할이 모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비도시지역 내 개별공장 입지와 관련된 행정절차 및 규제의 실태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 II. 공장입지 제도 고찰

### 1. 우리나라 산업입지 유형과 현황

#### 1) 산업입지 유형

공장용지를 기업이 취득하는 방법에는 기업 스스로가 공장건설에 필요한 입지를 선정하여 개발하는 개별입지와 계획적으로 조정해 놓은 산업단지를 분양받는 계획입지가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계획입지는 공장용지 조성방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개별입지의 경우, 대부분 개발행위허가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이루어진다. 개별입지는 용도지역에 따라 공장설립기준이 제한되기도 하나, 원하는 장소에 필요한 규모의 공장을 건축할 수 있고 계획입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표 1〉 산업입지의 유형

구 분	개 발 목 적	개 발 주 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입지</li> <li>- 국가산업단지</li> <li>- 일반산업단지</li> <li>- 도시첨단산업단지</li> <li>- 농공단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적 산업발전 도모</li> <li>-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li> <li>- 도시지역의 첨단산업 육성</li> <li>-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도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해양부</li> <li>- 광역시·도(규모에 따라 시·군)</li> <li>- 광역시·도(규모에 따라 시·군)</li> <li>- 시·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입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입지의 탄력적 운영으로 생산성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기업</li> </ul>

〈표 2〉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장단점 비교

구 분	개 별 입 지	계 획 입 지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하는 시기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규모로 공장을 건축 가능</li> <li>· 사업 확장시 공장 증축 용이, 각종 금융 및 세제지원의 수혜 가능</li> <li>· 계획입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부지확보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단지조성에 따른 산업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동력, 용수, 수송 등의 지원시설이 양호</li> <li>· 공해배출업소의 입주 용이</li> <li>· 공장설립허가 용이</li> </ul>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설치허가 절차 복잡</li> <li>· 동력, 용수, 수송 등의 입지여건 취약</li> <li>· 산업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미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 분양 후 입주 방식으로 적기 공장 확보 어려움</li> <li>· 분양공단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분포하여 적소에 공장 건축 어려움</li> <li>· 구획된 단지이므로 일단 입주하면, 사업 확장에 따른 공장증축 불가능</li> <li>· 국가 및 지방공단, 아파트형 공장은 분양 가격이 대체로 비쌈</li> </ul>

자료: 중소기업청, 2005, 「창업 및 공장설립 가이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2007년까지 개별입지를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서의 공장입지 중 하나로 정의하였으나, 같은 해 4월에 동 조문을 폐지하고 공장입지유도지구구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공장입지유도지구란 시장·군수가 계획관리지역에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범위 안에서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장을 집단화시키기 위한 지구를 지정하면, 행정소요기간이 단축되고 비용 및 기반시설 지원이 가능하게 만든 제도이다.

## 2) 산업입지 현황

우리나라의 산업용지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12월말 현재 총 공급량이 561.3km<sup>2</sup>이며 이 중 개별입지가 302.0km<sup>2</sup>, 계획입지가 259.3km<sup>2</sup>이다. 계획입지의 비중은 산업단지 개발이 활발하였던 1990년대 초까지는 더 높았는데, 1995년 47.0%에서 2005년에는 46.2%로 낮아졌다. 이에 비하여, 개별입지의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53.0%에서 53.8%로 다소 높아졌다.

〈표 3〉 산업용지 공급추이

(단위 : km<sup>2</sup>, %)

구 분	1986년	1995년	2005년	1986-1995년 (증가분)	1995-2005년 (증가분)
계	270.3(100.0)	448.0(100.0)	561.3(100.0)	177.7(100.0)	113.3(100.0)
계획입지	121.1(44.8)	210.5(47.0)	259.3(46.2)	89.4(50.3)	48.8(43.1)
개별입지	149.2(55.2)	237.5(53.0)	302.0(53.8)	88.3(49.7)	64.5(56.9)

자료: 통계청, 해당년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충청남도 산업용지 공급의 경우, 2005년말 현재 전체 공장용지 74.8km<sup>2</sup> 중 산업단지의 실분양 면적이 41.4km<sup>2</sup>로 전체의 55.4%가 계획입지이다. 이에 비하여 개별입지 면적은 전체 공장용지에서 산업단지 실분양면적을 제외한 33.4km<sup>2</sup>이다.

## 2. 공장입지 계획수단의 주요내용

### 1) 우리나라의 공장입지 관리제도

개발행위란 종전의 건축허가를 포함하여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 『국토계획법』에 의해 통제되는 대상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개발행위허가는 당초 토지형질변경의 내용을 보완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토지형질변경은 필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등을 위한 제도로서 필지단위의 도시계획이라 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의 허가심사기준은 『국토계획법』의 시행령 별표1에서 공통분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사업, 주변지역과의 관계, 기반시설, 그 밖의 사항 등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4〉 충청남도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 현황(2005년 4/4분기 기준)

(단위 : 천m<sup>2</sup>, %)

구 분	공장용지 면적	산업단지 실분양면적	개별입지면적	계획입지비율
충 남	74,754	41,395	33,356	55.4%

자료: 충청남도, 2006, 「충청남도 산업입지 중·장기 기본계획」.

〈표 5〉 개발행위허가의 분야별 기준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공통분야	① 조수류·수목 집단서식지, 우량농지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되지 않을 것
	② 역사문화 및 향토적 가치, 국방목적 등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③ 표고, 경사도, 임상, 도로높이, 배수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도시관리계획	④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도시계획사업	⑥ 도시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⑦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주변지역과의 관계	⑧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높이·형태·색채가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⑨ 대기·수질·토질·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을 것
	⑩ 녹지축이 단절되지 아니하고, 하천·호소·습지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기반시설	⑪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⑫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그 밖의 사항	⑬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계획에 적합할 것
	⑭ 토지의 분할 및 물건 처치의 경우, 입목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충청남도 시·군 도시계획조례에서는 개발 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을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동 조례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입목본수도, 경사도, 표고, 도시생태계보전등급, 도로미설치 토지형질변경, 녹지지역에서의 토지분할제한면적 등의 항목을 명시하고 있다.

경사도는 서산시가 14도로 가장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보령·아산시, 금산·연기·서천·청양·예산·당진군은 20도로 강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표고 기준의 경우,

대부분의 시·군이 기준표고로부터 50M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령시는 100M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도시생태계보전등급(생태자연도)을 두고 있는 시·군은 천안·공주·아산·서산·논산·계룡시와 연기·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당진군이다. 도로 미설치시 토지형질을 변경할 수 있는 한도로서 대부분의 시·군에서 1천㎡를 규정하고 있다.

〈표 6〉 충청남도 시·군 개발행위허가 허가기준

시군	입목본수도	경사도 (도)	표고 (M)	도시생태 계보전 등급	도로 미설치 토지형질 변경	녹지지역 토지분할 제한면적
천안시	50	15도 미만	50	I, II	1천㎡ 미만	200㎡ 이상
공주시	· 평균 입목축척이 헥타아르당 공주시 입목축척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15도 미만	-	I, II	1천㎡ 미만	200㎡ 이상
보령시	-	20도 미만	100	-	1천㎡ 미만	200㎡ 이상
아산시	50	20도 미만	-	I, II	1천㎡ 미만	200㎡ 이상
서산시	· 평균 입목축척이 시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척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나무는 평균 입목축척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4도 미만	-	I, II	1천㎡ 미만	200㎡ 이상
논산시	50	30% 미만	-	I, II	1천㎡ 미만	200㎡ 이상
계룡시	· 임상은 임목의 축적 및 구성에 관여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 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을 적용한다.(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포지는 제외)	30% 미만	-	I, II	-	200㎡ 이상
금산군	50	20도 미만	-	-	1천㎡ 미만	200㎡ 이상
연기군	· 임목의 축적 및 구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는 포지는 제외한다.)	20도 미만	50	-	1천㎡ 미만	200㎡ 이상
부여군	50	15도 미만	-	I, II	1천㎡ 미만	200㎡ 이상
서천군	· 임목의 축적 및 구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는 포지는 제외한다.)	20도 미만	50	-	-	200㎡ 이상
청양군	50	20도 미만	50	I, II	1천㎡ 미만	200㎡ 이상
홍성군	·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별표 4 제6호의 나목 및 다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별표 4 제6호의 나목 및 다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15도 미만	50	-	1천㎡ 미만	200㎡ 이상
예산군	· 임목의 축적 및 구성에 관여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기준을 적용한다.(다만 판매목적으로 재배하는 포지는 제외한다.)	20도 미만	50	I, II	1천㎡ 미만	200㎡ 이상



시군	입목본수도	경사도 (도)	표고 (M)	도시생태 계보전 등급	도로 미설치 토지형질 변경	녹지지역 토지분할 제한면적
태안군	50	15도 미만	50	I, II	1천㎡ 미만	-
당진군	· 임목의 축적 및 구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는 포지는 제외한다.)	20도 미만	50	-	-	200㎡ 이상

이에 비하여 지구단위계획은 중세분된 2개의 유사한 계획인 제1종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되나, 수립목적에 있어 차이가 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의 합리화·구체화 및 기능·미관의 증진이 주요 목적인데 비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해양부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산업형·유통형·관광휴양형·복합형·특정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은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②『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 ③ 기타 농어촌관련시설(도시계획시설로 설치가 가능한 것을 제외)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수립하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2008년 4월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국토계획법』을 개정하여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표 7〉 기업규제 완화관련 국토계획법 개정(안)

종 전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li> <li>·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 및 높이</li> <li>· 가구 및 획지계획</li> <li>· 교통처리계획</li> </ul>	<p>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예: 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에서 공장·물류유통시설 건설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li> <li>·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 및 높이</li> </ul>

자료: 국토해양부, 2008, 『국토계획법』 입법예고(안).

의 지구단위계획은 다양한 사업목적과 양태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법에서 정해진 4가지 필수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사항까지 모두 수립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유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장이나 물류유통시설의 개발시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2) 일본의 공장입지 관리정책 및 제도

산업단지 입지의 경우, 사업주체가 공공기관(공단, 도도부현, 시정촌)이면 용지취득과 관련한 절차 없이 공장조성 단계에 들어가지만, 개별입지의 경우에는 토지와 관련된 규제

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의 개별공장 입지는 『공장입지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공장의 입지가 환경을 보전하면서 적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특정공장의 생산시설, 녹지 등의 면적비율을 공표하고, 공장의 신·증설시 이 기준에 따라 공원·녹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즉, 개별공장의 환경기준항목으로 녹지비율 20%, 환경시설비율 25%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 규정을 각 지자체가 조례로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산업구조심의회가 『공장입지법』 개정에 착수하였는데, 기존의 5종류의 환경기준(15~40%)을 『건축기준법』상의 건폐율과 일치시킬 예정이다. 또한 20% 이상인 녹지 비율도 대폭 완화하고 녹지제한도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할 방침이며, 25%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환경시설(녹지 포함) 비율도

〈표 8〉 생산시설, 녹지, 환경시설의 각종 면적률

시 설	업종구분	전국기준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조례 <sup>1)</sup>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생산시설 면적률 <sup>2)</sup>	5업종	10~40%			
녹지 면적률	전업종	20%이상	(20%초과~30% 이하) 이상	(15%이상~25% 이하) 이상	(10%이상~20% 미만) 이상
환경시설 면적률 <sup>3)</sup>	전업종	25%이상	(25%초과~35% 이하) 이상	(20%이상~30% 이하) 이상	(15%이상~25% 미만) 이상

주: 1) 제1종 구역: 용도지역이 주거용지구, 상업용지구, 제2종 구역: 주거용과 공업용 병행, 제3종 구역: 공업전용지역 및 공업지역

2) 생산시설 면적률은 1~5업종에 따라서 각각 10%, 15%, 20%, 30%, 40%를 상한

3) 환경시설면적률은 녹지면적률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일본입지센터, 「공장입지법 해설」, 2006.

녹지구정 외에는 철폐할 예정이다.

이처럼 일본은 소규모공장 설립에 대한 환경 및 도시계획 관련 규제가 탄력적인 편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장부지 면적이 100ha 이하의 공장 설립에 대해서는 환경성평가를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만㎡ 이하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도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명박 정부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으로 시장·군수가 공장설립 가능지역(3만㎡ 미만)을 지정하여 사전환경성 검토를 완료하고 동 지역에 입지하는 기업에는 이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개별공장 입지의 환경 및 재해 관련 규제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공장설립과 관련한 환경문제, 즉 『공장입지법』상의 환경관련 규제(권한)는 대부분 지자체에 이양하였으며, 환경문제는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나 협정으로 규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환경규제에 대하여 업종별 규제는 없고 대체로 개별공장별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업종별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업종별 규제보다는 공해물질 배출로 규제하는 것이 기업이나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Ⅲ. 비도시지역의 개별공장 입지수단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비도시지역의 공장입지 관련 제도(개발행위허가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기업과 전국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도시계획직 공무원 등 300명을 대상으로 2008년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응답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기업 4명, 국토해양부 담당 공무원 1명, 충청남도 도시계획 관련공무원 10명, 시·군 담당공무원 19명, 대학교수 5명, 연구기관 9명, 전문기술인 42명 등 총 105명이다. 전체 응답자 중 66.3%가 충청남도 시·군의 각종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한 경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비도시지역의 공장입지 제도운영실태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는 개발행위허가제와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중심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입지검토단계, 계획단계, 관리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그림 1〉 제도운영실태 분석의 주요내용

## 1. 입지검토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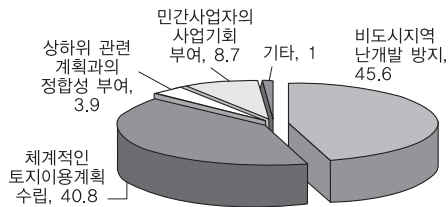
### 1) 계획주체간 계획목적의 괴리

비도시지역의 개별공장 입지 제도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이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장입지 계획수단으로서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45.6%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목적을 손꼽았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전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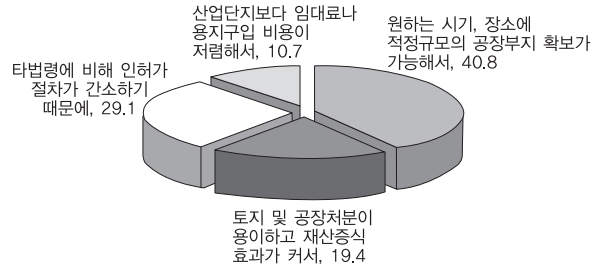
40.8%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실제 이용행태를 보면, 사업주 입장에서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기능은 수익의 추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이익 및 사업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계획의 목적이 바뀔다고도 볼 수 있다.

가령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공장을 건축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응답자의 40.8%가 원하는 시기, 장소에 적정규모의 공장부지 확보가 가능해서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계획을 통한 산업시설의 공급이 시간적·경제적 제약을 낳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선호한 것이



〈그림 2〉 공장입지 계획수단으로써의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기능



〈그림 3〉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공장을 건축하는 이유

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전체의 29.1%가 타 법령에 비해 인·허가 절차가 간소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으며, 토지 및 공장 처분이 용이하고 재산증식 효과가 커서 19.4%, 산업단지보다 임대료나 용지구입 비용이 저렴해서가 10.7%를 차지하였다.

특히, 투기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만 득하고 허가내용대로 건축행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 행위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응답자의 40.8%가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전에 이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계획주체와 사업주체간의 계획목적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9〉 투기목적의 개발행위허가제에 대한 의견

소속 항목	도		시·군		중앙정부		연구기관		학계		전문영역회사		공사		기업		계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①	3	30.0	2	11.1	0	0.0	0	0.0	0	0.0	3	7.1	0	0.0	1	10.0	9	8.7
②	1	10.0	2	11.1	0	0.0	2	22.2	0	0.0	16	38.1	2	25.0	3	30.0	26	25.2
③	1	10.0	1	5.6	0	0.0	3	33.3	4	80.0	8	19.0	1	12.5	3	30.0	21	20.4
④	5	50.0	9	50.0	1	100.0	4	44.4	1	20.0	14	33.3	5	62.5	3	30.0	42	40.8
⑤	0	0.0	4	22.2	0	0.0	0	0.0	0	0.0	1	2.4	0	0.0	0	0.0	5	4.9
계	10	100.0	18	100.0	1	100.0	9	100.0	5	100.0	42	100.0	8	100.0	10	100.0	103	100.0

주: ①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허가취소는 너무 가혹하다 ②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전에 이를 방지한다.  
③ 불이행시 이행부과금을 가중 부과하여야 한다. ④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기타

## 2) 개별법과의 위상 및 역할관계 정립 필요

공장 및 산업유통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개발이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변경이나 환경부, 산업자원부 소관의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기준 등 다른 법제도의 운영관행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따라서 국토이용과 관련한 관련법간의 상호 위상과 역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비수도권의 일반적인 중소도시의 경우,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련된 입지규제 정도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35.6%가 규제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중앙정부, 학계, 연구기관에서는 현재의 공장입지 규제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장설립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받는 개별법상 규제에 대한 어려움의 정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① 환경관련규제(『환경정책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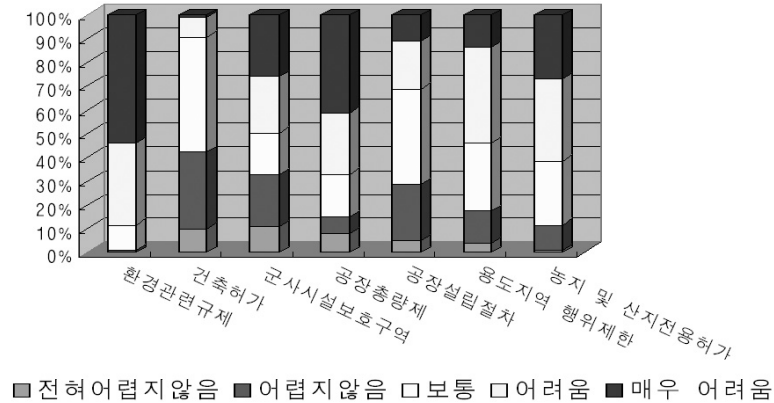
② 건축허가(『건축법』), ③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④ 공장총량제(『수도권정비계획법』), ⑤ 공장설립절차(『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⑥ 용도지역 행위제한(『국토계획법』), ⑦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농지 및 산지관련법률) 순으로 규제가 중복되어 있거나 어렵다고 답을 하였다.

우선,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규제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관련규제로 전체응답자의 88.4%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장총량제가 전체의 67.0%로 그 뒤를 이었으며, 농지 및 산지 관련 법률에 의한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 61.5%,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행위제한 53.9%,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49.5%,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절차의 어려움 31.0%,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9.1% 순이었다.

〈표 10〉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련된 입지규제 정도

소속 항목	도		시·군		중앙정부		연구기관		학계		전문용역회사		공사		기업		계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①	3	30.0	0	0	0	0.0	4	44.4	3	60.0	9	21.4	4	50.0	2	20.0	25	24.0
②	5	50.0	10	52.6	1	100.0	3	33.3	2	40.0	14	33.3	3	37.5	4	40.0	42	40.4
③	2	20.0	9	47.4	0	0.0	2	22.2	0	0.0	19	45.2	1	12.5	4	40.0	37	35.6
계	10	100.0	19	100.0	1	100.0	9	100.0	5	100.0	42	100.0	8	100.0	10	100.0	104	100.0

주: ① 규제가 낮은 편임 ② 적정수준 ③ 규제가 높은 편임



〈그림 4〉 개별법상 규제의 정도

한편,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구역이 지정되고 계획이 수립된다고 해도 개별법에 의해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별법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경우도 있으며, 개별법에 의해 개발계획이 구상된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수행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두 체제간의 병행구도 하에서 민간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기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지고 동일 규제내용이 중복되거나 상이하게 적용되며, 반복되는 행정절차가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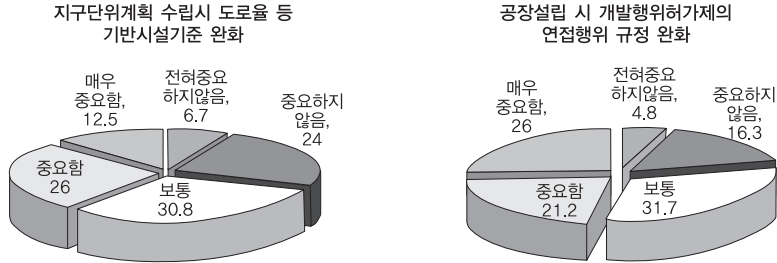
### 3) 계획수립절차의 간소화 시급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 설립과 관련

된 규제 및 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의 53.4%가 산업단지보다 엄격한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기반시설 요건(녹지율, 도로율, 완충녹지 설치의무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연결한 기존공장과의 연접합산 규제에 따른 부담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의 44.2%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한편,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전체의 52.9%가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 의무와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소규모 공장설립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의무(전체의 50.5%), 공장설립과 건축허가절차의 이원화(42.6%), 취수장 및 농업용저수지 인근 공장설립 규제(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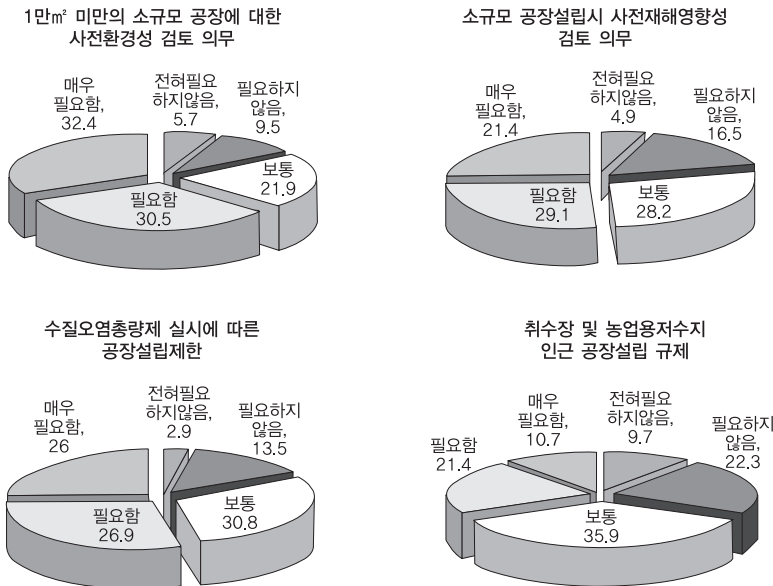


〈그림 5〉 규제완화정책별 중요도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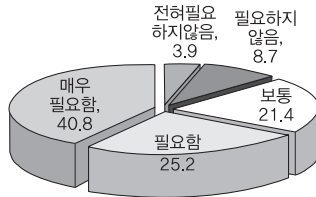
또한, 공장입지 절차간소화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8.2%가 공장설립 변경 허가 기준이 법령간에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해

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개별법을 통한 과도한 첨부서류 요구 관행문제가 66.0%, 산지전용 허가기간과 공장설립 승인기간 간 불일치문제 59.2% 순으로 개선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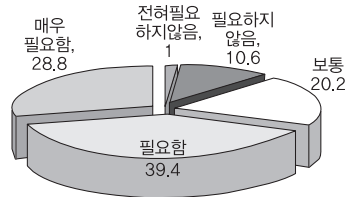


〈그림 6〉 입지제한 규제개선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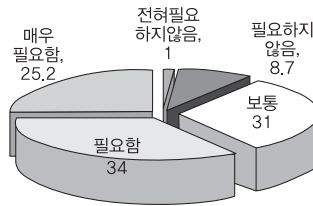
개별법을 통한 과도한 첨부서류 요구 관행



공장설립 변경 허가 기준에 대한 법령간 불일치



산지전용 허가기간과 공장설립 승인기간간 불일치



〈그림 7〉 절차 간소화 개선의 필요성

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제2종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절차와 계획수립절차를 분리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도서목록과 지구단위계획심의자료를 구축하여 진행하게 되다 보니, 심의기간과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업기간도 길어져 개발사업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할 수 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주로 사업계획을 전제로 수행되고 있는데, 현재의 복잡한 개별법에

의한 규정은 사업의 리스크를 증대시킨다. 따라서 개발 사업을 전제로 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필수적인 항목에 한해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과정을 도입하여 개발의 리스크와 걸림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획대상지의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평가에서 개발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계획수립절차를 간소화하고 계획기간을 단축하자는 요구<sup>1)</sup>

1) 민간에서 제안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소요되는 적정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응답자의 51.9%가 6개월에서 1년 미만이라고 답하였으며, 6개월 미만도 20.3%에 달하였음. 그러나 계획의 인·허가 기간에 있어서는 관리자 입장과 실무적 입장이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지자체에서는 1년 미만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무자인 전문용역회사에서는 2년 미만까지도 생각하고 있었음. 이는 응답대상 대부분이 제도운영의 신속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계획의 인·허가 기간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11〉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사업추진시 어려움

소속 항목	도		시·군		중앙정부		연구기관		학계		전문용역회사		공사		기업		계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①	3	30.0	1	5.3	0	0.0	0	0.0	0	0.0	2	4.9	0	0.0	1	10.0	7	6.8
②	2	20.0	4	21.1	0	0.0	3	33.3	1	20.0	17	41.5	4	50.0	6	60.0	37	35.9
③	4	40.0	12	63.2	1	100.0	5	55.6	1	20.0	14	34.1	4	50.0	3	30.0	44	42.7
④	1	10.0	0	0.0	0	0.0	1	11.1	2	40.0	5	12.2	0	0.0	0	0.0	9	8.7
⑤	0	0.0	2	10.5	0	0.0	0	0.0	1	20.0	1	2.4	0	0.0	0	0.0	4	3.9
⑥	0	0.0	0	0.0	0	0.0	0	0.0	0	0.0	2	4.9	0	0.0	0	0.0	2	1.9
계	10	100.0	19	100.0	1	100.0	9	100.0	5	100.0	41	100.0	8	100.0	10	100.0	103	100.0

주: ① 국토계획 관련 법제도의 이해부족 ② 개별법에 의한 규제의 중복성 ③ 행정절차의 장기간 소요 ④ 관련지침의 부재  
⑤ 주민들의 민원제기 ⑥ 기타

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 4) 검토범위의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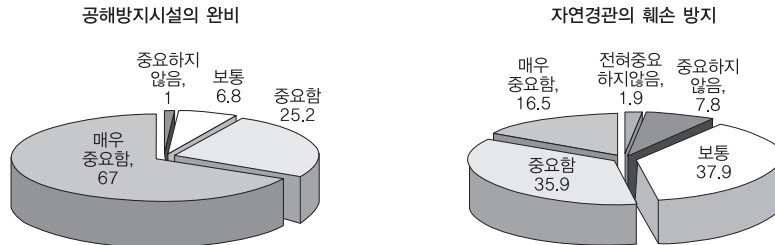
비도시지역의 농지·임야에 개별적으로 공장이 입지할 경우, 인근 주민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개발행위허가로 건설되는 산업 및 유통시설의 경우에는 주변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해방지시설의 완비나 자연경관의 훼손 방지, 자체용수의 확보 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 조사에 의하면, 전체응답자의 92.2%가 공해방지시설을 완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자연경관의 훼손 방지(전체의 52.4%), 자체용수 확보(46.6%)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무엇보다 기업과 주민과의 공감대 구성이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공장입지의 검토범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소음, 매연, 분진 등의 공해 차단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지구진입에 따른 교통지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 확폭 등 보다 계획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적인 성격과 관리계획적인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관리계획적 성격이라 함은 당해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목적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제



〈그림 8〉 주민의견 수렴사항

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검토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부분 사업대상지에 한정되어 현황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구단위계획 체제에서는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검토범위를 사업구역보다 확장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 5) 사업계획으로서의 특성반영이 미흡

비도시지역에 공장 및 유통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은 사업계획을 전제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계획은 도시관리계획과는 달리 사업계획의 목적과 지향점을 어디에 둘 것

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개발행위허가와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관리계획 성격의 제1종지구단위계획과는 달리 사업계획 성격이 강하다 할 수 있는데, 개발계획은 개별법에 의지하다 보니 사업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sup>2)</sup>. 또한 개별법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법에 의해 개발계획이 구상된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시행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와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지정 목적이나 대상지역이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적 성격과 관리계획적 성격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개별법과의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2)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지정목적과 성격을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다수가 난개발 방지와 바람직한 토지이용 유도 및 체계적 관리에 있다고 응답하였음

## 2. 계획단계

### 1) 입지 및 구역지정의 융통성 미흡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않은 취수장의 유하거리(상류 15km, 하류 1km) 이내 지역과 농업용저수지의 유하거리(상류 5km, 폐수배출 시설이 아닌 공장 2km) 이내 지역에 공장입지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폐수발생이 없는 공장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생활오수가 전부이며, 농촌지역의 경우 다수의 농업용 저수지가 산재해 있어 공장입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위의 규제 내용은 산업단지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지침 개정으로 유하거리 기준을 개별공장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폐수배출 시설이 없는 공장의 경우,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개별공장의 입지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실질적인 환경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개별 공장의 경우에는 성능 여부 및 처리기준 등을 확인하여 허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과거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와 산업촉진지구·시설용지구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처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대상이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이나 구역의 정형화를 위해서 계획대상지에 일부 농림지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제척시켜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역계가 부정형으로 이루어지는 등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지역특성에 맞도록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체면적의 일정 비율정도는 농림지역 등을 포함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융통성 있는 구역지정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 2) 형식적인 면적 요건규정

현재 개발행위허가는 지역에 따라 상이한 면적규정을 두고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규모를 1만㎡ 이하로 설정하는 명확한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전문가 조사에 의하면, 전체응답자의 59.0%가 조건별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오염원이 없는 공장의 경우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체의 41.0%를 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법령 완화를 통해 개별공장 입지보다는 계획입지를 위한

여건(산업단지조성 등)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편,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는 계획구역의 면적요건을 적정한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일정규모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거형을 제외하고는 개발행위의 기준이 되고 있는 3만㎡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률적이고 지시적인 면적요건 규제는 기반시설에 전혀 문제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실제적인 개발수요까지 충족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획일적인 구역지정에 대한 면적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반시설이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학교, 상하수도, 공공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성능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규제정책 또한 지시적인 규제에서 보다 융통성 있고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성능적인 규제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 3) 개별사업 관련법과의 정합성 미흡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사업계획을 전제로 도시관리계획이 진행되기 때문에 개별사업 관련법과 정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유형별로 관련사업제도와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즉, 개별사업법에 의한 세부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의 수립기준이 경직적으로 적용된다 보니 시행상에 불합리한 점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구단위계획이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고자 하는 초기의 목적을 벗어나서 개발 자체를 억제하는 규제로 오작동될 우려가 있다. 또한, 개별사업 관련법과 연계성 없이 계획수립지침이 작성되고 이를 적용하다 보니, 사업법을 근거로 지구단위계획을 회피하거나 지구단위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된다.

전문가 조사에 의하면, 전체의 42.7%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공장입지를 추진할 때 행정절차가 장기화되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하였으며, 전체의 35.9%는 개별법에 의한 규제중복 문제를 지적하였다. 특히,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공장입지를 추진할 때 가장 규제가 심하고 중복되는 개별법에 대해서는 전체의 71.6%가 『환경정책기본법』을 손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농지법』 12.7%, 『산지관리법』 7.8%, 『문화재보호법』과 도로 관련법이 각각 3.9%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사업계획보다는 관리계획에 의미를 두게 되면서, 정작 실질적인 사업법과는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유형별 개발사업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개발 사업이 바람직하게 유도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개발사업의 연계 계획 성격이 강한 만큼, 해당 사업이 국토관리 측면에서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며, 개별사업법에 부합하는 지침항목과 내용을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 4) 수립지침의 경직성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가장 경직적인 항목은 연접개발 기준을 들 수 있다. 전문가 조사에 의하면, 전체의 80.2%가 연접개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기반시설이 확충된 지역에는 연접개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연접개발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의 57.6%가 연접개발 완화기준을 용도에서 규모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손꼽았다. 다음으로는 전체의 18.5%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연접개발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연접개발 전면 폐지와 연접개발 완화대상에 제1종근린생활과 주택 이외 공장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각각 9.8%를 차지하였다. 그 밖의 의견으로는 연접규정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연접개발의 원칙을 정립하고 편법개발인 경우에 한하여 연접개발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표 12〉 연접개발과 관련된 부분

소속 항목	도		시·군		중앙정부		연구기관		학계		전문용역회사		공사		기업		계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①	1	11.1	3	18.8	0	0.0	0	0.0	1	20.0	1	2.7	1	14.3	2	20.0	9	9.8
②	4	44.4	2	12.5	1	100.0	1	14.3	1	20.0	7	18.9	1	14.3	0	0.0	17	18.5
③	3	33.3	8	50.0	0	0.0	4	57.1	3	60.0	23	62.2	5	71.4	7	70.0	53	57.6
④	1	11.1	2	12.5	0	0.0	2	28.6	0	0.0	3	8.1	0	0.0	1	10.0	9	9.8
⑤	0	0.0	1	6.3	0	0.0	0	0.0	0	0.0	3	8.1	0	0.0	0	0.0	4	4.3
계	9	100.0	16	100.0	1	100.0	7	100.0	5	100.0	37	100.0	7	100.0	10	100.0	92	100.0

주: ① 연접개발기준을 전면 폐지하여야 한다. ②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연접개발기준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③ 연접개발 완화기준을 용도에서 규모기준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④ 완화대상에 제1종근린생활과 주택 이외 공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기타



제시되었으며, 기반시설과 연계된 개발행위허가 면적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접개발의 규정이나 기타 경직적인 규정으로 인해서 사업 본래의 목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지침의 경직성 때문에 사업별로 차별성이 없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유형별로 관련 법규에 국한된 면적·도로·요구시설 기준 등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비도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도입취지에도 불구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골격과 내용을 상당부분 따르고 있

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처럼 도시관리계획적 성격에 치중하여 운영하다 보니, 개별사업들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비도시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일률적인 관리계획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관련 사업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어와 기준이 있음에도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의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개별사업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불필요한 기준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셋째, 동 지침에서 완화규정을 일괄적으로

〈표 13〉 투기목적의 개발행위허가제에 대한 의견

소속 항목	도		시·군		중앙정부		연구기관		학계		전문용역회사		공사		기업		계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①	3	30.0	2	11.1	0	0.0	0	0.0	0	0.0	3	7.1	0	0.0	1	10.0	9	8.7
②	1	10.0	2	11.1	0	0.0	2	22.2	0	0.0	16	38.1	2	25.0	3	30.0	26	25.2
③	1	10.0	1	5.6	0	0.0	3	33.3	4	80.0	8	19.0	1	12.5	3	30.0	21	20.4
④	5	50.0	9	50.0	1	100.0	4	44.4	1	20.0	14	33.3	5	62.5	3	30.0	42	40.8
⑤	0	0.0	4	22.2	0	0.0	0	0.0	0	0.0	1	2.4	0	0.0	0	0.0	5	4.9
계	10	100.0	18	100.0	1	100.0	9	100.0	5	100.0	42	100.0	8	100.0	10	100.0	103	100.0

주: ①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허가취소는 너무 가혹하다

②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전에 이를 방지한다. ③ 불이행시 이행부과금을 가중 부과하여야 한다.

④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기타

제시하고 때문에, 용적률·높이·건폐율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운영할 수 있는 차별적인 보상이 없다. 이것은 사업주체가 공공에 기여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게 하고, 당연히 받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어 지침을 운영하는 융통성이 없어지게 한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 3. 관리단계

#### 1) 초기 수립내용과 사업내용의 불일치

개발행위허가사업의 경우, 초기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내용과 사업승인을 받고 나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전문가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0.8%가 투기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만 득하고 허가내용대로 건축행위를 하지 아

니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전에 이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25.2%를 차지하였다<sup>3)</sup>.

한편,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입지가 확정된 공장이 관리계획 결정고시 이후에 업종이 변경되어 일정부분 행정절차가 반복되어 이행되는 경우가 있다. 전문가 조사에서는 전체의 33.7%가 변경이 필요하면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28.8%는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불필요한 절차이므로 사전에 지침으로 의도적인 변경을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체의 26.9%를 차지하였다<sup>4)</sup>.

이와 같이 초기의 사업목적과 상이하게 개발사업의 내용과 부분적인 변경이 있을시에 이를 적절히 대처 할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3) 그 밖의 의견으로는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 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음. 즉,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행위를 하는 실정으로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도록 하고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도록 제도상에서 의무화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의견을 피력하였음.  
또한, 개발행위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취소할 수는 없고, 개발행위 시 건축허가와 같이 의제로 허가해주고 허가 후 일정기간(건축법은 1년) 내에 건축이 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음. 반면, 토석채취 목적의 악용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착공과 병행하여 개발행위를 착수·시행하도록 강제규정을 두어야 하고 건축법령에 이행부과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개발행위허가 취소와 더불어 변경·훼손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4) 기타의견으로는 ① 절차의 간소화를 넘어 각 부문 간 시각차를 좁히고, 행정력 낭비와 승인기간 절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 ②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키되,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인허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또는 변경범위가 일정범위 이내인 경우(예 : 총면적의 50% 미만의 업종 변경)는 신고로 갈음하되, 업종의 전면개정인 경우는 절차이행 필요, ③ 오염배출용량이 감소, 당초 용량보다 일정비율 이내 증가 시 경미한 변경으로 절차이행 불필요, ④ 업종에 따른 규제 기준이 다르므로 오염물이 감소하는 업종으로 변경 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는 기준 필요, ⑤ 업종변경으로 인해 환경, 건축등 주요 변경부문에 한하여 협의절차 이행 필요, ⑥ 완화되는 업종변경은 절차이행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Ⅳ. 결론

비도시지역의 개별공장 입지제도(개발행위 허가제와 제2종지구단위계획) 운영실태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입지검토단계, 계획단계, 관리단계 등 3단계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입지검토단계에서는 ①계획주체간의 계획목적의 괴리, ② 개별법과의 위상 및 역할관계 정립 필요, ③ 계획수립절차의 간소화 시급, ④ 검토범위의 부재, ⑤ 사업계획으로서의 특성반영이 미흡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입지검토단계에서는 계획주체간에 계획수립 목적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계획을 사업계획과 관리계획으로 서로 다르게 보는 사업자와 관리자의 입장 간 차이를 의미한다.

둘째, 개별법과의 위상 및 역할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공장 및 산업유통시설의 건설은 국토의 계획 및 개발이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변경이나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의 개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인·허가 등 다른 법제도의 운영관행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토이용과 관련한 관련법간의 상호 위상과 역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계획수립절차의 간소화가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산업단지보다 엄격한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기반시설 요건(녹지율,

도로율, 완충녹지 설치의무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주로 사업계획을 전제로 수행되고 있는데, 현재 복잡한 개별법 규정은 사업의 리스크를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개발 사업을 전제로 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필수적인 항목에 한해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과정을 도입하여 개발의 리스크와 걸림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계획의 검토범위를 보완해야 한다. 비도시지역에 농지·임야에 개별적으로 공장이 입지할 경우, 인근 주민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개발행위허가로 건설되는 산업 및 유통시설의 경우에는 주변 지역주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해방지시설의 완비나 자연경관의 훼손 방지, 자체용수의 확보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한편,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는 검토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부분 사업대상지에 한정되어 현황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검토범위를 사업구역보다 확장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와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지정 목적이나 대상지역이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적인 성격과 관리계획적인 성격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개별법과의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분석항목인 계획단계에서는 ①입지 및 구역지정의 융통성이 없다는 문제, ②형식적인 면적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 ③개별사업 관련법과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 ④수립지침이 경직되어 운영되는 문제점을 다루었다.

우선, 개별공장의 입지 및 구역을 지정하는데 있어 융통성이 부족하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않은 취수장의 유하거리 이내 지역과 농업용저수지의 유하거리 이내 지역에는 공장입지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환경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개별 공장의 경우에는 성능 여부 및 처리기준 등을 확인하여 허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형식적인 면적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충청남도 시·군의 개발행위허가는 지역에 따라 상이한 면적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규모는 1만㎡ 이하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공장입지는 개별사업법에 의한 세부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의 유형별 수립기준을 중심으로 경직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시행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무질서한 개발억제라는 초기목적을 벗어나 개발자체를 억제하는 규제로 오작동되는 우려를 범할 수 있다.

넷째, 공장입지 관련 계획수립지침이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개발행위허가의 연접개발 기준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에서 일률적으로 면적, 도로, 요구 시설기준 등을 적용하면서 차별성이 없고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리단계에서는 초기의 사업목적과 상이하게 개발사업의 내용과 부분적인 변경이 있을시에 이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비도시지역의 공장입지 계획수단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고찰하고 제도운영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하여 공장입지 제도개선방안을 후속연구로 다루고자 한다.

#### 참고문헌

1. 건설교통부, 2006, 「2005 도시계획현황」.
2. 국무조정실, 2006, 「규제개혁기획단 백서」.
3. 국토해양부, 2008, 「국토계획법, 입법예고(안)」.
4. 박영철, 2006, 「계획입지 관리실태와 개선방안」, 「산업입지」제23호,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5. 반영운, 2006, 「개별입지 관리실태와 개선방안」, 「산업입지」제23호,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6. 사공목, 2006, 「일본의 공장설립 제도와 시사점 : 입지와 환경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KIET 산업경제」통권99호, 산업연구원.
7. 산업연구원, 2006, 「법인·공장설립 절차 개혁방안」.
8. 일본입지센터, 2006, 「공장입지법 해설」.
9. 중소기업청, 2005, 「창업 및 공장설립 가이드」.
10. 충청남도, 2006, 「충청남도 산업입지 중·장기 기본계획」.
11. 통계청, 해당년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 대만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와 사례

고승희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1. 대만의 주변지역지원 제도

### 1) “주변지역”의 범위

대만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지원사업이 적용되는 “주변지역”의 기본적인 범위는 행정구역상의 향(鄉), 진(鎭)<sup>1)</sup>으로, 우리나라의 “반경 5km”와 같은 거리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발전소(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포함) 주변지역은 동 시설이 소재한 현, 향, 진, 시, 구를 소재현(향, 진, 시, 구)으로 부르고, 이와 인접한 지역은 인접현(향, 진, 시, 구)이라고 지칭하며 기본적으로는 발전소가 입지한 해당 향이나 진이 “1”이라는 지원액을 받는다면, 이웃한 2개의 향이나 진은 “0.5” 비율의 지원을 받는다.

#### ■ 지원대상 주변지역

- 발전시설의 소재현(향, 진, 시, 구)
- 송전 및 변전시설이 소재한 촌(리)
- 인접향(진, 시, 구)

1) 대만의 행정구역은 省(直轄市)-縣(市)-鄉(鎮, 市, 區)-村(里)으로 구성됨. 현은 우리나라의 군 정도의 위상을 갖는 것으로 보이며, 향은 면, 진은 읍 정도의 위상을 가짐.



## 2) 전력개발촉진협력기금관리위원회 (Power Development Foundation; PDF)

전력개발촉진협력기금관리위원회(일명 전기회)는 주변지역 지원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1989년 2월 「전력개발지방원조법」에 따라 「전력개발지방원조기금관리위원회(약칭 전기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전력개발을 촉진하는 기구로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1991년 1월 「대만전력공사(台灣電力公司)전력개발원조기금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전원개발기금관리위원회(약칭 전기회)」로 전환되었고 1994년 11월 「대만전력공사전력개발촉진협력기금관리법」으로 법령칭이 변경되었으며 1997년 12월 전기회는 경제부 산하의 비영리재단으로 재조직되고, 1999년 회계년도부터 「경제개발기금」 산하에 편입되었다. 1999년 9월 「전력개발촉진협력기금수입지출관리및운용법」, 2000년 11월 「전력개발촉진기금집행요령」이 공표되었고 지원기금의 운영주체는 「전력개발촉진협력기금관리위원회(약칭 전기회)」가 구성되어 운영된다.

경제부가 임명하는 위원회의 13인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는 아래와 같으며 회의는 월 1회 개최된다.

### ■ 위원회 구성

- |                |                            |
|----------------|----------------------------|
| - 행정원 비서처      | 1인                         |
| - 경제부 국영회(國營會) | 1인                         |
| - 경제부 에너지위원회   | 1인                         |
| - 내정(內政)부      | 1인                         |
| - 대만전력공사       | 2인                         |
| - 교수 및 전문가     | 7인(법률가, 교수, 전문가, 환경기술자 포함) |

## ■ 업무

- 발전시설의 개발, 촉진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발전
- 전력개발 촉진·지원
- 전력개발촉진협력기금의 수입, 지출, 회계감사 관리와 운영에 관한 공지
- 각종 규칙의 명료화, 계획, 수행
- 지원금에 대한 신청의 승인, 법률에 규정된 규칙의 초안작성, 기획, 집행
- 지원금 이자수입 관리
- 위원회의 업무와 실적에 관한 정보의 공개
- 지원금 집행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 지원금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조사결과 분석, 효과에 대한 평가
- 조사와 연구 등을 포함한 기타 관련사항 수행

## 3) 지원금의 종류와 배분방식

### (1) 지원금의 자금원과 사용분야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전력의 발전(發電), 송전, 변전사업에 소요된 총 건설비의 1%와 전력(台電) 전기판매금의 1%. 성(省) 직영 혹은 민간소유의 개별 전력생산회사가 기부한 기타 지원금으로 이루어진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공공시설 건설과 전기요금 지원과 전력개발 사업과 관련된 교류(交流) 및 홍보, 주민 및 기타 기관의 신청을 받아 사회복지, 산업개발, 문화활동 등 지역개발 사업에 사용된다.

### (2) 지원금 집행규칙

## ■ 연차 지원금

연차 지원금은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향(鄉), 진(鎭)에 대하여 설비용량과 전년도 생산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지원을 배분하며, 지원금의 사용은 예산절차에 따른다. 두 개 이상의 향,



진이 발전소에 이웃한 경우에는 전체 지원금을 그 향, 진들에게 나누며, 이웃한 향, 진이 하나인 경우에는 지원금의 절반을 분배하고 현(縣) 정부는 관내 향, 진, 시, 구에 지원된 지원금의 5분의 1을 지원 받는다.

#### ■ 송전선, 변전소 건설 기금

송전선 및 변전소 건설기금은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며 기금의 7할은 착공시, 3할은 완공 이후 지급된다.

- 신규 송전선 : km당 50만 NT\$
- 신규(추가, 재건설) 초고압 및 1차 변전소 : 만kVA당 20만 NT\$
- 신규(추가, 재건설) 1차 배전 및 2차 변전소 : 만kVA당 30만 NT\$
- 현(縣) 정부는 관내 향, 진, 시, 구에 지원된 지원금의 1/5을 지급 받는다.

#### ■ 발전소 건설사업 촉진 지원금

발전소 건설사업 촉진 지원금은 발전설비 시공전에 총 장치용량의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 10만Kw 이하: 1,200만NT\$
- 10만Kw 이상, 50만 Kw이하: 2,400만NT\$
- 50만Kw 이상, 100만 Kw이하: 4,800만NT\$
- 100만Kw 이상, 200만 Kw이하: 9,600만NT\$
- 200만Kw 이상: 1억 9,200만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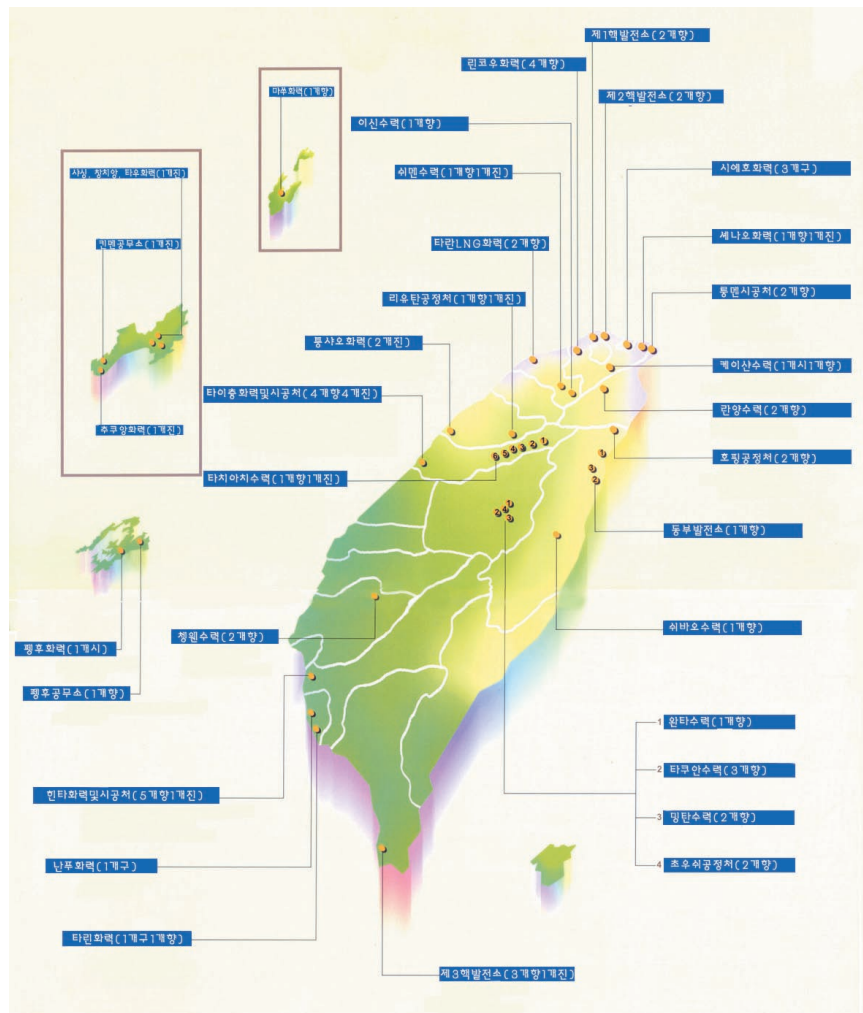
지원금은 소재향(진, 시, 구)의 공소 및 현(시)정부에 절반씩 지급하며 소재향(진, 시, 구)에 대한 지원금은 소재촌(리)에 사용하며 전체의 1/5보다 적어서는 안 되고 현(시)정부에 대한 지원금은 발전설비 소재지 주변지역으로 그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금은 발전소 건설 이전에 다음의 5단계로 나누어 지원된다.

- 입지선택 완료시 1/6
- 환경영향평가 완료시 1/6
- 행정원 승인시 1/6
- 토지수용시 1/6
- 건설승인시 2/6

또한 전기회사가 아래 사항들을 수행하는데 전체 지원금의 20% 이하를 배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 환경생태 조사, 연구 및 분쟁해결
- 전력개발, 송전 및 변전시설의 교류, 홍보 및 공무 촉진
- 전력개발, 송전 및 변전시설의 순조로운 건설업무를 위한 처리와 협력 촉진
- 전력개발, 송전 및 변전시설의 연구개발 촉진



[대만의 발전소 위치도]

## ■ 사업 지원금

상술한 세 가지 종류의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방정부, 농어민 조직, 학교, 공공 복지단체 등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들에 사용된다.

- 공공건설 및 공익활동
- 산업발전
- 환경생태보호 및 육성 활동
- 문화교육 및 사회복지 활동
- 장학기금 설립

## 2. 지역지원사업 추진 사례

### 1) 協和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례

協和화력발전소는 부지 44ha에 1985년 준공되었으며 발전설비용량은  $4 \text{ units} \times 500\text{MW} = 2,000\text{MW}$ 로 基龍市(타이페이 북쪽 항구 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基龍市는 대북현 중산구에 속하는 타이완의 3대 국제항의 하나로 인구는 396,000명이며 별 다른 산업기반이 없는 도시로, 발전소 1개, 비료회사 1개, 섬유회사 1개 정도가 基龍市의 주산업이고 농민으로 전업한 어민 일부가 거주하고 있다.

주민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어업권 보상, 온배수 피해보상을 위해 500만 NT\$를 시정부 수산계에 지급하였고 대만전력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역 행사시에 민간단체 등에 찬조금을 주고 있는 정도이며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별도로 없다. 발전소와 주민과의 관계는 일반적인 민원들만이 제기되고 있는 정도이며 주민보상을 위하여 발전소가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지역지원사업의 예로는 운동장, 헬스시설, 가라오케 등이 있다.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는 지방의회의원들이 중심이 된 시 심의위원회가 있으나 도교(Taoism) 등 신앙공동체의 영향력이 큰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이들 중심으로 사업이 선정되며, 따라서 사업선정을 둘러싼 큰 문제는 없다.

발전소가 입지하여 基龍市에 미친 영향으로는 고용 효과, 주민과 발전소간의 대면 의사소통을 통한 문제해결, 물품구입 등이 상당히 긍정적 효과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효과보다는 환경의 훼손에 대한 불만이나 지역 이미지 실추 등에 대한 불만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 2) 제1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례

제1원자력발전소는 石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8년 가동되었고 2개 기 1,272MW의 전력이 생산되고 있다. 이에 이웃한 金山은 제1원자력발전소의 이웃지역이면서 동시에 이곳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제2원자력 발전소의 이웃지역이므로 이웃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 있다.

이곳은 아열대 기후로서 온배수로 인한 해수온도 차이가 2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업에 대한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며 제1원자력발전소에 근무하는 530명 중 50명을 지역 주민으로 고용하고 있다.



[金山 원자력발전소 제2홍보관]



[지원금으로 설립된 金山중학교 체육관]

주민들이 만족하는 지역지원사업의 사례로는 金山지역 중학교 체육관을 7억 NT\$를 투자하여 건설하고 매년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으며 셔틀버스 운행과 石門, 金山, 三芝 각 1개 중학교의 급식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가구당 전기요금을 연간 3,500 NT\$정도 보조하고 있다.

대만은 별 다른 자원이 없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발전소 입지로 좋아진 점은 주민이 오히려 환경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고 경제적인 면에서 지역발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지원금으로 설립된 萬理鄉 마을회관의 내부]

### 3) 萬里鄉 (제2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의 사례

제2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례로 萬里鄉 萬里村活動中心(만리활동센터→한국의 마을회관에 해당)이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곳은 저녁마다 주민이 회의, 차, 운동, 취미활동을 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운영비는 향公所(鄉公所)에 신청하고 향公所는 발전소 특별사업(Special Program) 예산으로 신청하여 운영된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성적, 근로 여부, 재능에 따라 장학금 형태로 세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金山 원자력발전소 제2홍보관]



[지원금으로 설립된 萬里鄉 萬里區 漁會 건물]

萬里鄉 萬里區 漁會(한국의 「수협」에 해당)은 약 5,00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2001년



건물을 신축하였다. 운영예산은 어회에서 발전소에 신청하고 발전소는 전기회에 예산지원을 신청하여 운영된다. 어회는 어민의 보험, 의료, 기술훈련, 어민 상대 신용사업 등의 활동을 하며 발전소 입지로 인해 어획량이 줄은 것에 대한 불만은 있으나 발전소가 어장 청소 등을 지원하고 있다.

#### 4) 財團法人 北海岸金山醫院

##### (1) 설립배경

萬里·金山·石門의 3개 지역에 2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어 2개의 발전소 지원금이 3개 지역 모두에 지급되고 있다. 특히, 金山은 3개 지역의 중심이며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복지 차원에서 종합병원의 건립이 요구와 핵발전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 중 부상시 원자력에 대한 1차 진료기관이 필요시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02년에 대만전력공사에서 건립비용 NT\$ 300,000,000(한화 약 90억, 토지매입비 제외)를 지원하여 개원하였다.



[北海岸金山醫院의 위치]

##### (2) 지역개요

병원과 관련된 지역은 金山·萬里·石門·三芝이며 지역인구는 65세 이상이 14.34%, 14세 이하가 17.29%비율로 약 77,7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연평균 관광객은 약 1,656,000명(월평균 218,000명) 정도가 다녀가고 있다.



[北海岸金山醫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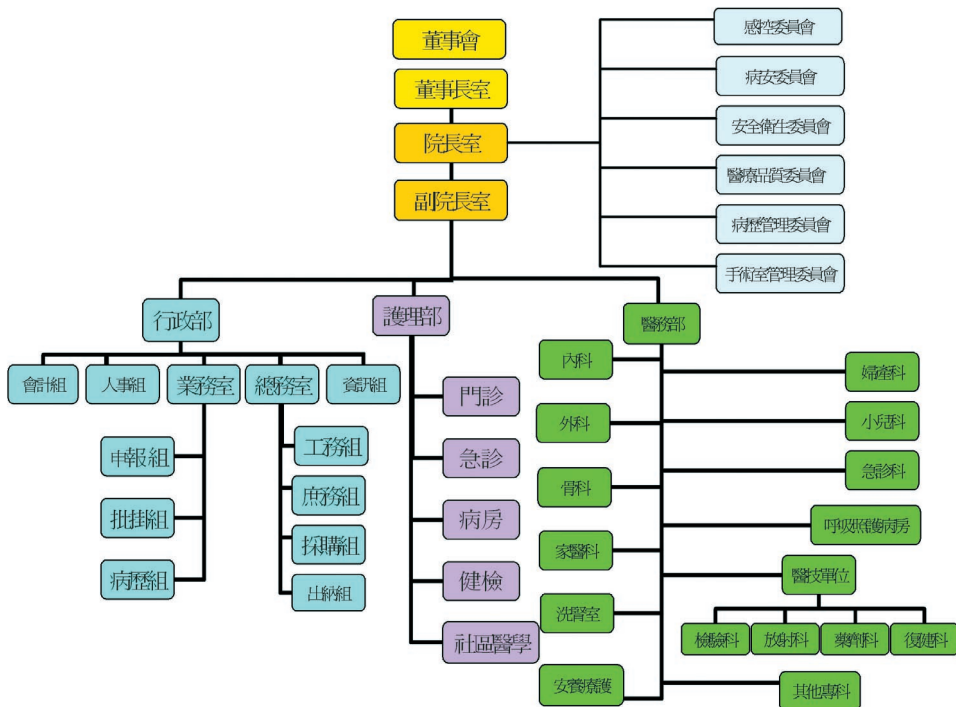
### (3) 운영

#### ■ 인력

병원의 인력은 전임의사 7명, 의기(醫技)인원 17명(약사 4명 · 검험(檢驗) 4명 · 방사(放射) 4명 · 복건(復健) 5명), 호리(護理)인원 24명, 행정인원 25명 등으로 총 73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 ■ 조직

병원을 운영하는 운영위원장은 타이베이시 환경위생국장이 맡아 병원의 운영을 총괄담당하고 있으며 운영위원은 대만전력공사 간부 약 50%, 타 병원장과 지방자치단체의 리더 약 50%로 구성되어 있다.



[北海岸金山醫院 조직도]



## ■ 경영

병원은 대만전력공사에서 병원의 설립 및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타이베이시가 지도·감독 및 연간 NT\$ 10,000,000을 지원하며 타이베이대학병원이 진료 및 경영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주민과 관련해서는 金山·萬里·石門·三芝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비의 50%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한달에 NT\$3,000,000 정도 적자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발전소 측의 지원이 중단되어 추후 타이베이대학병원에 경영권을 인계할 방침이다. 경영권 인계 후에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할인은 계속 유지된다.



[의원의 지원, 지도기관을 명시하고 있는  
北海岸金山醫院버스]

急診收費標準		
	急診掛號費	急診部分負擔
四鄉鄉民 【金山、萬里、石門、三芝】	150元	150元
一般民眾	300元	150元

[진료비 안내판]

## 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제언

### ■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종합적인 계획수립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역민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고 지역발전에 기여 될 수 있는 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사업이 소규모 단기적이며 지역 분배적 특성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은 계획수립과정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결과이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공공사업과 기타 지원사업을 보다 긴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계획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

여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지역리더에 대한 교육 및 지원활동이 강화

지원대상으로는 지역의 리더, 주민대표(이장단), 지역개발위원회, 공무원, 농·어업인 단체 등이 될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지역의 리더 발굴을 위한 교육체제 지원, 지역발전의 인재육성, 토론회, 선지지역 방문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 ■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한 유관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및 관련 연구소와 학계 등을 통합하여 협조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지원사업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자문 및 용역실시 뿐만 아니라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 주민의 수용도 증대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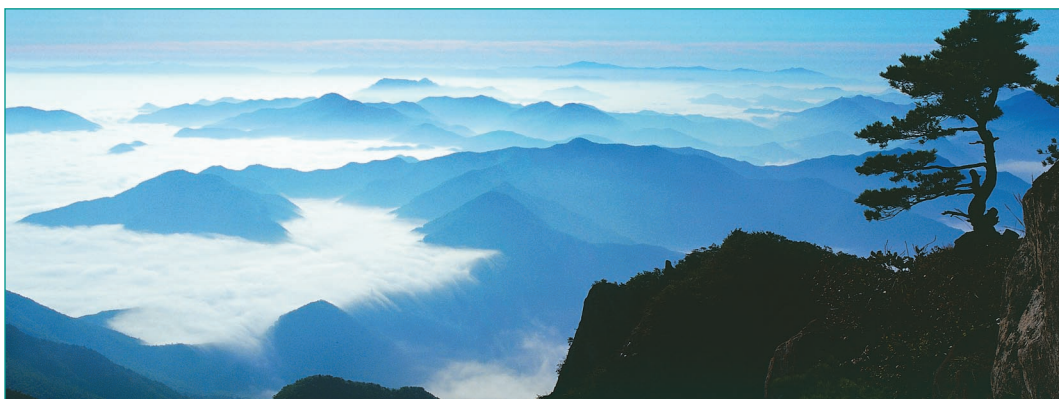
주민의 수용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주민의 발전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불안감을 제거하고 발전소의 긍정적인 제반활동을 이해토록 하는데 홍보활동의 의의가 있다. 지역주민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시키고 상호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관계가 필요하며 정보의 전달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양방향 적인 것이어야 하며 항상 필요한 정보를 주민들이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개방된 전달체제가 필요하다.

#### ■ 지역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강화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역발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지원금을 할애하여 지역개발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하여 자발적인 조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

조영재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금산읍의 현황

충청남도 동남쪽 끝자락 금산군의 중앙부에 위치한 금산읍은 면적 21.57km<sup>2</sup>, 인구 2만 3,405명(2007. 7)의 도시로서 상(上)·중도(中島)·신대(新垓)·하옥(下玉)·아인(衙仁)·상옥(上玉)·계진(桂珍)·양지(陽地)·음지(陰地) 등 총 9개 리(里)로 이루어져 있다. 1940년 읍으로 승격하였고 북쪽으로 구릉에 의해 금성면(金城面)·군북면(郡北面), 동쪽으로 봉황천(鳳凰川)에 의해 남일면(南一面), 남서쪽으로 진악산(進樂山) 줄기와 구릉에 의해 남이면(南二面)·진산면(珍山面)과 경계를 이루며, 읍역(邑域)은 중앙을 작은 하천들이 동류하여 평지를 이루고 있다.

금산읍 남서부에는 진악산(732m)·월봉산(543m) 등이 솟아 있으며, 중북부는 높이 300m 이하의 완사면을 이루고 있다. 남부산지에서 발원한 소하천들이 면내를 흐르고 음지리·신대리·양지리 일대에 평야가 발달했다. 해방 후 개성 인삼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인삼이 활발히 재배되었고, 여름에도 서늘한 고원성 기후와 사질양토가 인삼의 생육에 적합하여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삼재배지가 되었다.

금산은 대전-통영간 고속국도, 국도 13, 17, 37호선, 국지도 55호선, 지방도 635호선 등이 지나는 광역교통체계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간선도로들이 금산읍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수도권, 영호남, 대전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라 할 수 있다.

금산읍의 주요 문화재로는 금산향교(錦山鄕校:충남기념물 121), 탑선리 석탑(塔仙里石塔:충남문화재자료 326), 아인리(衙仁里) 석탑(충남문화재자료 327), 금산 대원정사(충남문화재자료 337), 금계관(錦溪館), 홍범식 순절비(洪範植殉節碑), 계진리 석탑(桂珍里石塔) 등이 있다.



〈그림 1〉 금산 인삼포

## 금산읍의 유래 및 역사

금산의 명칭은 비단에 수를 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산천이라는 뜻의 ‘금수강산(錦繡江山)’을 줄여 ‘금산(錦山)’이라 불렀다고 한다.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볼 때 금산의 금수강산과 같은 자연을 빗대어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고려 공민왕 때의 강호문은 “금산 땅이 마치 무릉도원과 같다”고 하였으며, 고려시대 문장가 이규보는 “산이 극히 높아서 들어갈수록 점점 그윽하다”고 하였다. 조선 세종 때 강문수는 “여러 산들이 빙 둘러 높이 솟아 병풍처럼 가려 실로 사방이 막혀 있는 곳”이라 표현하였고, 만해 한용운 선생은 금산의 계곡과 울창한 숲을 보며 “이곳을 보지 않고는 천하명승지를 논하지 말라”고 극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금산의 자연경관은 예부터 많은 선현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의 명성을 간직하고 있으며 남한의 작은 금강산이라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을 듯하다.

금산은 영남에서 충청 내륙으로 진출하는 관문으로써 역사적 변환기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금산 지역은 백제 멸망 전 신라군이 영남지역에서 진군하여 계백의 결사대와 격전을 치르는 황

산별에 이르는 통로였으며 이 때문에 신라와 백제의 주요 접전지역이 되었다. 또한, 견훤과 왕건의 쟁패과정, 임진왜란의 금산전투, 한말의 민란, 1862년의 금산농민군 항거, 1894년 동학농민봉기 등과 같은 변환기에 상대적인 양 세력의 각축 장소가 되었다.

금산에서는 또한 조상들의 애국·충절의 혼을 엿볼 수 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한양과 의주로 진격하기 위해 금산으로 침입한 왜군에 맞서 당시 금산 군수였던 권중(權悤)이 맞서 싸웠으나 장렬히 전사한바 있으며, 금산을 점령한 왜군이 전주로 진격하자 전라도절제사 권율(權慄)과 동북첨감 황진(黃進)이 1,500명의 군사로 배티에서 맞서 싸워 대승을 거뒀는데 이것이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이치대첩’이다. 이뿐 아니라 호남의 의병장 고경명이 이끄는 7천 의병과 조헌(趙憲)과 영규(靈圭)가 이끄는 700의병이 왜군들과 맞서 싸우다 장렬히 순절한 곳이 바로 이곳 금산이다.

## 금산의 자랑

### ▷ 금산인삼

금산은 인삼의 고장이다. 읍내로 들어서면 ‘인삼로’, ‘약초로’, ‘건삼전길’, ‘개삼로’ 등 인삼을 알리는 거리 안내판들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중심가를 벗어나면 한때 우리나라 인삼의 95%까지 생산해 낸 인삼 경작포들이 금산만의 독특한 풍광을 이루고 있다.

금산읍에서 남쪽 9km정도 떨어진 남이면 성곡리 개안이 마을에서는 인삼의 눈을 뜨게 한 곳이라는 뜻으로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해오고 있다. 지금부터 약 1,500여년 전에 강씨 성을 가진 선비가 일찍이 부친을 여의고 모친마저 병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효자인 아들은 진악산에 있는 관음굴에서 정성을 들여 모친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그러던 어느날 꿈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나 "관음불봉 암벽에 가면 빨간 열매 세 개가 달린 풀이 있을 것이니 그 뿌리를 달여드려라. 그러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강선비는 꿈이 하도 이상하여 꿈속에서 본 암벽을 찾아가니 과연 그런 풀이 있어 뿌리를

캐어 어머니께 달여 드렸더니 모친의 병은 완쾌되었고, 그 씨앗을 남이면 성곡리 개안이 마을에 심어 재배하기 시작하니 이것이 우리고장에서 처음으로 인삼을 인공적으로 재배하게 된 것이라고 하며, 인삼의 모양이 마치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人蔘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림 2〉 금산인삼

이런 효행설화를 간직하고 있는 금산인삼은 '생명의 뿌리요, 불로장생의 영약'으로 일컬어지면서 백제인삼의 명맥을 오늘에 이르게 하고 있다. 인삼의 주성분인 사포닌 함량은 분지면서 고랭지인 금산처럼 기온 차가 심한 곳에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세계에서 이곳 금산인삼은 그 효능을 제일로 인정받고 있다. 금산 사람들은 이 명약 금산인삼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하다. 금산이 금산일 수 있음은 '금산인삼'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이다.

## ▷ 인삼약초시장

인삼장으로 유명한 금산 인삼·약초시장은 전국에서 생산된 인삼의 80% 이상이 이곳에서 거래되며, 5일 간격으로 장이 형성되나 인삼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5일 장의 개념은 무너져 매일 인삼·약초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인삼·약초시장은 인삼, 약초상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밀집해 있어 '인삼의 거리'로 불리어지고 있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재래시장과 현대적인 유통센터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인삼의 거리에는 우리나라 백삼의 70~80%가 유통된다는 금산인삼국제시장, 장날이면 하루 거래량이 120여톤에 이른다는 금산수삼센터, 쾌적하게 쇼핑과 인삼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금산인삼종합쇼핑센터와 장날 평균 300여종의 약초가 거래되는 약령시장, 2일장과 7일장이 서는 날이면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인삼전통시장이 연이어 있어 갖가지 인삼과 약초를 구경도 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금산은 국내 최대의 인삼약초시장으로 인삼약초 관련업체가 1,192개소나 되며 금산읍에 들어서면 인삼약초 향기로 인하여 한약방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또한 금산, 무주, 진안 등의



산악지방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약초들을 만날 수 있으며 시골장의 정취를 즐길 수 있다.

### ▷ 금산인삼축제

예로부터 전해오던 금산의 민속제인 인삼제가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으며 이어지다가 1981년 축제로 자리잡았다. 1999년 제1회 국제인삼교역전 개최를 통해 국제인삼시장의 요충지로 발돋움하였고 제16회부터 문화관광부 집중육성축제로 선정되었다. 2006년에는 인삼축제와 함께 금산세계엑스포가 열려 일본, 홍콩 등 세계 15개국 80개 기관이 참석하고 내국인 64만7천명, 외국인 1만3천명 등 총 66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행사가 치러졌다. 금산인삼축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이미지 재고를 통하여 대규모 행사로 성장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문화관광축제로서 주목받고 있다.

축제는 일반적으로 새벽1시 진악산에서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내고 인삼재배가 최초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진 개삼터에서 개삼제를 지내는 것으로 막이 오른다. 이에 앞서 강처사에게 인삼을 내려준 산신령께 감사하며 풍년을 기원하는 관음굴 기도회가 열리는 등 다른 축제와 달리 전통적인 무속신앙의 요소가 강하다.

인삼의 탄생설화를 배경으로 한 강처사 설화 마당극, 인삼마당극 공연 등이 행사기간 동안 매일 펼쳐지며, 충청남도 전통민속놀이인 금산물떼기농요(충남무형문화재 16), 100명으로 구성된 금산 아낙네들의 기우제인 농바우끄시기, 남성적이면서 빠르고 경쾌한 가락의 금산농악, 금산좌도풍물굿, 인삼장사씨름대회, 전통민속놀이 등 금산의 전통문화가 시연되어 사라져가는 전통민속놀이의 보존과 계승발전의 현장을 엿볼 수 있다.

이밖에도 체험형 이벤트가 다양하게 벌어진다. 그 중 가장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 인삼캐기여행은 참가자가



〈그림 3〉 금산인삼축제 홍보포스터



직접 인삼밭에 들어가 인삼을 채취하고 최적의 인삼 재배방법, 인삼 캐기, 좋은 인삼 고르기, 인삼요리시식 등 인삼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는 테마여행으로서 최고의 인삼을 수확하는 기쁨과 채취한 인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2008년도는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 제28회 금산인삼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 ▷ 금산다락원

다락원은 연령적으로 노인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분야별로는 문화예술인, 체육인, 여성, 농업인, 장애인 등을 두루 아우르는 ‘복합다기능 문화복지체육센터’이다. ‘락(樂)’은 즐거움 락, 좋아할 요, 풍류 악 등 3가지의 의미를 가진 글자로서 “문화를 주제로 하는 금산다락원”을 표현하는 글자이며, 많은 즐거움·기쁨 그리고 풍류가 함께하는 동산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금산다락원은 7개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 기관이 지원하는 12개 보조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건립되었다. 건립사업은 2만여 평의 부지에 연건평 5,400평의 규모로 추진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288억 원이 소요되었는데, 본격적인 공사는 2000년 12월에 시작하여 2004년 5월 부분 준공을 마친 후 10월에 정식 개관하였으며, 스포츠센터는 2006년 개관하였다. 다락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적인 건축가의 설계와 일급건축업체의 시공을 통해 높은 수준의 건축물로 탄생하였으며, 건축협회에서 선정하는 2005년 베스트 건축물 7에 선정되었다. 건축의 특징으로는 예술성과 시설의 유용성, 운영관리의 경제성을 지향하였으며, ‘가화만사성’과 ‘선의의 마을’이라는 점을 표현하였다.

다락원에는 문예회관, 도서관, 스포츠센터, 청산회관, 문화원, 건강의 집(보건소), 스포츠센터, 만남의 집(관리동), 청소년의 집, 장애인의 집, 여성의 집, 농민의 집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정기적으로 공연과 전시회가 열리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지역민을 포함한 외지인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다락원은 많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으며 전국 단위의 문화관련 행사에서도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어, 금산의 공직자들은 물론 많은 단체와 군민들이 다락원에 보다 큰 관심을 갖고 금산의 큰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다.

### 금산읍의 개발 여건 및 과제

금산읍은 2003년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소도읍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인삼·약초산업의 메카, 건강수도’로 발전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에 의거하여 전략사업이 선정·추진되었다. 인삼종합전시관 리모델링 및 증축, 인삼·약초시장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인삼·약초시장 내 주차장 및 화장실 신축, 금산동초등학교 남측 주차장 조성, 인삼약초테마거리 조성, 미개통 도시계획도로 개통, 중앙공원 조성 등이 본 사업에 의해 추진된 주요 사업들이다.

또한, 금산읍은 금산 인삼의 고장으로서 인삼 유통과 더불어 연구·산업·관광기능이 복합된 기능이 새로이 입지토록 계획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금산읍 북부권 사회·문화활동특화지구(다락원), 동부권 교육특화지구, 남부권 체육특화지구, 서부권 인삼·약초특화지구 등 4개의 거점을 중심으로 특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계획에 의하여 4개의 개발거점과 중심부의 중심시가지지를 연계코자하는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개발거점들을 연계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는 아직 미흡하며, 중심시가지와 개발거점을 연계하기 위한 기반조성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금산읍 중심부를 동서남북으로 관통하는 중앙로, 진악로, 인삼로, 개삼로, 그리고 금산읍을 동서로 관통하여 흐르는 금산천과 후곤천에 대해 접근성이나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시기능이 금산읍의 동부에 입지하고 이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교통접근성이 열악한 구도심의 낙후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향후 대전광역시의 확장에 따른 대도시 근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정주 인구를 늘리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금산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Compact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도시화의 외연적 확산에 대응하고 낙후된 도심부의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산읍 동부는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계획에서 추진하는 금산인삼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기능적으로는 금산읍의 기존 기능과 충돌되지 않도록 배치하며, 공간적으로는 금산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능을 융·복합화함으로써 금산읍의 활성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기능의 입지로 인한 중심시가지의 공동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중심상점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심가로 환경개선, 구시장길의 경관·미관 개선사업 등이 필요하며, 도시기능의 외연부 입지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산읍 동부에 생태도시형 신시가지지를 조성하여 도시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금산읍 동서남북의 개발거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동서남북을 환형으로 연결하는 교통네트워크로서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경관도로 등의 조성이 필요 하며, 금산천과 후곶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인삼약초시장과 중심상점가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생활밀착형 가로가 형성 되어야 한다. 또한, 중심시가지 교통체계 확충과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를 조성함으로써 기존 도심 활성화를 통한 금산읍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금산군, 금산군지
2. 금산군, 금산군 종합발전 중기계획, 2008.
3. 금산군, 금산읍 종합육성계획, 2003.
4. 금산군, 금산통계연보, 2007.
5. 금산군, 1000개의 자연공원 이야기, 2001.
6. 금산군 홈페이지, [www.geumsan.go.kr](http://www.geumsan.go.kr)
7. 충남발전연구원, 안용산, 산꽃세상으로 가는 생명의 고향 금산, 열린충남 2004. 겨울호.

## 황토밭에서 갯바람이 키워낸 ‘태안 6쪽마늘’ 재발견

이용원 | 월간 ‘토마토’ 편집실장

### ‘축제’는 잔치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여는 잔치는 전통적으로 무엇인가를 함께 축하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 조상이나 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제’ 의식이 결합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특산품’을 주제로 한 축제가 전통적인 집단 잔치의 개념에 가장 접근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문화·예술 관련이나 스포츠·종교 관련 축제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준다.

축제현장을 찾는 사람들도 대부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기에 주최 측도 어디에 방점을 찍고 축제를 준비해야 하는 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는 우후죽순으로 생긴 수많은 색깔 없는 축제와는 분명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다.

물론 기쁨과 감사보다 특산품의 홍보와 판매에 더 많은 무게가 실렸다는 것이 옛날 집단 잔치와 조금 다른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 난장의 신명이 올라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태안 6쪽마늘 요리축제’는 먹을거리 축제가 가질 수 있는 전형을 잘 표현해냈다. 지난 6월 20일부터 3일간 펼쳐진 축제는 몸에 좋은 건강한 우리 마늘을 찾는 국민들을 태안으로 불러들였다.

축제가 열린 태안군민체육관 공간을 분할하면서 각 공간에 내용을 채워나가는 형식을 취했다. ‘부스’라고 불리는 형태는 이제 박람회의 한 전형이다. 홍보와 상담·판매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이 방식은 공간 활용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반듯하게 정리돼 찾는 이들에 편의를 증진시켜 준다.

군민체육관으로 향하는 길이 중심이었다. 탱글탱글한 마늘이 잔뜩 쌓여 참가자들을 맞고 있었다. 마늘을 놓고 거래가 이루어지니 당연히 시끌벅적 활기 넘치는 장터분위기가 연출됐다.

각설이 공연이 없어도, 대단한 경품 추첨이나 흥겨운 가무가 없어도 어깨가 들썩이고 팬스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신기했다. 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신명의 정체는 삶에 대한 진지한 자세 때문일 게다. 그 신명이 6쪽마늘 축제장으로 고스란히 옮겨졌다.

작두에 마늘 줄기를 싹둑싹둑 잘라 담아주는 분주한 손길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웠다. 부스 안을 가득 채웠던 마늘이 모두 나가고 다시 마늘을 가지러 간 차가 돌아올 때까지 달콤한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그만큼 판매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다는 증거일 게다.

## 달콤한 6쪽마늘 최고

각 부스의 마늘 판매주체가 각 읍·면 농협이었다는 점도 현장에서 만나는 마늘 재배 농민의 모습과 함께 우리 6쪽마늘에 대한 신뢰를 더해 주었다.

“태안 육쪽 마늘은 지금이 제 철이죠. 아무래도 중간 유통 과정 없이 판매하고 있으니 다른 곳에서 사는 것보다 여기서 저렴하



게 살 수 있어요.”

안상석(29·태안군 이원면)씨는 쌓아 놓은 마늘을 모두 팔고 마늘 실러 간 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마늘은 크기에 따라 한 집에 1만5천원에서 2만원에 이루어졌다. 재작년 축제 때와 같은 가격이었다. 태안과 이웃한 서산시와 번갈아 축제가 열리니 가격비교도 재작년이 될 수밖에 없다. 조금 복잡하지만 축제장을 찾는 외지인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닌 듯 싶다. 불과 20여 분 거리니 6쪽마늘을 구입하기 위해 산지를 직접 찾아오는 도시 소비자에게는 내내 같은 ‘마늘 축제’ 일 뿐이다.

“해마다 찾아오고 있는데 작년에는 못 샀어요. 축제 마지막 날에 조금 늦게 왔더니 없더라고요. 그게 약 올라서 올해는 일찍 왔어요. 여기 와서 사면 속아서 살 일도 없고 가격도 싸고 좋잖아요. 확실히 수입마늘하고는 맛이 다르거든요. 수입은 맵고 독하기만 한데 여기 6쪽 마늘은 매우면서도 달콤한 맛이 있어요.”

천안에서 왔다는 조한민(59)씨 얘기였다. 열한 집을 샀는데 덩으로 마늘 5통밖에 받지 못한 것이 내심 서운한 눈치였지만 저렴한 가격을 감안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고 한다.

## 꼼꼼한 콘텐츠 노력의 결실

모든 부스가 마늘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면 조금 지루하기도 했을 텐데 마늘을 이용한 음식과 가공식품 코너도 적절하게 섞여 구색을 갖추고 택배부스까지 설치하는 세심함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스를 돌아보면서 6쪽마늘에 ‘요리’를 더해 축제를 풍성하게 하려고 했던 주최측의 노력을 충분히 엿볼 수 있었다. 신선한 마늘을 가득 넣은 돼지불고기와 6쪽마늘을 첨가한 사료로 키운 마늘 한우까지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흥미로운 먹을거리는 숯불에 구운 통마늘이었다. 거무스름하게 구워진 6쪽



마늘을 입으로 붙어 식히며 쪼개 먹는 그 맛이 나름 재미도 있고 맛났다. 삼겹살을 불판에 구워먹을 때 올려놓는 국적불명의 채 썬 마늘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그 길 끝에는 소박한 무대가 설치되었고 그 곳에서 다양한 전통 무대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다. 마늘 한 접을 사 밀 것에 신고는 무대 앞에 앉아 박수를 보내며 공연을 지켜보거나 아예 무대 앞 공간으로 나서 흘러나오는 흥을 맘껏 펼쳐놓는 참가자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

판매와 홍보 부스와는 별도로 태안 6쪽마늘 주제관과 마늘품종 전시관도 설치되었다. 충실한 전시품목과 안내 도우미 배치 등을 통해 자칫 구색 갖추기 수준에서 머물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한 점도 돋보였다. 주제관과 전시관 사이에 만들어 놓은 ‘바’도 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축제의 내용을 알차게 채우려는 주최 측의 노력이 엿보였다.

축제 현장이면 으레 만나는 외부 상인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주최 측이 정리에 나선 모양이다. 대신 여성농업경영인과 농가주부모임 등에서 준비한 식당이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내 놓고 있었다.

### 여기서 잠깐!!

## 하루 마늘 두 개로 힘찬 하루 ‘으랏차차차’



태안 6쪽마늘은 이미 그 명성이 드높다. 최고 품질로 손꼽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황토밭에서 갯바람이 키워낸 건강한 태안 6쪽마늘은 맛과 향이 독특하고 암세포 성장억제 성분인 알리신과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신은 위 점막을 자극,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위를 튼튼히 하고 소화능력을 높여 준다. 또 위화아릴 약효성분이 혈액을 따라 순환하며 세포에 활력을 주어 성선(性腺)을 자극,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스테미너와 정력을 강화시킨다.



또 태안 6쪽마늘은 근흥면 가의도라는 섬에서 종구를 채종하여 바이러스 감염도 없고 마늘통이 작아 조직이 치밀하여 저장성이 좋다고 한다.

한지형 마늘인 태안 6쪽마늘은 난지형 마늘보다 아린 맛이 적고 입안에서 마늘냄새도 금방 사라진다.

태안 6쪽마늘이라고 해서 모두 6쪽은 아니다. 세포분열이 왕성하면 9쪽까지도 나올 수 있고 마늘통이 작을수록 저장성과 맛, 향기가 뛰어나다고 한다.

보관할 때는 비와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마땅치 않으면 껍질을 벗겨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 체험 마늘밭에서 직접 마늘 캐보기

마늘 구입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축제를 즐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체험행사장은 별도로 준비했다. 행사가 펼쳐지는 태안군민체육관 인근이 아니라 차를 타고 별도로 찾아가야 한다는 점이 약점이기도 했지만 세 점, 혹은 다섯 점을 캐 수 있으니 마늘 소비가 그리 많지 않은 가정이라면 체험행사장에서 캐 마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겠다. 더군다나 점당 5천 원을 지원해 1만 원만 부담하면 한점을 가져갈 수 있으니 저렴하기도 하다.



체험 마늘밭이 준비된 곳은 소원면 법산리와 원북면 대기리였다. 축제장으로부터 자동차로 10여분 남짓 떨어진 곳이다. 현장에는 모임 단위, 가족 단위로 마늘 캐기 체험을 온 사람들이 밭에 흠어져 있었다.

아이들에게 마늘 캐는 경험을 주고 싶어 멀리 전라북도에서 왔다는 한 주부는 마늘 줄기를 잡고 당기면 쑥쑥 빠져 나오는 알 굵은 마늘에 연신 싱글벙글이었다.

밭 흙이 그대로 묻어나는 마늘을 직접 손질해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가족·연인과 함께 하는 그 소중한 추억과 어찌 바꿀 수 있겠는가?

한 가지 더, 태안의 발은 광활하다. 해안가라는 특징 때문인지 산이 있어도 위압적이지 않고 종지를 얹어놓은 것처럼 야트막하다. 골짜기의 발과는 사뭇 다른 광활(?)한 그 모습도 체험을 한결 즐겁게 한다.

찾아가는 길도 걱정할 것이 없었다. 안내 팸플릿과 도로 표지판, 곳곳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든든했다.

마늘만 들고 집에 돌아가려니 영 허전하다면 학ampo나 천리포, 신두리 해수욕장을 찾아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오는 것도 좋다. 20여 분 안쪽에 다다를 수 있는 곳이다.

## 한여름에 떠나는 충남 축제와 여행의 조화

### ☒ 보령머드축제 ☒

- 일시 : 2008년 7월 12일(토) ~ 7월 20일(일)
- 장소 : 대천해수욕장 일원

올해도 어김없이 머드축제가 펼쳐진다. 이미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보령머드축제, 안 가보면 후회한다.

보령머드축제는 동양에서 유일한 패각분 백사장을 자랑하는 대천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축제로 해수욕 및 머드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청정갯벌에서 진흙을 채취하여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는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된 머드분말을 이용한 머드 마사지와 머드체험행사가 운영된다.



체험행사로는 대형 머드탕, 머드씨름대회, 머드슬라이딩, 머드교도소 등이 준비되어 있다. 늦기 전에 홈페이지에 접속해 필요한 신청을 하자.

- 홈페이지 : <http://www.mudfestival.or.kr>

## ❖ 2008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

- 일시 : 2008년 8월 19일(화) ~ 11월 11일(화)
- 장소 : 공주시 우성면 연미산자연미술공원

2년마다 열리는 국제미술행사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가 바로 올해다. 뜨거운 8월부터 어느덧 맵사한 바람이 불어오는 11월까지 백제의 고도 연미산에서는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가 펼쳐진다.

긴 일정상 미루고 미루다보면 그냥 놓쳐버리고 또 2년을 기다려야 하는 불상사가 닥칠지도 모르니 미리미리 챙겨두어야 한다.

상큼한 아이디어가 톡톡 튀어나는 그곳에서 자연과 동화되는 인간의 참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갤러리라는 사각 공간 속에서 만나던 작품과는 전혀 다른 작품을 만나러 제비 꼬리산으로 가보자.

- 홈페이지 : <http://www.natureartbiennale.org>



## ❖ 금산 인삼 축제 ❖

- 일시 : 2008년 8월 29일(금) ~ 9월 7일(일)
- 장소 :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광장 및 인삼 약초거리 일원

일상적으로 장을 찾는 사람이라면 우연히 마주칠 축제다. 이미 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종주국으로서 맹위를 떨친 금산. 올해도 어김없이 고품질의 인삼을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한다.



축제 기간 중 펼쳐지는 행사가 너무 많아 무엇을 대표적으로 소개해야할지 모를 지경이다. 축제 속에 전국N세대 축제라는 또 다른 행사가 들어가 있을 정도니 말이다. 다양한 경연대회와 체험관이 준비되

어 있어 골라보는 재미도 있다. 그중 인삼약초, 문화, 건강 등 3대 분야별 베스트 선정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 두자.

- 홈페이지 : <http://www.geumsan.go.kr/festival/>

### ☒ 부여 서동·연꽃 축제 ☒

- 일시 : 2008년 7월 18일(금) ~ 8월 3일(일)
- 장소 : 부여읍 동남리 궁남지(서동공원 일원)

서동의 사랑이 궁금하지 않은가? 연꽃으로 유명한 궁남지에 아름다운 사랑의 전설도 담겨 있으니 그를 확인하러 부여로 떠나보라. 축제 기간 중 주말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와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연꽃문양 탁본 체험과 연꽃비누 만들기, 수막터널 체험, 서동요 의상 및 백제 의상 체험 등은 상시 운영이니 언제 가든 걱정없이 즐길 수 있다.



- 홈페이지 : <http://www.buyeotour.net/>

## 지역축제의 내실화 방안 마련돼야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축제의 계절이 돌아왔다. 4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수백 건의 지역축제가 개최된다. 충남지역에만 같은 기간 중 공주 동학사 봄꽃, 금산 산 벚꽃, 연기 복사꽃, 당진 매화·진달래 축제 등 각종 봄꽃 축제와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예산 윤봉길 문화축제, 청양 장승문화축제, 태안 군민 축제 및 지역 특산물인 논산 딸기, 부여 토마토, 보령 및 서천의 키조개 축제 등 20여개의 지역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지역 이미지 개선과 홍보 및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지역축제가 지역특산물 판촉, 관광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앞 다투어 지역축제를 확대해 왔다. 충남의 경우, 보령 머드축제, 금산 인삼축제 및 강경 젓갈축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대표적인 지역산업축제로 각광받고 있다. 그동안 지역축제의 급성장으로 대중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축제의 질적인 측면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지역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축제의 질적 개선과 내실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첫째, 지역축제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양산된 축제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그동안 지역축제는 지역발전차원에서 급격히 증대됐다. 전국적으로 200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축제가 1995년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 1,200여개로 6배 이상 증가했다. 무분별하게 양산된 지역축제는 지방행정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양산된 지역축제를 방치하고는 지역축제의 내실화와 질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충청남도는 지역별로 형태와 개최 시기가 비슷한 지역축제의 자율적인 통폐합을 촉진하여 축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둘째, 지역별로 대표축제를 선정하여 독창성과 차별성이 있는 명품축제로 육성시켜야 한

다. 그동안 비슷비슷한 지역축제의 양산으로 일부 지역축제는 활력과 경쟁력을 잃고 있다. 지역별로 한두 개의 차별성이 있는 축제만을 선별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축제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모든 지역축제를 차별성과 품격을 갖춘 명품축제로 육성하기 어렵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이유이다. 충남은 이미 백제문화제의 세계화전략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명품축제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축제 품격을 크게 높여 지역축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그동안 소외되었던 소지역 단위의 자생적인 축제의 발굴과 육성에 치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주도의 지역축제는 크게 증가했으나 “즐거는 축제”, “흥겨운 축제”, “축제다운 축제” 등 지속성을 갖춘 “자생적 축제”는 많지 않았다. 축제천국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수는 외국과 비교할 때 크게 적다. 프랑스에선 연간 4만개, 일본에서는 3만개의 축제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을 단위의 전통적 문화와 예술, 계절적 놀이축제 등 주민들이 스스로 즐기는 축제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민-관 축제 추진주체 간 역할분담이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 그동안 대부분 지역축제는 관 주도로 추진돼 왔다. 관 주도의 축제개최가 자생적인 생명력을 지닌 축제발전을 막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행정기관의 역할은 대표축제만을 주도하는 데 한정하고 나머지 축제는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해야 한다. 민간부문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분야의 축제 추진 역량강화와 함께 창의적인 축제 프로그램과 문화 상품 개발 및 축제 마케팅 등 전문분야의 지원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축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지역축제는 단순히 지역홍보 및 소득증대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역축제는 주민의 참여와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일탈과 체험의 즐거움을 선사함으로써 생활의 활력과 정신적 풍요로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홍보와 경제효과는 주민 모두가 즐기는 축제문화의 부산물이다. 축제의 본질적 가치 실현에 충실해야 지역축제의 진정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심했으면 한다.

---

• 충청투데이 4월 11일(금) 게재

## 수도권 규제 완화와 사회비용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이라는 화두 아래 그동안 기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고질적 규제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혁파하려는 의욕적인 노력을 보여 왔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과반수 확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성원의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정책혼선은 국민에게 혼란과 불안을 넘어 실망감까지 안겨주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경솔한 재검토 논의와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대표적 사례이다. 장기적인 국가 공간정책을 충분한 사전검토와 대비책 없이 중단 또는 완화한다면 심각한 국가적 피해와 사회비용의 발생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첫째,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방경제의 침체와 공동화를 가속화한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당장 지방의 기업유치와 경제자유구역 조성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수도권 규제 완화 논의만으로도 지방유치가 이미 결정된 기업까지도 지역투자를 망설이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발전은 지역내부의 역량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다른 지역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간 4~5배에 달하는 발전격차에 대한 고려 없이 지방발전을 논할 수 없는 이유이다.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48%, 금융·업무·정보 등 경제-사회부문의 중추관리 기능의 2/3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의 자생적인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런던, 파리 및 동경 대도시권들은 집중도가 우리나라 수도권의 1/2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자생적 발전의 촉진 차원에서 강력한 집중억제시책을 추진한 바 있다.

둘째, 수도권 규제 완화는 이미 심각한 상태로 추락한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킨다. OECD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쟁력은 전 세계 78개 대도시권 중 68위에 불과하다. 수



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적 성장과 제조업 위주의 발전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계적 대도시권에 걸 맞는 산업구조와 도시개발의 질적 고도화를 추구해야 한다. 수도권의 양적 성장과 제조업 입지 확대만을 추구하는 수도권규제 완화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특히 수도권은 토지이용차원의 계획적 통제장치가 미흡하고, 난개발의 주범인 공장의 자유입지 비중이 지방의 1.6배인 54.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자유입지를 규제하는 공장총량제를 폐지하면 수도권의 난개발 확산은 불가피해진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다양한 측면서 수도권 내 과밀, 혼잡비용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악화시키며, 세계 도시지역으로서의 수도권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 전체의 발전 잠재력과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수도권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수도권의 고비용, 저효율의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한편, 수도권 규제 완화로 초래된 수도권 집중의 심화는 지방경제의 쇠퇴와 공동화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지방주민의 생업기반 파괴와 국토의 발전 잠재자원을 사장(死藏)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밖에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제조업 생산성이 계속 악화되는 수도권에 제조업 투자를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수도권은 과밀혼잡비용의 증대로 제조업의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 노동 생산성은 이미 지방 평균의 75% 수준으로 추락한 실정이다. 생산성이 추락하는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일부 기업집단의 이익과 경제 활성화라는 일시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너무 큰 국가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무모한 시도이다. 일시적 정책오류가 국가경쟁력은 물론 국가의 최대 과제인 경제의 잠재성장률마저 약화시키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

\* 충청투데이 5월 9일(금) 게재

## 광역 분권형 국가의 건설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세계화의 전개와 함께 국가운영의 기본 틀이 변하고 있다. 그동안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속에서 일사 분란한 국정운영을 자랑해 온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많은 선진 국가들이 앞 다투어 광역 분권형 국가 건설을 선언하고 나섰다.

일본의 경우에는 2018년 시행을 목표로 2007년 1월부터 총리 산하에 “도주제”(道州制) 비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방제(聯邦制)를 연상시키는 도주제 도입방안 및 도주제 기본법안 제정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56개의 도도부현(都道府縣)을 10~13개의 도주(道州)로 통합하여 독립적인 광역경제권 육성을 시도하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 행정구역의 통합과 함께 지방정부에 자주입법권 등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각 지역이 특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여 국가발전을 선도토록 한다는 것이다.

광역 분권형 국가 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중앙집권체제의 폐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의 중앙집권체제는 산업화시대에 고도성장의 신화를 창출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는 한정된 자원에 대한 일사분란한 통제와 관리, 그리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화와 정보지식사회가 대두되면서 획일적인 정책목표의 달성과 가치보다는 다양한 선택과 가치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고, 결국 획일성, 일원화, 평균화를 추구하는 중앙집권체제는 국민생활에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또한, 중앙집권체제의 경직성과 관료화는 투자낭비와 자원이용의 비효율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 중앙집권의 가장 큰 폐해로 도쿄의 집중화정책을 들고 있다. 일본의 중앙정부 부처들은 전국의 경제·사회 활동을 관리, 감독, 주도하기 위해 산업별로 전국업계단체를 만들어 도쿄에 집중시켰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특정문화시설도 도쿄권에 우선 투자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더욱 동경의 중앙부처는 각종 인·허가 및 행정지도의 권

한을 독점함으로써 지방은 두뇌기능을 갖추지 못한 단순 생산기지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도쿄가 국내적으로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한 반면 국제적 차원의 경쟁력과 영향력은 낮아졌고, 중앙집권의 과도한 통제와 수직적 행정은 지역의 창의적인 경제발전과 지역 기업의 잠재력 발휘를 막아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중앙집권이라는 “낡은 나라의 형태”를 이대로 방치하고는 개방경제시대에 국가적인 활력과 경제 회생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도주제를 통한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도주제” 추진 노력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앙집권의 폐해와 부작용은 비단 일본만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경직된 중앙집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방자치와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특히 인위적으로 세분화된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단위의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다. 바로 실용정부가 제안한 5+2 광역경제권 육성전략도 그 중 하나이다. 5+2 광역경제권은 전국 16개 광역행정구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경제권으로 통합하여 광역단위로 종합적인 경제발전과 지역개발을 추진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직까지 실용정부의 5+2 광역경제권의 구체적 형태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새로운 광역경제권이 현재의 중앙집권체제와 지역 간 조세 및 재정의 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일부 분야에 한정하여 지역 간 협력의 강화나 공동사업의 추진만을 도모할 경우 그동안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광역행정과 광역권 개발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

5+2 광역경제권이 모든 지역이 지닌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국가적 활력과 경쟁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집권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분권의 실현 및 불균형한 지방재정기반의 조정과 비효율적인 행정구역의 개편 등 국가운영의 기본 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국가운영의 틀을 바꾸기 위한 광역 분권형 국가 건설에 관한 보다 진지한 연구와 폭 넓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 충청투데이 6월 6일(금) 게재

## 지역균형정책 혼선 방지하지 말아야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균형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규제,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정책 축소 및 재검토 논란 때문이다. 그동안 비 수도권지역의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는 집단적으로 새 정부 지역정책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와 공동 대응 입장을 천명해 왔다. 지난 6월 2일에는 충남 시·군의회 의장단까지 나서 수도권 규제시책 완화와 행정도시 건설 축소 등 새 정부의 지역정책을 “지역 죽이기”를 위한 “반 분권, 반 분산, 반 균형”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의 논의’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지방이전을 결정했던 기업들은 이전을 미루고 있고, 일부 지방입지 기업들조차 수도권로의 유턴을 시도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지방분권의 추진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에 편중된 획일적이고 경직된 중앙집권적 국가 발전전략을 채택하면서 수도권의 과대한 집중과 혼잡, 지방의 황폐화를 초래했다. 현재 지방의 경우 일부 대도시권을 제외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생산력이 높은 젊은 인구의 외부 유출로 자족적 인구 성장기반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

충남의 경우, 최근 활발한 해외투자과 기업유치 및 산업 활동 증대에도 불구하고 노인 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충남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은 이미 15%가 넘었고, 16개 시·군 중 7개 시·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방으로 기업이 이전을 하고 싶어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지방이전 자체가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동안 경솔하게 제기되어 온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충분한 사전 준비와 사회적 합의기반이 없는 반 분권적이고 반 균형적 정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지역의 동요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그동안 초래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성의 있는 해명으로 지역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근거 없는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균형정책 논란의 진위와 배경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의 불분명한 태도와 소통 부재가 정책불신과 불안감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둘째, 새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정부의 단순한 정치적 선언만으로는 지역에 쌓인 정부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기 어렵다. 그동안의 정책 혼선으로 지역 경제는 이미 심한 피해를 입었고, 정부에 대한 불신의 벽도 깊게 쌓였기 때문이다.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토대로 실용성이 있는 정책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끝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정부조직 체계를 하루 빨리 복원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후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조직체계의 혼선이 초래됐다. 구체적인 시책 추진의 총괄 담당조직과 기구가 불분명해지면서 지방의 불신과 불만이 증폭됐다. 반 분권적 중앙집권적 정책추진과 반 균형적 수도권 집중화 정책과 같은 1980년대 개발 패러다임으로는 개방경제시대의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미래 변화에 대한 창조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대전일보 6월 18일(수) 게재된 원고 편집본임.

## 늙어서 대접 받는 7가지 방법



권오덕 | 충남발전연구원 이사·전 대전일보 주필

지난 79년 필자가 미국 국적의 노스웨스트 항공기를 탔을 때 애  
기다. 비행기가 이륙한지 20분 쯤 지났을 즈음 푸른 눈의 아리따운  
스튜어디스가 다가와 무슨 음료를 원하느냐고 물었다. 미네랄워터와  
오렌지 주스, 그리고 세븐업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었다. 나는 세븐업을 주문했다.

미네랄워터나 오렌지 주스는 마셔 봤지만 세븐업은 처음 대하는 음료수여서 호기심이 발  
동했다. 마셔보니 맛이 별로였다. 사이다와 비슷했는데, 우리의 사이다보다 쏘는 맛이 덜한  
데다 다소 느글느글하고 짭짤했다. 그래서 나는 그 후 미국 내 비행기를 타면서 더 이상 세  
븐업을 주문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30년 가까이 흐른 어느 날 나는 한 잡지에서 세븐업(seven up)이란 단어를 접했  
다. 음료수가 아니라 나이 들어 대접 받는 7가지 업그레이드 방법이었다. 미국의 어느 저명  
작가가 일곱 개 영어단어에 업(up)이란 접미어를 붙여 만든 것으로 재미있고 그럴듯해 소개  
해 볼까한다.

첫째는 치어업(cheer up)이다. 항상 밝고 활기찬 표정을 가지라는 것이다. 나이 들면 웃음  
이 사라지고 표정이 어둡고 우울하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보라. 대부분의 노인들은 활기가  
없다. 일본도 우리와 비슷하다. 모르는 사람에게조차 미소를 보이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과 대비된다.

물론 동양인들은 전통적(?)으로 무표정하지만, 이제 밝은 표정으로 바뀌야할 때다. 나이

들수록 의식적으로라도 밝은 표정을 짓도록 노력해보자.

둘째는 클린업(clean up)이다. 몸과 마음을 항상 깨끗이 해야 한다. 하루에 한번 씩 샤워를 하는 건 기본이고 내복도 자주 갈아입도록 하자.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 3국의 목욕에 대한 속설이 있다. 일본인은 목욕은 자주 하지만 내복은 자주 갈아입지 않고, 한국인은 내복은 자주 갈아입지만 목욕은 자주 안 한다. 반면 중국인은 목욕도 않고 내복도 자주 갈아입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통했던 얘기다.

요즘은 웬만한 중산층만 돼도 목욕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 예전과는 다르다. 그럼에도 노인들은 고유의 냄새가 나기 마련이다. 욕식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다. 따라서 이젠 가볍게 향수를 뿌리고 냄새나는 요소를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 손자손녀들도 가까이 온다.

셋째는 드레스업(dress up)이다. 옷을 잘 입자는 얘기다. 명품 등 값 비싼 옷만을 입자는 게 결코 아니다. 정장이나 수트, 티셔츠 등도 몸에 맞게 입고 조금은 화려한 색상을 고르자. 넥타이나 캐주얼과 팬티 양말도 마찬가지다. 이젠 검정이나 짙은 곤색 등 너무 어두운 색깔은 피하자.

‘옷이 날개’란 말도 있지 않은가. 차림새에 따라 대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넷째는 기브업(give up)이다. 무리한 욕심은 금물이라는 얘기다. 나이에 맞게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라는 충고다. 젊을 적 생각만하고 의욕만 앞서 과욕을 부리다간 패가망신할 수 있음을 알자.

‘한심한 남자’ 시리즈라는 조크가 있다. 50대에 새로 사업하려 여기저기 돈 꾸러 다니는 사람, 60대에 이민가려 영어 학원 다니는 사람, 70대에 공 안 맞는다고 코치 받으러 골프 연습장 다니는 사람, 80대에 거시기 안 된다고 비아그라 먹는 사람은 모두 한심한 남자다. 모두 욕심 탓이다.



다섯째는 쇼업(show up)이다. 모임에 자주 나가라는 것이다. 동창회나 행사에 얼굴을 자주 내밀고 어울리자.

여섯째는페이업(pay up)이다. 웬만한 비용은 남에게 미루지 말고 자신이 지불하라는 것이다. 특히 젊은 사람이나 후배들과 어울릴 때는 페이업해야 떳떳하고 대우도 받는다.

마지막 일곱째는 셋업(shut up)이다. 말을 줄이라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말 많은 노인들이 너무 많다. 아무리 명 스피치라도 ‘황혼연설’을 좋아할 젊은이는 없을 터다. ‘침묵은 금’이다.

이상 세븐업을 소개했는데, 7가지 중 나는 페이업과 셋업의 실천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다.

페이업은 어느 정도 재정능력이 뒷받침돼야 하고, 셋업은 입을 닫기가 말처럼 쉽지 않아서다. 그중 셋업이 더욱 어렵다. 쓸데없는 말로 피해 입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수 없이 본다. 얼마 전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도 말이 너무 많아 대통령의 품위를 많이 손상시켰고, 자주 곤욕을 치렀다.

이순(耳順)을 넘긴 필자도 나이를 먹으면서 이 세븐업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세븐업은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젊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길들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심신과 건강 도모를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일곱 가지 업그레이드, 세븐업을 꼭 실천해보자.

## 日本에서 느끼는 百濟人の 恨과 公지



변평섭 |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일본열도 곳곳을 다니다 보면 ‘일본속의 우리 문화’를 발견하고 공지를 느끼게 되지만 기쿠치성(鞠智城) 방문은 또 다른 강렬한 느낌을 갖게 했다.

구마모토(熊本)현에 있는 기쿠치성이 백제인에 의해 축성된 것임은 잘 알려진 것이지만 그 주인공이 이 곳 광장에 세워진 기념동상 속에 명확하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동상 설명문에 왜 백제인이 여기까지 와서 성을 쌓았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어 오늘의 한·중·일 동북아 정세가 1,300년 전에도 지금처럼 심각했음을 느끼게 한 때문이다.

663년 신라와 당나라, 소위 나당(羅唐)연합군에 백제가 멸망하자 일본은 그들의 모국과 같았던 백제를 되찾기 위해 훗날 天智천황이 된 中大兄왕자가 인솔하는 2만 7천명의 원군을 파견한다. 그러나 일본 구원군은 지금의 금강포구로 여겨지는 白村江해전에서 당나라 수군에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만다.

4회에 걸친 해전에서 일본은 400척의 배가 불타는 바람에 이 일대 바닷물이 연기와 불길로 빨갱게 물들 정도로 치참한 패배를 입었다. 이때 후퇴하는 일본군과 함께 많은 백제인들이 일본으로 피난을 갔는데 주로 귀족과 지식인이었다.

이들은 일본에 도착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머지않아 당나라가 신라와 함께 침공해 올 것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고 일본 야마토 조정은 사태가 긴박해짐을 실감하고 4개의 성을 쌓는 일에 총력을 기울인다.

후쿠오카현에 있는 오노성(大野成), 사가현의 기이성(基肄成), 나가사키현의 가네다성(金田成), 그리고 바로 이곳의 65헥타르에 달하는 넓은 기쿠치성이 그것.

이 성을 총지휘한 사람이 바로 백제에서 건너온 귀족 憶·福留. 광장 가운데 세워진 동상군(群)에 오직 그의 모습만 우아하고 단정하다. 그리고 다른 동상들은 모두 서 있는데 백제 귀족만은 앉은 채로 손을 들어 지휘를 하는 모습이다.

그는 왜 여기에 왔을까? 나당연합군이 일본으로 침공해 오면 이를 격파하고 나아가 잃어버린 조국 백제까지 되찾겠다는 결의 때문이었을까?

동상 밑을 받치고 있는 좌대는 6개의 동판이 장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두 개가 백제 멸망의 최후를 그린 것이다.

하나는 나당연합군이 부여를 공략하자 백마강 낙화암에서 백제왕실의 궁녀들이 장열하게 몸을 던져 강물에 빠지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일본 수군이 당나라 수군과의 백촌강 해전에서 참패를 당하는 모습이다. 기쿠치성의 축성이 얼마나 나당연합군의 위협 앞에 이루어졌는가를 실감케 한다.

이와 같은 1,300년 전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일본의 깊은 언덕에 숨 쉬고 있음을 바라보는 백제 후손의 가슴은 아릴 뿐이다.

그리고 그 옛날에도 지금과 같이 한반도를 에워싸고 일본, 중국 등 3국의 '힘의 균형'과 긴장이 있었음에 지정학적 우리 운명을 새삼 느낀다.

이와 같은 감정은 규슈에서 더욱 강하게 느껴졌다. 일본의 맨 남쪽 끝, 그곳에 가이문다케산(開門山)이라는 해발 922m의 높은 산이 있다.

지금은 휴화산이지만 1000년 전만 해도 활화산으로 하늘 높이 불을 내뿜었다. 그러니까 백제, 신라시대 한반도와 일본의 왕래가 빈번할 때 이 산은 밤낮없이 불을 뿜어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등대가 되어 주었다.

이 화산의 불을 보고 백제 사람들은 노를 저었으며 이브스끼(指宿)에서 잠을 자고 다시 교도나, 나라, 오사가 지방으로 떠났던 것이다. 우연히도 이 화산의 불이 멈추고 그 등대역할이 끝나면서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오만해진 것은 아닌가?

이곳 규슈지방은 특별한 분위기로 한국인으로서 우월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 매우 기분이 좋았다.

그 첫 번째 것은 미야자끼(宮崎)에 있는 일본 최초의 천황으로 일컬어지는 진무(神武) 신궁, 그리고 그의 출생지로 전해져 오는 동굴 속의 우도신궁이다.

이곳에는 약 2,600년 전 하늘로부터 인간이 내려와 일본을 다스리게 됐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 이때 한반도에서는 이미 선사시대가 끝나고 진한, 마한 등의 삼한통치가 시작된 때라 신궁이 삼한에서 건너간 한민족일 것이라는 게 공공연한 해석이다.

이렇게 한반도에서 건너간 우리의 아득한 조상들은 역시 이곳 미야자끼의 휴가(日向)에서 통치자로 즉위하고 한동안 이 일대를 다스리다 나라 등 본주로 진출했다는 것이다.

사실 휴가 인근의 사이토바루 고분군은 놀랄 만큼 다양한 모습으로 밀집돼 있어 고고학에 문외한인 사람도 이곳이 왕족의 무덤이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 가운데는 발굴 도중에 작업을 중단하고 다시 덮어버린 고분도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고분 속에서 일본역사의 정통성을 뒤흔들어 놓을 사실들이 나타난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그 사실이란 일본 최초의 통치자가 바로 우리 한반도에서 건너왔다는 것이다.

보다 더 극적인 것은 여기서 가까운 '백제마을'을 방문했을 때이다. 마을 이름도 '백제(百濟·원래는 南鄉村)'이고 우리나라 부여의 옛 박물관 객사를 모델로 실제 크기로 복원된 구 다라노야카타(백제관)은 기와, 지붕, 기둥, 모두가 우리나라 건물로 착각할 정도다.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준 전 촌장 다바루 마사토(田原正人)씨의 명함까지 한글로 되어있어 더욱 인상적이었다.

'당신은 어쩌면 백제왕손일 것이오'라는 말에 그 역시 매우 흡족해했다.

전해 오는 이야기로는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망하자 의자왕을 비롯하여 모두 당나라에 붙잡혀 갔으나 정가왕이라고 하는 왕자 등이 일본으로 탈출, 이곳에 숨어 살았다는 것이다. 신라는 후환을 두려워하여 이곳에까지 자객을 파견, 정가왕을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할 뿐 패망한 나라의 영광이나 기록은 모두 파괴되고 묻혀 버리듯이 지금 그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한때 일본을 지배한 것이 우리 조상이라면, 그리고 그들에게 문화를 심어준 것이 우리였다면 우리가 일본보다 모든 면에서 못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일본의 곳곳에 커다랗게 남아 있는 백제의 발자취 - 그러나 문득 지나온 발자취에만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향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야 백제 후예인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다.

## 도청이전 신도시 교육특구 추진, 용역보고회 개최

- 다양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최고의 교육 도시로 육성



충청남도가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청이전신도시를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청과 도교육청, 홍성·예산군, 홍성·예산교육청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4월 4일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홍성·예산 일대의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문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의견이 교육특구 사업에 반영되었다.

도청이전신도시에는 혁신적인 일반고와 국제고등학교 신설 방안이 제시되어 우수 학교가 유치되고, 홍성·예산군은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 도심형 다문화체험센터 설립 운영, 우수 원어민 교사 지원 확대 등 원도심의 교육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충남도는 도청이전신도시를 교육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11일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오제직 교육감, 이종건 홍성군수, 최승우 예산군수가 ‘도청신도시, 홍성·예산군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교육특구는 금년 상반기에 지식경제부에 신청하여 연말까지 승인을 받아 홍성·예산군은 내년부터 시행하고, 도청신도시는 2012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청이전신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홍성·예산군이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원도심권의 인구유출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2012이후 도청이전신도시에 특목고와 우수 고등학교가 설립되면 신도시로의 유관기관·단체 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 충남도 ‘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확정

- 2012년까지 48개 사업지구에 4,792억원 투자

충청남도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공주시 등 8개 시·군에 4,792억원을 투자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한다고 4월 8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충남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서북부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 지역으로 분류되어 도가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한 공주·보령·논산시, 금산·부여·서천·청양·태안군 등 8개 시·군의 성장동력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18일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는데

이번에 확정된 ▲균형발전 기본계획은 지원대상 시·군의 특성과 투자의 효율성, 파급효과가 큰 성장동력사업을 선정하여 2020년까지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균형발전 개발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으로 시·군별로 미래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특성화 사업을 선정하고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 기간 내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하였다.

특히 ‘균형발전 개발계획’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5개년 동안 4개 분야 48지구의 성장동력사업에 4,7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문화·관광분야는 공주문화관광지 조성 등 21지구 3,373억원 ▲기반시설 확충 분야는 금산군 개삼터 관광지 진입도로 개설 등 9지구 421억원 ▲지역특화분야는 금산군 인삼



명품화사업 등 12지구 860억원 ▲생산유통분야는 서천군 장항 수산물처리저장 시설 등 6지구 138억원이 투자되며,

재원마련은 ▲국비 1,452억원 ▲도비 1,452억원, ▲시·군비 1,357억원 ▲기타 531억원으로, 사업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은 행정도시 건설과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을 계기로 이 두 성장거점을 양대축으로 삼아 낙후된 서남부지역을 집중 지원하여 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장애인의 날』 행사 다채롭게 열려

— 23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도민 3천여명 몰려 ‘휠체어’ 등 체험



충남도는 제28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4월 23일 천안 종합운동장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다채로운 행사를 열고 3천여명의 도민들이 장애의 구애없이 어울려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이 날 행사는 1부는 기념식, 2부는 문화행사체험 순으로 나누어 열렸는데, 1부 기념식에서는 충남도 장애극복 대상으로 선정된 강창수(홍성군)씨와 모관순(천안시) 등 16명이 이완구 도지사로부터 표창패를 받았다.

2부에서는 장애인 한마음대회를 열고 충남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악단「희망울림」의 연주회를 시작으로 시·군 대표 노래 및 장기자랑, 가훈 써주기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이 날 장애인의 어려움을 스스로 체험해 보기 위해 이 지사를 비롯한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장애인들을 휠체어에 태운 채 밀고 입장하기, 장애인 재활기구 시연해 보기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각종 체험행사가 펼쳐졌으며, 장애인 예술인들이 그동안 창작활동을 통해 작업해온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참가자들이 작품 감상을 만끽하는 하루가 됐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1일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을 홍보하여 비장애인들이 우리 생활주변에서 이 법률의 효력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날 행사에서 이 지사는 “각기 다른 재료가 어우러져 전혀 새로운 맛을 내듯이 장애인, 비장애인, 남녀노소가 함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고 말하면서

“앞으로 장애인 여러분은 더 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지역과 사회발전을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장애물 없는 여건조성과 각종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장애인복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충남, 환황해경제권 중심축으로 우뚝”

- 25일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 2025년까지 7조4천억원 투입 5,505만㎡ 개발
- 환황해권 첨단기술산업의 국제협력거점 도시 개발

충청남도과 경기도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왔던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이 4월 25일 드디어 확정되었다.

지식경제부는 25일 이윤호 장관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21일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었던 충남의 송악, 인주, 지곡과 경기도의 포승, 향남 등 5개 지구에 대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 주변은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미래동력산업의 국내 최대집적지이며, R&D연구소, 대학, 연관업종 등이 다수 입지하고 있어 세계수준의 클러스터로 발전가능한 양호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등 외자유치의 선행조건인 매력적인 투자환경이 국내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개발비용 등 투자매력이 있는 곳이다.

외국인들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이 보장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기존 경제구역과 차별화된 자동차 부품, IT, BT 등 첨단산업과 국제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3단계에 걸쳐 오는 2025년까지 개발될 예정이다.

지정 지역은 충청남도 당진군, 아산시, 서산시 일원과 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일원에 위치하고 구역 총면적은 총 5,505.1만㎡으로, 이중 충남이 3개 지구 2,959.7만㎡, 경기 2개 지구 2,545.4만㎡이며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 지구 면적은 5,263.1만㎡며 개발 유보지역은 242만㎡(4.4%)이다.

지구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충남 당진군 송악지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중심지로 자동차 부품산업과 전자정보산업 및 국제비즈니스 기능을, ▲아산시 인주지구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산업 및 관광위락 기능을, ▲서산시 지곡지구는 첨단 자동차 부품산업 기능을, ▲경기 평택시 포승지구는 첨단산업과 국제물류 및 국제비즈니스 외에도 관광과 위락기능을, ▲화성시 향남지구는 생명공학 산업 글로벌 메카로 육성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종 도시 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 개발 등의 계획들이 동시에 지정·승인 또는 변경되는 효과가 있고,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실시계획 승인시 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36개 법률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 등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 처리가 된다.

▲또한, 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과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할 수 있게 되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국세, 지방세,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수도권 규제 적용배제, 노동규제 완화 등 이 있게 되며,

▲또한,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가 제공되며 외국교육기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용, 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 확대 등의 효과가 있게 된다.

이러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외국인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충남도와 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당진에 설립하기로 하고 오는 7월 개청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으며,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능력을 갖춘 개발사업자의 선정을 거쳐 내년중에는 실시계획을 확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범정부적 지원 발판을 마련하여 기반시설 및 주요 시설의 입주, 외국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아 지역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될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본격화 되면 인프라 조성과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44조 8,950억원, 부가가치유발 15조 4,630억원, 고용창출 28만 3천여명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충남지역은 11조 940억원 생산유발액과 3조 3,55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액, 5만 9,498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충남도의 관계자는 “구역지정을 위해 보내주신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두바이, 싱가포르, 푸둥 등 세계적인 경제특구와 경쟁하여 전세계 기업들이 가장 투자하고 싶은 매력과 역동적인 경제구역개발의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도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 충남도, 단독 외자 전국 자치단체 중 최고액 유치

- 러시아 DI그룹 6억5,000만 달러 투자 유치



충남도가 자치단체의 단독 외자 유치 금액으로는 가장 많은 6억5000만 달러(한화 6천5백억원)의 러시아 자본을 유치했다.

이완구 충남지사와 신준희 보령시장, 로스토프주 돈인베스트 그룹(Doninvest Group · DI 그룹) 파라모노프(Paramonov) 회장, 타가즈코리아 이승철 사장은 5월 13일(현지 시각) 타간로그시 타가즈 자동차 공장에서 2012년까지 충남에 6억5,000만 달러를 들여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경기도가 LG트윈스와 해외 기업이 합작한 외자 12억 달러를 유치하고, 삼성전자와 소니와 합작한 S-LCD가 충남에 9억 달러를 투자한 사례는 있지만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한꺼번에 유치한 외자 규모로는 이번 DI 그룹의 6억5,000만 달러가 가장 많은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 유치한 외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가장 큰 제조업 분야(Green Field) 분야여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DI 그룹은 이번 협약에 따라 우선 충남도와 보령시로부터 관창산업단지 38만7,100여㎡(11만 7,300평)를 임대방식으로 제공받아 3개월 이내에 외국인 투자신고와 입주계약 체결 등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와 의무사항을 이행한 뒤 하반기에 착공해 2009년부터 공장을 가동한다.

또 도내 다른 지역에 2010년까지 66만여㎡(20여만평) 규모의 자동차 부품 생산시설을 설치,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와 보령시는 공장 건립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원활한 공장 가동을 위해 전기, 가스, 수도 등과 같은 부대서비스 시설도 지원하는 한편, DI 그룹의 외국 인직접투자(FDI)가 각종 지원규정에 충족될 경우 외국인투자지역(FIZ) 지정 등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DI 그룹이 충남을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도록 DI 그룹이 공장을 운영하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파라모노프 회장은 “DI 그룹이 충남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은 열심히, 그리고 빨리 일하는 한국인의 성실함과 자동차와 관련한 높은 기술력 등 멋진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번 러시아 DI 그룹의 외자 유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등 적극적 전략을 구사했다. 이를 통해 직접 고용만 4,000명 이상의 효과를 거두는 등 괄목할만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물론, 향후 충남이 러시아 자본 유치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는 2012년까지 공장이 가동되면 직접 고용만 타가즈 2,600여명, 협력사 1,500여명 등 4,100여명에 달하고, 향후 200여개의 부품 업체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타가즈에서 생산하고 있는 코란도와 무쏘의 부품 각 10억 달러, 기타 부품 4억 달러 등 연간 24억 달러 상당의 수출 증대 효과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연간 40피트 규모의 컨테이너 5만개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컨테이너 1대당 50만원의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때 물류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연간 2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선적 항구 활성화 및 이에 따른 물류 기업 유입 효과, 직·간접 고용 증대에 따른 서비스산업 활성화, 경제활성화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도는 더 나아가 DI 그룹의 입주에 따른 물동량 증가 등을 적극 활용해 정부가 물동량 부족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보령신항 건설을 추진한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이번 DI 그룹의 외자 유치를 교훈으로 삼아 러시아 자본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마련,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방향으로는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행정도시~ 용인~하남을 연결하는 제2경부선과, 교통체증이 심각한 기존의 서해안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홍성~평택간을 연결하는 제2서해안선을 하반기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충남내륙 균형개발을 위하여 부여~아산간 고속도로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와 함께 남북방향의 4개축을 형성하고

동서축으로, 당진~천안고속도로와 함께 장기적으로 서천~논산~금산(대전)으로 이어지는 고속화도로와 보령~공주간 고속도로를 추진계획이며, 충남지역을 X축으로 연결하는 당진~대전과 서천~공주간 고속도로는 내년 추석 전에 조기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도확장사업도 시행 중에 있는 40개 지구 411.8km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국도 4차로율을 현재 51%에서 목표연도인 2017년에는 82%로 신장시켜 나가면서

보령~부여(국도제40호선) 및 추부~진산(국도제17호선), 국도제77호선 안면도 구간과 유구~아산간(국도39호선) 조기착수와 함께 덕산~합덕간(국도제40호선) 국도지정을 추진 한다

국가지원지방도는, 미 개설구간인 천안 병천~입장(국지도57호선) 및 서천 화양~양화(국지도68호선)와 국지도 승격이 예정되어 있는 청양~신양간(국지도70호선)을 조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충청남도가 직접 관리하는 지방도는, 교통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서산~창리/도고~인주 등을 4차로로 확장계획이며 당진 송산지방산업단지 및 공주 탄천산업단지와 서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진입도로도 국비를 확보하여 확장할 예정이다

또한, 보령~태안~서산~당진을 연결하는 서해안산업관광도로(134km)와 금강하구~부여~공주~연기로 이어지는 금강변 산업관광도로(239km)를 건설하여 산업/관광을 지원하는 도로로 활용

---

하면서 아름다운 도로를 건설 한다는 계획과 함께, “쾌적하고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과 위험도로 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의 조기실현을 위하여 국가가 담당하고 있는 고속도로 및 국도/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지방도는 현재 용역 중에 있는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해 추진하면서 투자재원 다변화를 위하여 BTL(임대형 민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 등 민간의 유희자본을 유치하여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충남도 전 공무원이 홍보요원 된다

— 도정시책 성공을 위한 실무가이드인 「도정홍보 매뉴얼」발간



충남도가 각종 도정시책 추진시 홍보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표준안이 없어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도 홍보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시책 성공을 위한 홍보 실무 가이드인 「도정홍보 매뉴얼」 책자를 1,000부를 제작하여 5월 27일 전 실·과·사업소에 배부했다.

도정홍보 매뉴얼에는 ▲공무원의 홍보 수칙 ▲홍보실무가이드 ▲홍보 계획수립 요령 ▲언론 인터뷰 요령 ▲브리핑·연설문 작성요령 ▲언론모니터 요령 등 실무지식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15쪽 분량의 포켓용으로 제작되어 휴대가 간편하고, 브리핑 및 연설문 작성요령과 홍보 계획 수립 요령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경험이 부족한 신규공무원들에게 좋은 교육 교재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은 “정보화가 진전 될수록 정책홍보의 비중은 커져가고 있으며, 정책과 홍보는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주민들의 동의와 지지와 받을 수 있다” 며

“정책 입안시부터 홍보를 통해 여론을 진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공무원들이 홍보 기법을 충분히 익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었으니 전 직원이 숙지하여 줄 것” 을 당부했다.

# 忠清南道, 日 나라현과 ‘문화관광 교류협정’ 체결

— 백제와 아스카시대 옛 명성에 걸맞는 문화교류 활발 기대



충남도는 6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완구 도지사와 아라이 쇼고 나라현 지사, 양 도·현 박윤근·우에노 준이치 문화관광국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관광 교류협정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서 ▲양 도·현의 문화사업 교류 적극지원 ▲양 도·현의 문화·관광·체육 등 행사 지원·협조 및 홍보활동에 주력 ▲양 도·현에 위치한 문화연구기관·박물관·도서관 등 전문기관 간의 학술교류와 공동연구 등 추진 ▲협정체결 이행 위해 ‘실무협의회’를 공동으로 구성·운영기로 합의하였다.

도에서는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실무 협의회’를 구성되면 ▲제54회 백제문화제 홍보 및 참



관단 파견 요청 ▲2010 대백제전 과 평성천도 1300년 기념사업의 홍보 및 교류협력 ▲2010년에 옛 백제의 해상로인 나라현~제주도~당진~상해 구간에 해상 백제로드 크루즈 운항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6월에 제의했던 ‘2010 대백제전’ 과 ‘평성천도 1300년 기념사업’ 협력에 대해 아라이 쇼고나라현 지사께서 흔쾌히 승낙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며 고마움을 전하면서

“이번 교류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 도·현은 백제와 아스카시대 옛 명성에 걸맞는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아라이 쇼고 나라현 지사 등 일행 55명은 협정서 체결식 끝나면 아스카 문화가 전래되었던 백제문화의 본향인 부여 백제역사재현단지와 역사문화관, 정림사지 등 백제유적지를 답사하고 5일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충남도와 나라현은 지난해 6월 13일 나라현에서 협력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1년동안 총10회에 이르는 교류와 협의를 통해 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

## 道, 전국 No.1 브랜드 ‘토바우’ 육성

－ 올부터 2012년까지 368억 투입, 전국 도매시장 출하두수 17% 점유 목표

충남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의 파고를 넘기 위해 충남 한우 브랜드인 ‘토바우’를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토바우 5개년 중장기 도약·정착계획’을 6월 13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금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368억원을 투자하여 ‘토바우’를 전국 넘버 원(No.1) 한우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현재 830여호에 3만9천여두 규모를 2012년까지 1,200여호에 10만여두 규모로 늘려 나갈 계획이며, 브랜드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여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것이다.

또, 안정적인 사료공급을 위해 올해 41억원을 투자, 토바우 전용 사료공장을 신설·운영하고, 브랜드 참여 한우 전 두수 혈통등록 및 암소 핵군우 1만두를 확보하고, 양질의 조사료와 우량송아지 생산·공급을 위해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13개소와 송아지 생산기지 13개소를 조성하고 철저한 사양관리를 통하여 전국 최고의 고급육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불거진 안전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신뢰 받을 수 있는 명품브랜드로 육성시키기 위해 금년중에 ‘쇠고기이력 추적시스템’을 도입·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밖에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현재 17개 전문판매장을 2012년까

지 400여개 전문판매장·전문식당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공 및 물류유통기지 5개소를 운영하여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울러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충남도는 중장기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에는 10만여두를 사육하여 연간 1만3천여두를 출하하게 되어 지난해 전국 도매시장 출하 두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국 점유율 17%를 차지하는 전국 제일의 명품브랜드로 도약하는 한편, ‘토바우’가 우리나라 한우산업을 이끌어 나갈 구심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완구도지사, 日 간사이~청주공항 직항로개설 이끌어 내

- 11일, 하시모토 오사카부지사(大阪府知事) 만나 직항로개설 전격 합의
- 직항로 개설로 2010년 대백제전에 일본관광객 5만명 찾을 것으로 기대



청주국제공항과 일본 간사이(關西空港) 국제공항 간 직항로 개설 논의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백제문화제 홍보 등을 위해 일본·동남아를 방문중인 이완구 충남지사는 일본순방 첫째날인 6월 11일 하시모토도오루(橋下 本徹·38) 일본 오사카부(大阪府) 지사와 만나 중부권 거점공항이 청주공항과 일본 관서지방 거점공항인 간사이공항 간 직항로를 개설하자는 데 합의를 이끌어냈다.

1997년 국제공항으로 개항한 청주공항은 지난해 100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성장하고 있다. 청주공항은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선양(瀋陽) 등 중국노선과 홍콩 등

에 국제선을 띄우고 있어 간사이공항과의 직항로가 개설되면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대공항을 거듭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주공항이 '24시간 개방 자유공항'으로 지정될 경우 24시간 공항인 간사이공항과의 연계도 탄력이 받을 전망이다.

이 지사는 “충청권 주민들이 오사카를 방문하려면 인천공항까지 3시간, 대기시간 2~3시간을 포함해 5시간 이상을 허비한다.”며 “청주공항을 이용하면 간사이공항까지 2시간30분~3시간이면 충분하다”며 직항로 개설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순방일정을 마친 뒤 귀국해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를 방문, 청주공항~간사이공항 직항로 개설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하시모토 지사는 “간사이공항은 일본의 여러 공항 가운데 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건설된 공항”이라며 “일본 유일의 24시간 공항인 간사이공항이 청주공항과 직항로를 개설한다면 공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충남도는 청주공항과 간사이공항간 직항로가 개설되면 2010년 충남 공주·부여에서 개최되는 대백제전에 5만여 명에 달하는 일본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충남도, 국가균형발전사업 전국평가 1위

- 내년에 인센티브 지원받게 돼, 명실상부한 전국 모범도 위상 과시

충남도가 행정자치부 주관 '2007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충남도는 내년도 시도별 균특회계 예산 배분시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돼, 지역균형발전을 실천하는 명실상부한 전국 모범 자치단체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과시하게 되었다.

이번에 실시된 국가균형발전 평가는 2007년도 균특회계 추진 사업실적, 자체평가 절차 이행 등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정책관련 전국단위 종합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균특회계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계정사업에 55개 사업 7,060억원, 지역혁신계정 사업에 24개 사업 1,167억원 등 모두 79개 사업 8,227억원을 투자하였고,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및 규칙 제정,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전담부서 균형발전팀 설치등을 추진하여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또한, 도는 교수, 연구원, 전문가 등 7명이 참여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운영하여 균형발전사업 하나하나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하는 등 사업추진의 효과성에서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도는 내년에도 국가균형발전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충남도가 우리나라 균형발전의 중심이 되는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도정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충발연, 2008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4월 4일 오전 10시 30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충발연 이사진과 김용웅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7년 사업결산 및 2008년 정관·직제 규정·인사관리규정 등의 개정, 임원 선임 등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지난 3월 공주시 금흥동에 위치한 신청사로 이전했으며 충남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 공동연구는 물론 미래발전 구상을 위한 창의적 정책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 한국의 실리콘벨리, 충청권 유치 총력



대덕특구(대전권)~오송·오창(청주권)~세종시(공주·연기권)를 중심으로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충청권의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충청권공동발전연구단(단장 육동일)은 4월 15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이완구 충남도지사, 김문규 충남도의회위원장, 학

계 전문가, 그리고 3개 시·도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구축”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새 정부의 핵심 공약중의 하나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안”은 기초과학연구시설 및 연구소 건설, 과학비즈니스 모델 확립 및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과학·예술·문화·산업의 국제적 융합도시 완성 등 총 3단계로 시행되는 도시 계획을 기반으로 충청권을 동북아 최고의 첨단기술이 집약된 과학중심도시, 즉 한국의 실리콘벨리로 집중 육성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중이온가속기 시설의 세계적 사례”로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원자력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정부가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구축하고자 하는 가속기는 중이온가속기로 경주에 건설중인 양성자 가속기나 포항의 방사광가속기와는 규모, 이용목적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면



트 구축의 중요한 유인책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선근 교수는 “가속기가 우리나라 기초과학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중요한 연구시설임에는 틀림없다.”면서 “가속기 설립이 단기간의 사업 비즈니스와 연결되지 않을 것이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격에 맞는 가속기 종류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과학자와 관련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충청투데이 임호범 기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충청권의 자생력과 필요성에서 제기되지 않고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시급히 추진되는 것은 자칫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될 경우 사업의 당위성을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려 벨트 구축의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2주제 발표자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박상철 교수는 “충청권은 전국적으로도 과학기술부문 투자와 활발한 경제활동 지역으로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향후 초광역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협력 체제, 지역 간 능동적 협력과 적극적 대응이 필수적이다.”라면서 충청권의 국제과학비즈니스 구축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청테크노파크 김학민 원장은 “3개 시·도(지역)의 역할과 분야 및 산업적 융합의 문제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시행착오를 다시 한번 겪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넣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개념을 접목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통해 중복투자를 피하면서 지역별 특성과 기능을 연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한남대학교 강병주 교수는 “충청권은 서해안 개발의 연계축으로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내륙중심부는 서울 등 수도권내 거대 도시축과 경부축, 호남축을 잇는 도시개발 및 간선교통축의 중앙에 입지하여 도시개발 및 교통·물류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하고,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새로운 국제생산 및 교역중심지로 등장하는 등 비즈니스에 적절한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충청권의 벨트 구축 타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충북대학교 안성호 교수는 “성공적인 벨트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하고 벨트 구축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하면서 벨트 구축이 갖는 구체적 의미와 효과에 대한 홍보를 강조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반드시 충청권에 유치되어야 함을 한번 더 다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3개 시·도는 벨트의 충청권 유치 타당성을 널리 알리고, 벨트 유치와 관련한 내·외부적 갈등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공주시, 현안과제 대안 모색 워크숍 개최



2010년 대백제전 개최를 비롯한 공주시의 현안과제 대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공주시는 충남발전연구원과 함께 4월 22일 오후 4시부터 이준원 공주시장, 이동섭 공주시의회장,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교수와 전문가,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시 발

전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충남발전연구원이 충남 16개 시·군을 돌며 매년 개최하는 현안과제 해결 모색을 위한 세미나의 일환으로써 “2010 대백제전을 통한 공주시 관광인프라 구축 방안”, “지방중소도시의 대기업 유치방안”, “공주시 환경색채 정립방안”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배재대학교 박근수 교수는 “2010 대백제전은 공주시에서 특히 부족한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전제한 뒤 “체계적인 행사준비를 위해서는 준비팀을 법인화하여 민간전문가가 행사를 전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야만 체류형관광객을 위해 조성해야 할 신규 숙박촌이나 기존 숙박인프라를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체계적

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사가 끝난 후의 지속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공주시의 도시경관 정비사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충남발전연구원 이충훈 연구위원도 “공주시의 주거지구는 저채도와 고채도가 혼재된 주황과 회색 중심의 무겁고 수수한 이미지가, 특히 상업지구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고채도의 색상을 부문별하게 사용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주시의 환경색채 디자인 컨셉을 Memory(기억)와 Transition(변화)으로 설정하고 역사와 문화, 전통이 살아 숨쉬는 현재와 미래로 연결되는 흐름의 미학을 정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원대학교 소진광 교수는 “지방중소도시는 ▲저렴한 경제공간 조성 ▲관리기능 위주의 기업선별 ▲인접 지역의 기업환경 및 입지 기업의 생산조직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 ▲자녀교육여건 문화 및 여가활동 시설과 프로그램 등 소비자로서의 기업 여건 개선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연결망, 지역사회 참여 등 사회적 자본이 충분해야 대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이다”고 말하면서 “공주시의 편리한 교통망과 세종시와의 연계발전 등을 고려할 때 대기업 유치 가능성은 있지만 저렴한 단지 조성 및 사회적 자본 등의 단점을 보완하는 일이 과제다.”라고 지적했다.

공주시 한 관계자는 “공주시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0 대백제전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 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충발연, 찰리 울프(C. Wolf) 소장 초청 특강 가져

-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열띤 발표와 진지한 토론 열려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4월 24일 오전 10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충발연 및 충남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찰리 울프(C. Wolf) 미국 사회환경연구소장을 초청,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과 환경영향평가”라는 주제로 특강 교육을 실시했다.

울프 소장은 지난해 충발연과 함께 장항산단 갯벌조사에도 참여했던 환경전문가로서 국제영향평가학회장을 역임했다.

## 충남도,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 방위산업 생산기반 취약, 집적된 국방산업기관의 시너지 끌어내야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국방대의 논산 유치라는 성과와 함께 충남을 국방과학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충청남도는 충남발전연구원과 함께 4월 29일 오후 3시부터 충발연 대회의실에서 충발연 및 학계 전문가, 그리고 충남도와 시·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충발연 이관률 박사는 “세계적으로 방위산업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은 물론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충남은 우리나라 최대의 방위산업의 집적지로서 방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조건인 신속한 의사결정,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 안정적인 지역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면서 충남지역이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에 있어서 국내 타 지역에 비해 절대적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박사는 또 “충남에 국방과학클러스터가 효율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국방과학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한 법률적 제도 정비와 국방산업 국가산업단지의 조성, 국방기술상업화센터 및 국방복합기술센터의 설립, 국방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방산업대학원 개설, 그리고 세계군 문화엑스포와 연계한 국방문화투어리즘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 박휘락 교수도 “방위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군대에서 소요를 도출하는 단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방위산업체는 군대가 필요로 하는 무기와 장비, 물자 등을 적재적소에 생산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박 교수는 “충남은 군사이론적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으로써 타 지역에 비해 잘 갖춰져

있는 기반 시설을 활용하고 방위산업체와 연계한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등 군-민-관의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세미나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리고 지역 대학 교수 등이 참석하여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총발연 관계자는 “오늘 세미나에서 제시된 내용을 보완·종합하여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의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 금산군, 5대 테마 14개 부문 발전 계획 나왔다

- 29일, 금산군 종합발전 중기계획 최종보고회 가져



“인삼”, “문화”, “환경”을 중심 테마로 「생명·문화금산」이라는 비전을 채택한 금산군의 종합발전계획이 제시되었다.

29일, 금산군은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금산군 종합발전 중기계획」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금산다락원에서 가졌다.

본 발전계획은 기 수립된 「AGENDA 2015」 장기계획 추진을 뒷받침하고,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향후 5년(2008~2012)간의 금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이번 중기계획에서 금산군은 「NEW CHANGE! 금산 - ‘새로운 도약, 빛나는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품격 높은 문화·관광(Culture)’, ‘화합·조화를 이루는 정주지(Harmony)’, ‘쾌적한 어메니티 환경(Amenity)’, ‘아름다운 금수강산(Nature)’, ‘인삼·약초 건강도시(Ginseng)’, ‘활력 넘치는 경제사회(Economy)’를 내세웠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5대 테마 14대 부문으로 나누어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세부시책 및 개발 사업을 제시하였는데, ‘금산인삼테마파크 조성’, ‘금강변 건강체험관광지 조성’, ‘금산인삼 3G(금산인삼세계화) 프로젝트’, ‘금산 New-Town 조성’, ‘금산 해피랜드(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등 금산군의 오랜 숙원사업이거나 새롭게 금산군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금산군 전체를 4개의 개발권역으로 구분하여, 금산읍, 금성면은 ‘중심거점개발권’으로서 금산의 중심거점기능을 담당하는 개발전략을, 추부면, 복수면, 진산면은 ‘대도시근교개발권’으로서 대전권 연계 및 대도시 근교지역으로서의 수요에 대응한 개발전략을, 군북면, 제원면, 부리면은 ‘금강레저개발권’으로서 금강의 수변생태자원과 산림자원을 이용한 개발전략을, 남일면, 남이면은 ‘산림휴양개발권’으로서 산림휴양자원 및 기타 관광자원을 이용한 개발전략을 제시하였다.

〈표〉 금산군 4개 개발권역

구분	해당 지역	주요 개발 전략
중심거점개발권	금산읍, 금성면	금산의 중심거점기능을 담당
대도시근교개발권	추부면, 복수면, 진산면	대전권 연계 및 대도시 근교지역으로서의 수요에 대응
금강레저개발권	군북면, 제원면, 부리면	금강의 수변생태자원과 산림자원을 이용
산림휴양개발권	남일면, 남이면	산림휴양자원 및 기타 관광자원을 이용

금산군 관계자는 “이번 중기계획은 새 정부의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에 맞춘 전략사업을 제시함으로써 국비재원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본다.”며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박동철 금산군수, 황장순 금산부군수, 금산군 주요 실과장, 관계사업소장, 그리고 충발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 충남 '서해안 관광 되살리기' 제언 봇물

- 전국 관광학과 교수, 전문가 및 관광 관계자 등 200여명 참석



유류피해 극복과 서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서해안 관광활성화 심포지엄」이 충청남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및 충남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관광학회의 주관으로 5. 30(금) 태안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 제1부에서는 동아대학교 황영현 교수가 "관광목적지의 환경재

해 및 사고의 극복사례"를, 한국문화관광연구소 오순환 소장이 "친환경에서 즐거운 관광지로의 이미지 전환을 위한 과제"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희수 책임연구원이 "관광 산업적 측면의 영향과 전망"을, 충남발전연구원 이인배 박사가 "친환경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 방안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제2부에서는 박석희 경기대학교 교수 진행으로 제1부 발제자 4명과 함께 교수, 연구원 및 공무원 등 4명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전국 으뜸 여름 휴가철 휴양지로 각광을 받아오던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은 지난해 12월 7일 뜻하지 않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로 인해 최악의 해양 오염 피해를 입은바 있으나,

이후 전 국민의 따뜻한 온정과 130만 여명의 자원봉사활동으로 해안가 백사장 및 수질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최근 전문연구기관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접적 피해를 입었던 만리포 등 일부 해수욕장에 대한 해수와 모래층 성분을 조사한 결과, 개장에 문제가 없는 해수욕장 수질 기준인 1급 수질로 판정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태안 등 충남 서해안 지역은 상당수의 잠재 관광객들에게는 여전히 해양 유류 유출사고 오염 지역이란 부정적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어 온 국민이 예전처럼 즐겨 찾는 관광지로 거듭 태어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번 심포지엄은 유류 피해지역이란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관광 산업 붕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다수 주민이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전국의 교수 및 관광 전문가 등의 학술적 제언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전국 관광 관련 학계 명사들의 서해안 유류 피해 지역의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에서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각종 관광 활성화 정책 제언을 도정에 적극 반영할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 유류 피해 지역이 환경 대재앙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제적인 관광 휴양지로 거듭나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 2008년 상반기 공개경쟁 신규연구원 임용 및 임명장 수여

충남발전연구원은 2008년 상반기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최종 합격한 2명의 신규연구원을 임용하고 6월 2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부서별 신규연구원은 다음과 같다.

		
성명	임준홍	정옥식
직급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부서	도시계획연구팀	환경생태연구팀
연구분야	도시계획	야생동물

## 충발연, 개원13주년 기념식 및 체육행사 가져



충남발전연구원은 6월 13일(금) 연구원 대운동장에서 김용웅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원 개원13주년 기념식 및 체육행사”를 가졌다.

김용웅 원장은 기념사에서 “연구원의 13번째 생일을 맞아 충남 도민과 이완구 충남도지사과 16개 시·군에 감사드린다.”라고 언급하면서 “연구원의 역량 강화와 창의적 연구 방

법을 통해 충남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도시계획연구팀 조봉운 박사가 10년 근속 감사패를 받았으며, 이어 벌어진 체육행사에서는 축구, 발야구, 계주 등 운동 경기를 통해 연구원의 화합을 다졌다.



## 충발연, 창의적 싱크탱크를 향한 혁신 마인드 고취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문건 원장 초청 특강 교육 가져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6월 17일 오전 10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충발연 및 충남도산하연구기관, 대전발전연구원,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문건 원장을 초청, “창의적 싱크탱크를 향한 연구원 혁신 전략”이란 주제로 특강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하 ‘시정연’)은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출신인 정문건 원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정연의 조직 진단 및 연구원 혁신을 위한 개편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로 타 연구기관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강에 나선 정문건 원장은 “민선 4기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미래형 조직이라는 근본적 혁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정연의 경우, 혼자하는 연구, 총체적 관리 부재, 서울시라는 틀에 갇힘, 경쟁없는 동기부여 등의 4가지 독이 문제의 근원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시정연은 ▲조직구조의 역동성 ▲연구과제 관리 시스템혁신 ▲성과창출형 평가보상 ▲인력 전문성 제고 ▲예산구조 개혁 등 5대 핵심과제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종합연구기관’이란 비전을 공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원장은 “연구원의 통합적 연구를 위해 기존 6부 체제를 2본부제로 개편함과 동시에 연구기획 기능의 강화를 위해 산재해있던 연구지원 기능을 ‘기획조정실’ 하나로 통합하여 유기적 지원체계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시정연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혁신전략을 수행하여 2011년부터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특강 교육을 개최한 충남연 관계자는 “시정연이 모범답안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각 연구조직의 혁신 의지를 모아 실정에 맞는 방향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실천해간다면 창의적 싱크탱크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충남발전연구원, KAIST 미래도시연구소와 협약 체결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이하 ‘충발연’)과 KAIST 미래도시연구소 (소장 김진근, 이하 ‘KIUSS’)는 6월 24일 오전 11시 충발연 대회의실에서 양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연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충발연의 정책적 도시계획방법과 KIUSS의 공학적 도시설계방법간의 연구 조화를 통해 보다 양질의 연구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연구성과물 및 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유관행사의 공동개최, 연구과제 공동수행 등 다양한 연구교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충발연 김용웅 원장은 “이번 협약은 국제적, 전문적 지식과 인적 자원의 공유를 통해 충남의 도시정책 연구영역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양 기관의 협력 연구를 통해 보다 창의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에서는 KAIST 미래도시연구소의 박희경 교수를 초청, “도시인프라 재생기술의 개발방향”이란 주제 강연도 함께 이어졌다.

## 충남발전연구원 신창수 사무처장 퇴임



충남발전연구원 신창수 사무처장이 6월 26일 퇴임식을 갖고 1년 5개월 몸담았던 충발연을 떠났다.

신창수 사무처장은 청양군 부군수를 지냈으며 지난해 2월부터 충남발전연구원 사무처장으로 재임하면서 성공적인 연구원

신청사 이전과 다양한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헌신하였다.

퇴임식에서 김용웅 원장은 “떠나는 신 처장님의 제2의 인생이 더욱 행복하길 기원한다.”고 말하면서 모든 연구원들의 고마움을 담아 감사패와 꽃다발을 증정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 RHRD패키지(R-pack)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는 5월 21일(수) RHRD패키지(R-pack)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겸한 최종보고회를 청양 호텔샬레에서 개최하였다.

지역내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목적으로 실시된 본 사업은 인적자원 수요공급 현황조사를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준과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의 수요와 공급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연계 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지역 내 취업경쟁력을 강화에 목적을 둔 사업으로서 지난해 7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선정되어 부산광역시 남구청, 경상북도 울진군과 함께 전국 시범사업으로 수행된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총 1,281백만원(국비 900, 도비 250, 대학 131)이 투자되었으며, 충청남도 내 총14개 대학이 참여하였다. 본 사업에 참여한 도내 학생은 2,800여명에 이르며 전공 및 취업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자격증 취득현황도 25%에 이른다. 또한 진로적성 검사, 취업 클리닉 등으로 지역 내 산업 환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보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사업을 통해 충남지역의 인적자원 수급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고, 교육프로그램 및 취업 관련 행사를 통해 지역의 청년층 취업문제의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하였다.

## “2008년도 제2차 지역경제연구회” 개최

- 충남지역혁신협의회/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충남발전연구원 공동 주최



충남지역혁신협의회는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충남발전연구원과 함께 2008년도 제2차 “지역경제연구회”를 4월 24일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2005년 대전·충남지역의 혁신관련 테마 중 경제를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대전·충남지역의 경제전문가 20명을 회원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경제연구회는 현재 3년째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올해 2월 21일 1차 연구회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연구회에서는 목원대학교 박경 교수의 “최근 일본의 지역정책 동향: 균형이나 경쟁이나”라는 주제 아래 1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고, 뒤 이어 공주대학교 김봉한 교수의 “지역 간 주택가격의 전이효과”를 주제로 하여 2주제 발표 및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연구회를 통해 대전·충남의 경제를 우리나라의 강남과 가까운 나라 일본의 사례를 접목시켜 향후 경제력 향상의 청사진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발제자의 연구에 관해서 다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시도지역혁신협의회 의장단 간담회 및 지역혁신협의회 심포지엄” 참가



지난 6월 2일 전국 시도지역혁신협의회 의장단 간담회가 서울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한국산업기술평단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균형위, 행안부, 지경부, 국토부, 시도협의회 의장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전국 시도를 비롯하여 시군구 단위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혁신협의회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부가 바뀌면서 지역혁신협의회의 존폐여부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지역혁신협의회의 존속이 확정되면서 이번 의장단회의를 시작으로 새로운 정부의 방향과 맞물려 지역혁신협의회 역할을 재정립하자는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으로 의장단 회의가 마무리 되었다.

또한 6월 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행정학회의 공동주최로 “글로벌시대,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역할”이라는 주제 아래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지역혁신협의회, 자치단체 및 광역경제권구축에 관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전국지역혁신협의회, 한국지역경제학회 및 한국행정학회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효율적으로 정부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도시재생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충남발전연구원 도시재생센터에서는 4월 23일 충남대학교 국제정심화홀에서 해외전문가를 초청, 우리나라 중소도시재생의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원장의 개회사와 도시재생사업단 임서환 단장의 축사, 서울시립대학교 김창석 교수의 “중소도시 재생 사업 추진의 과제와 전략”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일본과 호주 및 우리나라의 중소도시재생 정책과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일본 동경대학의 KIDOKIRO, Tetsuo교수는 “일본의 지방 중소도시 재생정책 및 사례”에서 일본의 중소도시의 쇠퇴의 원인을 인구감소, 고령화, 글로벌화로 인한 동경 집중, 중심시가지의 쇠퇴로 보았으며, 이를 위한 도시재생정책을 도시재생특별조치법(1998), 대형점입지법(1998), 중심시가지활성화법(1998), 도시계획법 개정(2006) 등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또한 창조도시 정책의 사례로 가나자와시, 마켓 선도형 정책의 사례인 다카마츠시, 시민 주도형 정책의 마츠야마시를 소개하였으며, 우리나라 중소도시 재생을 위해 첫째, 장기적인 도시발전 컨셉과 제완화 도시재생사업의 지양, 둘째, 광역적인 공간계획제도의 구축, 셋째,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호주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의 김진우 교수는 “호주의 도시재개발 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퀸즐랜드의 부나, 뉴 사우스 웨일즈의 쿨라, 퀸즐랜드의 미셀을 사례로 소개하였다. 이들 성공지역의 공통점은 첫째, 주민의 참여, 둘째, 민관의 공동협의 및 추진, 셋째, 지역인재 투입, 넷째, 외부전문인력의 참여를 꼽아 우리나라 중소도시 재생을 위해 시사점을 주었다.



또한, 경상대학교 김영 교수는 “한국 지방중소도시 재생정책과 사례”를 주제로 마산, 진주, 아산, 익산, 군산의 도시의 쇠퇴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들 도시를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동시에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사업계획 달성과 관리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지역협력체의 역할을 강화를 지적하였다.

한편, 토론자로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의 김영기 박사, 한밭대학교 박천보 교수, 경남대학교 서익진 교수,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이규열 사무관, 전북대학교 황지욱 교수가 참석하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재생을 위한 의견과 심도 있는 토의를 나누어 향후 중소도시 재생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 원 고 모 집



열린충남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린충남은 충남 발전에 관한 연구논문, 정책제언 등  
참신한 내용과 정보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 원고투고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 참조 (작성요령, 투고신청서 등)

| 보내실곳 | 충남 공주시 금흥동 101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정보팀

전화 (041) 840-1123 팩스 (041) 840-1129 E-mail : cdipr@cdi.re.kr